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6
결 과 자 료 집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했습니다. 2011년 제6회 포럼부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5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창의적 발상에 기초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세계 평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데 그 개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일관된 주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협력, 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창의적 연구활동, 다양한 교육 활동, 폭넓은 교류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과 협력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다자적 협력과 평화안보를 위한 이론 연구(제주프로세스), 국내외 연구학술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비롯한 국내외 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www.jpi.or.kr

[개회사] 원희룡 • 010
 [기조연설] 황교안 • 012
 반기문 • 014
 무라야마 도미이치 • 018
 마하티르 모하맛 • 021
 짐 볼저 • 024
 고축통 • 028
 엔리코 레타 • 031
 [환영만찬사] 홍용표 • 034
 [폐회사] 문태영 • 036

P E A C E

제1장 외교·안보

[세계지도자세션]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 040
 아시아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과 핵 보유 유혹 • 044
 한중일 3국의 시각: 동북아 지역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 • 046
 유엔 정보안보 GGE의 성과와 전망 • 048
 아시아태평양의 핵 안보와 안전: 오랜 쟁점과 새로운 사고 • 052
 ['평화학 창시자' 요한 갈통 대담] 격랑의 동북아, 평화 해법을 찾는다 • 054
 한반도 통일과 한미 동맹의 역할과 미래 • 056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적 리더십을 향해: 이론과 실제 • 059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와 리더십 • 065
 아시아태평양 핵군축의 재고 • 069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략 • 072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유엔의 역할 • 074
 동북아시아 해양 질서와 지역협력: '협력 상승의 장' • 078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 080
 북한의 비핵화-실천 어젠다 • 083
 새로운 한중일 협력 관계 구축 • 085

PROSPERITY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동아시아 • 088

핵확산금지조약의 미래 • 090

한반도 통일과 국제사회: 국제 언론의 역할 • 095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I • 098

[전직 외교장관 초청간담회] 동북아 신질서와 한국 외교의 과제 • 102

최근 영토·해양법 관련 판례와 동아시아: 향후 발전과 과제 • 105

제2차 세계대전 관련 미해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 모색 • 107

동아시아 대테러 대응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109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와 한미일 협력의 역할 • 111

미중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 114

동아시아 녹색 평화협력의 새로운 모색 • 117

중견국가 공공외교의 재고: 기회와 제약 • 121

동아시아 국제관계, 이론과 실천 • 128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II • 131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외교 • 137

실크로드와 아시아: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의 세계화 • 140

제2장 경제·경영

[조 케저 지멘스 회장 대담] 통일한국,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 146

[J.B. 스트라우벨 테슬라모터스 CTO 대담] 전기차가 몰고 올 생활혁명 • 149

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 • 152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155

동아시아 관광시장의 새 지평: 3국 협력을 통한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 • 158

정부혁신과 협력적 거버넌스 • 160

[한중일 CEO 라운드테이블] 상호 협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 16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치·경제적 평가 • 165

한국 뷰티산업의 글로벌화 방안 • 169

한중일 개발협력의 민간부문 참여확대 방안 모색 • 172

윤리 경영이 세계를 바꾼다 • 174

정책 통합: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지역화 • 176

새로운 자본시장의 변화와 애널리스트의 역할 • 179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가속화하고 아시아개발은행과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 182

환경기술 교류를 통한 한중 성공 비즈니스 협력 채널 구축 제안 • 185

SUSTAINABILITY

제3장 환경·기후변화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국제협력 • 190

지속가능 관광의 투자와 재정 • 192

환경·사회·경제적 편익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관광 방안 • 194

아시아-한국 간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 협력 방안 • 197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해조류 이용 전략 • 200

한중 환경과학기술 협력 전망 • 203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 205

아태지역 화산지형·해양환경 세계자연유산 발굴과 보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 210

DIVERSITY

제4장 여성·교육·문화

[신문 콘서트 2016] 청년세대의 오늘과 내일 • 214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과 협력적 리더십 • 216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 219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대학 • 221

여성역량강화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 224

[청년리더 컬처서밋]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내가 꾸는 꿈 • 228

[아티스트 패널토크] 세계적인 예술로 승화되는 제주다움을 찾아서 • 231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 • 234

GLOBAL JEJU

제5장 글로벌 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 발전 방향과 인프라 조성 방안 • 240

아시아 물 산업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 • 243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퀴바디스? • 245

HIGHLIGHT

제6장 제주포럼 이모저모

화보 • 250

국가별 참가자 등록 현황 • 260

행사 프로그램 • 261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6

2016. 5. 25^수 - 27^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외교원,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연수센터, 국제개발협력학회, 싱가포르 난양공대, 뉴욕 뉴스쿨, 일본 타마대학, 대한국제법학회, 유엔글로벌콤팩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빅뱅엔젤스, 세종연구소, 월드컬처오픈, 유엔거버넌스센터, 유엔협회세계연맹,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한라대학교, 인간개발연구원,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경제매거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조류학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한중지역경제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행정연구원,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 KB국민은행, 대한항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라산소주



[개회사]

공존 가치 담은 '평화의 실크로드'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해 헌신해온 귀한 손님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님,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님,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님, 고축통 전 싱가포르 총리님,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님, 그리고 제주포럼을 빛내주시는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1년 첫발을 댄 제주포럼은 이제 아시아의 미래를 개척하는 공공 외교포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주포럼의 논의 주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 현실 극복을 위한 한반도 평화,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를 기점으로 경제, 문화, 관광, 여성, 환경, 에너지 등으로 그 지평을 확장하여왔습니다.

여기에는 불행한 역사의 유산을 극복하고 21세기 평화의 관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인들의 노력은 물론, 제주에서 평화와 번영의 담론을 이끌어온 글로벌 리더와 석학,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제주포럼 대주제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입니다. 아시아는 매우 다양한 나라와 민족, 문화, 종교, 역사,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위기와 잠재적 갈등 요소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실업률과 빈부격차, 초국가적 테러 위협 등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입니다. 지속가능한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전 지구 수준의 위기 극복에 더욱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협력은 '공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등 모든 주체들이 동등하게 존재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공존



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존이라는 질서와 가치가 공유될 때 여러 차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공존의 질서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우리 제주도는 '새로운 평화'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가 추구하는 새로운 평화는 제주의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치유의 평화', 이해관계를 넘어 다름을 모두 포용하는 '관용의 평화',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에너지 평화'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화'는 실천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평화를 확산시키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평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 평화 산업의 첫발을 땀습니다. '깨끗한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로 설명할 수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가 제주형 평화 산업입니다. 이는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논 제로섬(non zero-sum)'의 평화입니다. 모두가 '평화 이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화가 이웃의 평화를 지탱해주고, 이웃의 평화가 나의 평화를 담보해 주게 됩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서 이러한 '논 제로섬 평화'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평화의 섬 제주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물론 시행착오까지 아시아 나라들과 함께 공유해나가면서, 아시아의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 공존과 협력의 미래로 가는 '평화의 실크로드'를 만들고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도 공존, 협력이 가능한 제주의 평화 실크로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평화 산업을 실어 나르는 제주의 평화 실크로드를 제주에서 출발해 아시아 모든 국가로 평화가 녹아드는 싹틔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포럼은 평화 담론의 지적 용광로로서, 평화 실천의 인큐베이터로서, 평화 자원을 만들어가는 평화 기업가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협력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머무시는 동안 제주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매력에 흠뻑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조연설]

새로운 아시아의 시대를 향하여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리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리는 제11회 제주포럼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님,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님,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님, 고축통 전 싱가포르 총리님,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과 문태영 제주평화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주포럼의 주제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입니다. 아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비중과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 간 협력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에는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60%,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등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도 매우 활발합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증대로 아시아의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소득불균형, 그리고 역내 국가 간 인프라 격차 등과 같은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영토·해양 이슈를 둘러싼 역내 갈등도 여전하고, 전략적 이익의 충돌, 지역안보 구도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경쟁과 견제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테러·난민·전염병 등 초국경적인 위협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역내의 지정학적 지형 변화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과 협력을 미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이 국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호혜적으로 공존해나가려는 상생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올해 제주포럼의 주제인 '협력적 리더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신뢰외교(Trustpolitik)'를 통해 국제사회에 협력적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협력은 항상 상호 신뢰의 수준과 같이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뢰외교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의 외교 지평을 전 세계로 넓혀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의를 거부하는 북한의 행태와 선행을 바꾸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 진정한 신뢰 프로세스를 열어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넘어 우주 협력 등 뉴프런티어를 개척하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며, 대북 압박외교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양국 간 가장 어렵고 힘든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자(兩者)뿐 아니라 3자(者), 소다자(小多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역내 협력을 이끌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복원시킨 데 이어 올해는 북극, 교육, 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역내 연성 이슈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여와 리더십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보답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교육, 보건, 농촌개발, 그리고 평화유지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방문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며칠 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 외교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의장국이자, 녹색기후기금(GCF)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이 어김없이 움직여야 정확한 시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시계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시계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아시아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제주포럼의 개막을 축하하며, 이번 포럼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화합과 협력과 번영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조연설]

세계 진보, 포용과 협력에 달려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따뜻한 환영에 감사 드립니다. 제주포럼에 초청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포럼에 다시 참석하게 돼 기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정부 고위인사, 재계와 학계 인사, 활동가, 특히 젊은이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주포럼을 주관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이 창립될 때 나는 대한민국 외교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설립 취지는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건설적인 참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을 떠날 때 나는 한국민들에게 한국을 세계로, 세계를 한국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늘 한국, 넓게는 아시아의 유산에 자랑스럽게 의존해왔습니다. 아시아 지도자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감사 드립니다. 아시아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라는 강력한 대륙은 세계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행동, 지역 협력, 한반도 안정,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이 그것입니다.

서로 연관된 이들 이슈를 잘 다뤄나가는 것은 아시아인은 물론 세계인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중 평화와 인간과 지구를 위한 글로벌 행동이 우선입니다.

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와 유익한 양자회담도 했습니다. 정상회의는 위기 상황 대응을 개선하는 데 참여할 것을 확고히 다짐하였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보장을 개선하고 인도주의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타협'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정부 실패부터 인권 유린까지 많은 요인들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3분의 1이 아시아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풍력, 태양광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후변화 현상을 해결하는 리

더인 셈입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도 태양광발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곳곳의 기업들이 혁신적인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협약이 발효되려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5%에 해당하는 55개국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177개국이 파리협약에 서명했고 현재 1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 각국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파리협약 비준을 서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강력한 경제성장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5년까지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빈곤층의 3분의 2인 4억5000만 명이 여전히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물과 용지 부족, 환경오염 등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2030년 어젠다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의 진보는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유엔은 아시아의 국제사회 기여를 고맙게 여깁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한 나라 상위 5위 중 4개국은 아시아 국가입니다. 이들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계속 경제적 활력과 영향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진보와 민주화 진전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많은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민주 체제로 평화적인 이행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얀마 총선은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다인종, 다종교 민주 체제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미얀마의 새 지도부는 이제 전면적인 인권존중과 함께 차별 극복, 평등 보장, 포용적 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엔은 앞으로 계속 아시아의 민주적 개혁을 지지할 것입니다.

글로벌 행동은 오늘 내가 제시하는 둘째 주제인 지역 협력과 밀접히 관련됩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같은 지역 협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고위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중일 3국 간 7차 정상회의는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열려야 합니다.

유엔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긴밀히 손잡고 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시아 전역에 평화와 번영을 확산시키는 일에 유엔은 여러분의 파트너입니다. 진보는 도전에 맞섬으로써 이뤄집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같은 영토, 영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관련국들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관련국들은 유엔 현장을 포함해 보편적으로 공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나는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 선언' 원칙 아래 행동수칙에 관한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해왔습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사이버 테러, 기타 안보 위협이 아시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하나의 지역으로 이에 대응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시아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아시아 대륙이 과거에 잃어버린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아시아는 오래된 불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영토 분쟁도 이제 합의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역사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불행했던 과거사 문제들을 정확하고 겸허하게 다뤄야 미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다른 대륙에서 봐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유럽은 관련 합의와 기구 조성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아시아 대륙에는 급속히 성장 중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깊은 대화와 참여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협력을 넓히고, 파트너십을 키우고, 협업을 굳건히 하기 바랍니다. 폭력적인 충돌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패배한 세대와 더 심한 빈곤, 깊은 비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국심이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한국인이지만, 글로벌 시민이기도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오늘날 지리적 국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글로벌 안목을 갖춘 글로벌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런 정신이 진보를 이끕니다.

글로벌 행동과 지역 협력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이곳 한반도의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최근 우려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결연히 대응하였습니다.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나는 결의안 이행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사회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세계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자국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과도한 군비 지출이 계속되는 동안 어린이들은 학대받고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잘못된 일들을 시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화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합니다.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어떤 방식이든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지속적 평화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주제인 인권과 관련해 아시아에서도 진보가 이뤄져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지역 단위에서 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제 지역 협력이 인권 문제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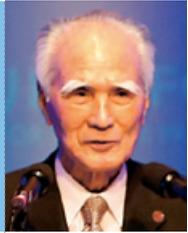
진보가 이뤄지긴 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아세안 정부 간 위원회 설립과 아세안 인권선언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아시아가 인권 유린에 맞서 종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시민사회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여전히 민주적 공간이 축소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비관용과 혐오 발언, 폭력사태가 늘어나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종교적 소수자, 이민자, 난민,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포용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파키스탄은 수십 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해온 나라입니다.

전 세계 이주민 집단거주지역에 많은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힘든 직종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기업, 연예계,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해외 아시아인들은 타인을 포용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합니다. 이민자와 난민이 아시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이주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요망합니다.

나는 아시아적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마추어 서예가로서 나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문구를 자주 연습하곤 합니다. 그 뜻은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행동한다"입니다. 물은 지혜와 유연성, 소프트파워를 상징합니다. 아시아는 이런 귀중한 특성을 널리 확산시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세계 전 인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합니다.



[기조연설]

화해의 첫걸음은 진정한 사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서로 협력하며 지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과거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을 통해 전쟁 국가에서 평화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만, 그에 걸맞은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전후 50년이 되던 해에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저는 ‘무라야마 담화로 알려진 총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책을 잘못 펼쳐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라는 역사인식을 표명하였습니다.

일본이 대만을 청나라에서 빼앗은 것은 1894~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이며, 한국을 점령하고 강제적으로 병합한 것은 1904~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무라야마 담화의 반성은 청일·러일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50년간 일본의 전쟁 시대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제가 총리를 사임한 후 일본의 국시(國是)로서 자유민주당의 역대 총리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민주당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 병합 100년 총리 담화를 발표하여 식민지 지배 반성을 한층 더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말 총리가 된 아베 신조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 목표를 표방하며 등장하여 국내외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저도 매우 우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베 총리도 무라야마 담화 계승을 표명하기에 이르러, 작년 8월에 전후 70년 아베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베 담화는 제 담화보다 훨씬 길며 복잡합니다. 아베 담화는 “세계 대공황 이후 세계의 대세를 따라잡지 못한 일본은 만주 사변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어 갔다. 진로를 잘못 잡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주사변 이후 15년 전쟁에 대한 반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담화는 러일전쟁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의 용기를 복돋웠다”고 평가하고,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았습니다. 다시 말하여 청일·러일 전쟁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 것이므로, 대만,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베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를 절반 정도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한반도 사람들에 대한 배려 부족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계속해서 일본의 국시(國是)로서 그 생명력을 이어나갈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은 원칙적인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속죄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지난 25년간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 해결이 촉구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2012년 총재선거 때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고노 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출마했습니다. 때문에 아베 총리의 의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한일관계가 붕괴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대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고 10억 엔을 한국정부에 기탁하는 것으로 하여, 지난해 12월 말 한일 외무장관 합의 발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합의가 확실히 실행되어 한국의 피해자와 운동단체에 받아들여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의 화해를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월 28일 외무장관 회담 합의 발표로 표현된 아베 총리의 사죄 의지를 편지로 작성하여, 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의 총리 시절 내각에서 마련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피해자 대부분이 거부한 아시아여성기금에서도 하시모토, 오부치, 모리, 고이즈미 총리가 자필로 서명한 ‘사과의 편지’를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리의 사죄 의지를 표현한 편지를 주한대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행으로 상당수 병상에 계신 피해자 분들께 가슴을 울리는 사죄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전에 기시다 외무대신을 방문하여 이러한 취지를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논의와 양국 정부 협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50년 전쟁이 심각한 상흔을 남긴 이 지역에서는 그 후에도 약 30년간 중국 내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40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이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인공위성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입장은 자꾸 악화되고 있으며 제재는 더욱 강해지고 있으나 사태는 계속 악화되고 북한의 핵병기는 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판단 착오를 범할 경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연설]

전쟁을 범죄로 여기는 것이 곧 문명

마히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이 포럼에 연사로 초대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제주포럼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전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해결을 명목으로 서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살인을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살인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전쟁을 범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몇 백만 명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7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여기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범죄라면, 그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레이시아에서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자는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전쟁이 갈등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을 보노라면, 우리는 범죄에 대한 진보적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에서 전쟁을 범죄로 간주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영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범죄로 여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지난 7000년간 전쟁을 해왔고 오늘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 모든 공동체가 노예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노예제는 범죄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다른 형태로 노예제가 존속할 수도 있지만, 노예제는 이제 범죄입니다. 세계가 노예제를 범죄로 인식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노예제보다도 나쁘기 때문에 전쟁도 범죄라는 사실은 세계가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전쟁의 결과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황폐화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국가 간 분쟁이 생기면

지금은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미사일이 일본에도 날아오게 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일본도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 북한, 일본이 치명적인 파국을 맞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충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에게 북한은 국교가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식민지 지배 청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는 무관하게, 일본은 이웃나라와 대립한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혜를 내고 북한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국교를 맺고 선린 관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일 간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어 배의 왕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이 관계를 열게 된다면 남북의 진정한 교섭에도 좋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또 하나의 문제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진정된 상태입니다만, 중국과 일본은 이 섬 주위에서 대단한 긴장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에는 도서 방위 방침이 주어져 유사시 미군의 협조 약속을 얻어내고자 아베 정부는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가 각각 할 말이 있는 만큼 영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평화 국가가 되었을 때 일본이 행한 것은 일중부전(日中不戰)의 서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무력 충돌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센카쿠 열도를 일중이 공동 개발하여 평화의 섬으로 만든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중심으로 평소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침과 생각은 일본국 헌법이 가리키는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후 70년간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길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발언을 둘러싸고 심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은 용이한 길,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각국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베이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천안문 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저에게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패권을 원하지는 않는다. 할 수 있다면 일본과 협력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매우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포럼에 참가하신 여러분과 힘을 합쳐 평화를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해법은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인륜적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살인을 피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범죄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분명히 더 큰 범죄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제3국을 통한 해결책인 조정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재판소에 갈 수도 있고 이들 세 가지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구성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 개념은 무역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세안은 유럽연합과 다릅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이웃 국가들과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런 일입니다. 이웃 국가 간 상충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어느 지역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세안을 결성한 이유로, 이제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은 서로에 대해 알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중간 해역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랜 기간 협상을 벌여 이 해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엇이든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해역을 공동 개발하여 이미 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양국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사바 주 북보르네오 연안 두 개 섬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재판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리고 국제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이 분쟁에 대해 국제재판소는 이 두 개의 섬이 말레이시아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양국이 국제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의 조그만 바위섬을 두고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협상 끝에 합의점을 보지 못해 국제재판소로 갔습니다. 국제재판소는 이 바위섬이 싱가포르에 속한다고 결정했고 우리는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과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양국 관계의 주요 이슈로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과 외교관계가 없었지만 나중에 복원되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은 살인을 하기 때문에 매우 미개한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명화된 존재라 생각한다면 어떠한 분쟁이든 그 해법으로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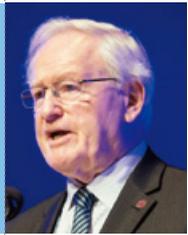
우리에게는 유엔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5개 상임이사국에 의해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원국 다수의 결정에 의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가 간 갈등은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전쟁이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 해결 방법으로 전쟁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엄청난 돈이 무기의 성능 개발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군집 상태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기가 사용된다면 많은 이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군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민간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살인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보다 더 큰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고방식이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노예제를 범죄로 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노예를 소유하지 않게 되기까지는 거의 200년이 걸렸습니다. 전쟁을 범죄시하기 위한 노력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마일의 여행도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국가 간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전쟁을 택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문명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와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살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인류의 문명화는 절반 정도만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연설]

전 세계 비핵화 원칙 추구해야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라는 권위 있는 모임에 연설자로 초대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최 측과 동료 연사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뉴질랜드 원주민 언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 아하 테 메아 누이 오 테 아오, 헤 탕가타 헤 탕가타 헤 탕가타.” 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다. 그것은 사람이다. 그것은 사람이다”란 말입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속담을 소개한 이유는 논의의 초점을 부각시키고 이 자리가 최신 기술이나 외계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현상을 논하기 위한 곳이 아님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평화와 안보가 보장된 삶에 대한 염원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마오리족은 지난 수세기 동안 거의 1000년에 걸쳐 거대한 태평양을 건너 뉴질랜드에 도착했고, 폴리네시아인들은 대만 원주민의 먼 후손들입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이 나라와 국민들의 역동성에 감동합니다. 하지만 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72년간 분단된 이 나라의 고통스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부모로부터 나라의 분단이 일으키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분단의 원인은 식민지화와 종교였고, 한국의 경우는 세계정치를 좌우하는 이념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서로 같은 것은 없고, 아일랜드와 한반도의 역사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8선 이북의 한국인들도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개방되고 번영된 사회를 원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의 정책을 규탄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기존의 규탄 목소리에 당연히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회의의 주제인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에 따라 과거 여러 번 논의된 문제를 되풀이하기보다 대안과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는 1998년 아일랜드에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성금요일 협정’과 같은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경색된 교착상태를 벗



어나 진진하는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협상이야말로 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한반도 문제의 관련 당사자들 모두 평화적 협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결국 한반도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1945년 유엔이 설정한 목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1921년 아일랜드의 분단에서 1998년 협정까지 77년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좀 더 폭넓은 비핵화의 맥락에서 찾아 보고자 합니다.

독일과 함께 유엔 5개 상임이사국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란 핵무기 폐기협정이 나타내듯이, 또 다른 접근 방법의 하나인 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루어낸 진전과 비슷한 결과를 북한과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핵무기 반대 입장을 취해왔고, 이는 전통 우방들과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기에 축적해온 핵무기의 감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핵무기 반대 역사를 고려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이 더 빠르게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자의 핵무기 성능과 추진 장치를 향상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성능 개발 비용은 미국의 경우 1조 달러를 넘고, 러시아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핵무기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세계는 핵 위협에 놓여 있고, 경우에 따라 단 한 사람이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 발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이 냉엄한 사실을 고찰해야 합니다.

제주포럼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75억 인구는 핵무기 보유국들이 협력하여 핵무기를 남김없이 제거하는 계획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아닌 협력은 일촉즉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을 막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단순하고 실용적인 이유에서도, 무기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비용이 매우 적게 듭니다.

경제협력은 균형 잡힌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잘 나타납니다. 대한민국과 아시아가 이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아시아 경제권을 세계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러한 진전을 환영합니다. 뉴질랜드도 수많은 협정을 체결했고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최초의 선진국입니다.

아시아와 세계의 협력은 세계의 번영을 이끌고,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평화와 안보가 보장된 세계에 대한 바람을 말해왔지만 우리 모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기업 활동의 조정을 위해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과 기업 활동이 국가에 대한 책무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는 각국 정부에 대기업과 부유층의 탈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 세법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기에, 각국은 세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세법이 정직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하는 데도 국가 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불공평한 경제정책에 지쳐 있다는 점은 영국의 제레미 코빈이나 미국의 버니 샌더스와 같은 비주류 정치인들이 가진 호소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정책으로 소수가 대다수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는 매우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동성조차도 금융위기 충격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창의성은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지만 그것도 한 국가의 사회구조와 법률이 그러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가능해집니다. 용기 있는 지도력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만 합니다.

소수의 세력은 공포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계 공동체 내 다양성과 신념의 차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를 괴롭히는 인종·종교 간 분쟁이 일으키는 공포는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는 난민 대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

다. 세계가 20세기 중반 서구문명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인종적 편견과 유사한 사태에 또 다시 직면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비극입니다. 인종주의적 시각이 21세기의 세계에도 떠돌고 있고, 몇몇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세계는 이러한 사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소수의 난민만을 받아들이는 현실로 인해 비극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종 간 갈등은 그것이 종교 때문이든 아니든 공동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쳐놓았습니다. 또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방지될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수백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회의는 전 세계의 국가들을 불러모아 긴급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범위 이내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까요? 섭씨 2도의 상승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해안지역의 침수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온도 상승이 2도를 초과한다면 그 결과는 궤멸적인 것입니다.

이는 인구 대량 이주를 의미하며, 오늘날 난민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수많은 인구를 이주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탄소배출 저감 조치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디젤 자동차 구매를 불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네덜란드나 가격경쟁력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한 노르웨이처럼 몇몇 나라들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또한 전기자동차 수요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다른 조치로 중국과 몇몇 나라들처럼 오염이 심한 석탄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태양열에 투자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요점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지금 요구됩니다. 미래의 어느 날로 미뤄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에서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아시아는 이제 탄소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앞장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중차대한 도전 과제를 살펴보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계는 지식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보기 드문 가능성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인종, 피부색,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개인을 고유한 존재로 인정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인식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한다면,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기조연설]

역사의 구속 넘는 개방적 리더십

고축통 전 싱가포르 총리

제11회 제주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작은 나라인 싱가포르의 시각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와 이 비전을 달성하는 데 협력적 리더십이 갖는 역할을 얘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태평양의 세기'라 이르는 21세기의 2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40%, 세계 생산성 증가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세계경제 변화와 기술 발전에 적응할 수 있다면, 2050년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하게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세계 절대빈곤 계층에 속하는 아시아 인구는 1981년 16억에서 오늘날 7억으로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역사적 유산에 뿌리를 둔 난제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질곡에서 탈피하기 위해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이 공동선을 위해 복잡한 난제를 함께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지닌 현명하고, 굳건하고, 선견지명을 가진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적 리더십이란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많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마다 발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30년 전쟁 후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오늘날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의 기반이 되는 통치권과 영토 보전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분열과 불안정한 상태 속에 격동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탈식민지화는 아시아에서 많은 신생 독립국을 출현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 반란은 동남아시아를 갈라놓았고 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대립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는 휴전 체제하에서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힘든 시기였지만 각국 정부는 차이를 극복하고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은 아시아가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 기적과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란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가 등장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고, 10년 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발전과 번영을 지도적 원칙으로 삼았고 일부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유산에서 기인하는 상호 간 신뢰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술발전과 용이한 통신수단으로 빠른 변화를 보이는 국제 흐름은 사회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유례 없는 혼란을 초래해왔습니다. 지도자와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에 대한 반응으로, 때로는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여러 문제를 표면화하거나 문제 해결의 시간만을 벌고자 하는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은 미래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의 유산마저 처리해야 하는 짐을 지우게 됩니다. 아시아인들은 평화와 안정을 원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인생에서 더 높은 성취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단순히 제로섬 논리로 국가 이익만을 수호하기보다는, 비전과 정치적 용기를 갖고 이들의 보편적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 내 기반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그만 섬 제주도조차 싱가포르 전체 면적의 2.6배 크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물과 식량안보는 국가 지도자들을 밤낮없이 긴장하게 만드는 일상의 관심사입니다. 조그만 도시국가로서 우리는 선택지가 거의 없고 실수를 용납할 만한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제도와 호의적 외부 환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갈라설 수 없는 처지입니다.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고조된 테러의 위협은 싱가포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능동적 외교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우리는 지역 내 협력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유엔 내 작은 나라 포럼을 창설했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출범을 주도했습니다. 이 모든 포럼과 국제기구는 회원국들 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967년 아세안 출범은 국가들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자 기구의 좋은 예입니다. 과거의 적대국들이 협력적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세안은 싱가포르 외교정책의 주춧돌입니다. 10개 회원국은 영토나 인구의 크기, 경제사회구조, 통치체제가 서로 다르지만 빈곤 퇴치, 발전 격차 해소, 국민 복지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아세안 조각그림 퍼즐'처럼 제각기 다른 회원국들을 결합시킵니다. 2015년 12월 우리는 2조6000억 달러 규모이자 6억2000만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2025년 청사진은 국가 간 연계를 증진하고,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아세안을 창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회원국

들이 과거의 수렁에서 탈피하기로 결심함으로써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아세안은 또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기구를 통해 주요 강대국을 이 지역에 참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의 하나는 한중일 3국 협력으로, 이는 1999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회의에 부수된 한국, 중국, 일본 지도자들 간 역사적 조찬 모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중일 협력 구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2008년 이후로 이들 3국은 아세안+3 회의와 별도로 모임을 가졌고, 싱가포르를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3자 간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퍼즐이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관련 당사국들에게도 들어맞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크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 주변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만이 갖는 독특한 지정학적 과제(적대적 북한 정권, 중국의 전략적·경제적 비중 증대 그리고 한일 관계에 미치는 역사적 앙금)가 한국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나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긴장관계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안보 우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로지 그것에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현재와 미래 한국 지도자들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사는 집단지성과 개방적 리더십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선 세대의 지도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사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너무 과감한 조치를 한다거나 자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올바른 행위였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감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최근의 예는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양국은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신뢰와 화해를 구축하려는 훌륭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협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에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하고, 자국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국가 지도자만 있고 국가 간 협력적 리더십이 약화된다면 이는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태평양의 세기'와 평화롭고 번영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팔을 벌리고, 역사의 구속을 넘어서 미래 세대가 조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비전을 함께 구현하는 것이 싱가포르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기조연설]

유럽 시각에서 본 협력적 리더십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귀빈 여러분과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등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개인, 사회, 국가 간 대화와 건설적 교류에 이바지해온 권위자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인이자 유럽인으로서 나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게 된 것 또한 영예라 생각합니다. 나의 관점이란 유럽연합의 성장과 통합 과정, 즉 지난 1000년간 동족상잔과 파괴의 시기 이후 수십 년간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가져온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한 관점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의 협력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유럽을 뒤흔든 세 가지 중대 위기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란 바로 금융경제 위기, 난민 위기, 그리고 이슬람국가(ISIS, 이하 IS)를 배경으로 한 테러 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 위기가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른바 '아시아의 세기'에 거는 기대와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두고자 합니다. 나의 시각과 여러분의 시각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지리적 거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유럽 문명과 아시아 문명은 모두 1000년간 진화의 산물이자 고귀한 철학적, 문화적 전통의 산물이며, 두 문명에는 국가 간 평화와 대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합니다. 이 목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문제의 지속가능한 공동관리 방안을 구하기 위해 끈기 있게 추구해온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목표 자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사람들 간 불평등을 줄이는 것으로, 이는 이 포럼의 주최국이자 세계적 기술혁명의 선두에 있는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암흑 시대' 3대 위기: 유럽연합은 왜 협력적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가

이제 지난 10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어두운 시기에 유럽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



떠봅시다.

첫째, 심각한 경제 위기가 무엇보다 국가부채를 가져왔고, 다음에는 유로화와 기업, 고용환경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 위기는 사회를 심각하게 뒤흔들어 놓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의 창출과 사회보장 모델을 파괴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는 이러한 광풍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권위 있는 대응책이 나온 것은 2012년입니다. 그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을 기점으로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왔고 유럽의 경제 회복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

졌습니다. 요컨대, 협력적 리더십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초국가기관이자 가장 실질적 권한을 지닌 유럽중앙은행만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난민 위기입니다. 매일, 일 년 중 몇 달간은 매시간, 여성과 아이들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리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기아로부터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변방지역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불어닥친 뭍출 수 없는,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유럽 전체는 단일한 지도력 부재로 지금까지도 무력함만을 노출하거나, 이민 행렬에 대하여 형식적인 타협의 자세만 보여왔습니다.

유럽연합 국가 간 상호연대 요구는 최소한에 그쳤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대적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보다 확신에 찬 민족주의나, 기회주의적 민족주의에 굴복하여 장벽을 세우려는 유혹은 강해졌습니다. 강압적 지도력은 이 경우 효용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비극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IS와 벌인 전쟁으로 촉발된 테러 위기입니다. 이는 폭탄 공격으로 폐허가 된 파리 바타클랑 극장에서의 살육 행위로 상징됩니다. 주로 유럽 태생 젊은이들이 또 다른 유럽 젊은이들에게 희생되었습니다.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살인이라는 행위를 통한 강렬한 메시지는 유럽의 사회통합 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개혁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유럽의 국가 지도자들은 안보, 정보, 외교 문제와 유럽연합 자체의 정체성 재조정 문제에 대한 책임 공유와 의사 결정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각국이 주권을 양보하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연합은 ‘공동의’ 장기 비전을 찾지 못하고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브렉시트)는 이러한 심각한 퇴보

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응 방안: 다자주의와 참여와 교육

국제관계가 중심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공동의 책임 의식, 토론과 교류의 장, 그리고 가능한 한 폭넓은 다자 간 의사 결정의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 결과가 있었던 초기 상태로 회귀해야 하는 G20의 현실을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국제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의 중심 역할을 주목해보십시오. 최근의 다자 간, 양자 간 무역협정을 생각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인간에 의한 파괴행위(자연재해 이전의)로부터 자연보호 문제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만들어진 파리 기후변화회의의 훌륭한 성과를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모범 사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율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서만, 영향력을 지닌 규율이 극단적으로 파편화되어 국제적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의 확대로 이해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국가 간 관계에도 적용되고, 사회 내부 문제에도 확실히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혁명을 불러온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지금 모든 대륙의 지도자들에게 공동체의 원리에 부합한 권위와 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를 두려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아이디어의 전파, 경험의 공유 그리고 참여의 요구가 지닌 엄청난 힘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변화를 진정한 기회로 인식하는 이들은 개방이 지닌 국가 발전 가능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후자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 창설국의 하나인 이탈리아의 전임 총리로서 여기서 ‘유럽의 희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벽과 다양한 난점에도 진정으로 공유되는 통일적 비전만이 구대륙 국가들을 과거로부터 구원하고, 심지어 아시아의 역사와 운명에 수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과거의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이는 현재 파리 시앙스포 국제관계대학 학장으로서 내가 전 세계 대학, 대학원과 매일 협력하는 위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은 지배층이 형성되고 지도력이 길러지는 장소입니다. 이 중 최고 기관은 협동의 정신, 타인의 생각에 대한 이해와 개방과 변화의 자세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교육, 교육, 또 교육입니다. 나는 최근 전 세계 각국에서 온 2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한 모의 유엔총회에서 이 점을 재확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논의하면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주로 문화와 학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향상의 원칙은 앞서 언급한 유럽과 아시아 문명의 공통된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협력적 리더십을 향한 핵심 과제는 그 무엇보다 교육일 것입니다.



[환영만찬사]

평화의 불꽃이 만개할 그날까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주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제주포럼 환영만찬을 주최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불꽃놀이 장면입니다. 이런 불꽃놀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낭만 또는 흥겨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8월 김포시에서 폭죽이 터지자 놀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어나오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김포 주민들은 폭죽 소리를 듣고 북한의 포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북한이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을 하여 휴전선에서 긴장이 매우 높아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상징인 불꽃놀이가 즐거움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슬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쁜 꽃신입니다. 하지만 이 꽃신은 슬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65년 전 한 아버지는 어린 딸들에게 돈을 벌어서 꽃신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65년의 이별 뒤 지난해 10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부녀는 다시 만났고 아버지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98세가 된 아버지는 꽃신을 꼭 안고 북쪽에 살고 있던 이제 70세가 된 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일 만에 헤어져야 했고, 다시는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입니다. 하지만 이 피아노 역시 평범한 피아노와는 다릅니다.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휴전선의 철조망을 현으로 사용해서 만든 일명 '통일 피아노'입니다. 녹슨 철사로 만들었지만 신기하게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어려운 한반도의 상황을 상징하듯 그 소리는 매우 우울합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나,

북한은 핵 위협으로 응수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제재를 무시하며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심각하게 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데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는 남북대화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진정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대화를 제안하며 지금 긴장의 원인과 책임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직후 개최된 대화에서도 북한 대표는 같은 논리를 펼치며 “과거는 잊고 미래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북한의 도발이 바로 긴장 고도의 원인으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런 잘못된 행동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북측은 자신들의 도발을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남북 간 대화의 순간에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11회 제주포럼의 주제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새로운 질서와는 거리가 멀고 전혀 협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고립되고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한반도 야경 사진은 북한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진에 북한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한만이 한반도의 섬처럼 보입니다. 저는 한반도 북쪽에 파괴의 무기가 아닌 번영의 불빛이 가득 찰 그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 불빛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 이 지역의 모두가 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의 모든 가족이 함께 살고, 최소한 월할 때는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한국인이 마음껏 불꽃 축제를 즐기고, 남북한 주민이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며 즐겁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한 여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폐회사]

평화·번영의 플랫폼 역할 지속될 것

문태영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영만찬과 개회식에 참석해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께도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이란 올해 제주포럼 주제는 새로운 아시아를 향한 도전과 비전 논의라는 관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컸습니다.

21세기 들어 아시아는 세계경제 성장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정치·안보 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의 여러 세션에서 논의됐듯이, 세계는 지금 새로운 도전과 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역 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시아의 역할과 참여는 새로운 질서에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신뢰에 기반한 조화롭고 협력적인 아시아 건설에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포럼은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아시아의 미래를 준비하고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지난 사흘간 세계 68개국에서 온 정부와 재계 지도자, 정책 담당자, 학자, 언론인, 기업인 등 참석자 7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개회식 기조연설과 특별세션, 동시세션, 각종 미팅, 교류회 등을 통해 지역 협력을 위한 기존의 구상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포럼 개최에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회만찬을 주재해주신 김한욱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이사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주포럼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외교부,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제주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참석자와 주최·후원기관 관계자 여러분, 이번 제주포럼을 성공적인 행사로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인 제주포럼 사무국 스태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2회 제주포럼은 2017년 5월 24일~26일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외교·안보

P E A C E

[세계지도자세션]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제주평화연구원

진행	안착희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장
사회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JTBC 회장
토론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고축통 전 싱가포르 총리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한승수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리	도중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홍석현** 동아시아의 지정학은 매우 중요하다. 협력은 빠르게 진행됨. 정치적 이슈도 커짐. 특히 중국의 부상이 큰 역할을 함. 미국은 재균형 전략 중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무역, 통화, 사이버안보, 인권 등에 걸쳐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일부는 정상국가화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는 미국과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 미래 관계는 악화, 중립 관계는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됨. 동아시아에서는 단층선이 형성되고 있음. 즉 미일 리중이 다른 축을 형성해 갈등의 잠재성이 있음. 해상안보, 북한, 경제 문제 등이 그러함. 분쟁 대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많은 우려를 낳음. 여기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시적 방안과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 함. 냉전시대의 경우 미국과 소련은 서로 지나치게 의심했고 과잉 대응했음.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공세가 과연 우려할 만

한 것인가, 또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중국의 공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방어적인 정책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의문임.

• **고축통** '아세안+3' 회의 만찬에서 중국에 대해 말한 적이 있음. 중국은 수영장에 들어온 아시아의 큰 코끼리 같다고 함. 작은 수영장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수영장을 망가뜨릴 수 있음. 다른 나라들이 어려워짐. 그래서 중국은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함. 그러나 다른 해법으로 수영장의 크기를 키우는 방안도 있음.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다툼을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불편해질 것임.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중국은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할 것임. 그리고 수영장을 키울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홍석현** 미중 간 대결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면 역내 국가들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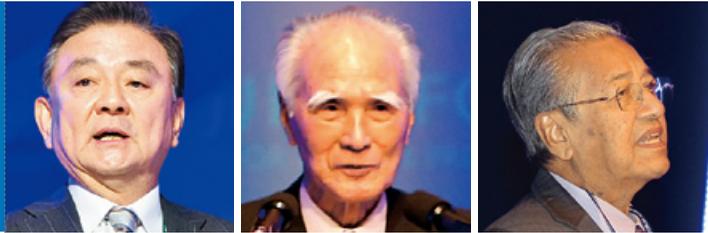
있을 것임. 이를 위해 다자주의 국제기구의 역할이 있을까?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마하티르 모하맛** 국가 간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임. 그렇다면 갈등 해결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전쟁은 그러한 해결법이기는 하지만, 재산 손실과 인명 살상 등 큰 비용이 들. 역사를 보면 전쟁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음. 또한 우리의 두려움은 폭력에 있음. 그래서 무기 개발과 생산·판매를 없애야 함. 전쟁에 대비해 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함. 머릿속에서 전쟁을 배격하면 갈등이 있을 때 전쟁이라는 방법은 무용한 것이 될 것임. 동남아시아는 말레이시아-싱가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간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인명 살상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하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것이 확고해야 함. 핵은 시작은 쉽지만, 중단은 어려움. 핵 물질이 전쟁으로 가지 않게 관리가 필요함.

• **홍석현** 동아시아가 배워야 할 유럽의 경험은 무엇인가?

• **엔리코 레타** 아시아의 통합, 긴장, 미래, 희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럽의 시사점이 무엇인가 고민함.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유럽의회가 아닐까? 5년마다 유럽의회 선거를 하고 700명 이상 의원을 선출해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회의하고 협상함. 여기서 의회의 위치가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 유럽의회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데, 이곳은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며 영토가 번갈아가며 바뀐 곳임. 스트



홍석현 무라이마 도미이치 마하티르 모하맛



짐 볼저 고축통 엔리코 레타



한승수

라스부르는 결국 전쟁의 상처가 남은 곳임. 스페인 라스부르가 위치한 국경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을 치렀으나, 결국 지금 이곳에 국경은 없어졌음. 유럽연합의 시발은 '이제 우리에게 전쟁은 없다'였음. 유럽은 지나치게 많은 전쟁을 치른 것에 대해 반성했음. 세대의 문제가 또한 중요함. 오늘날의 세대가 1970~80년대의 과거 문제를 잘 모르고 있고, 또한 유럽연합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됨. 과거의 전쟁을 보건대, 지금 평화는 매일매일이 승리의 과정임. 유럽연합(EU)의 성립 같은 결정은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임. 아세안 국가의 통합이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반가운 일임. 젊은 세대들에게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음.

- **홍석현** 여기 계신 분들 중 4명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임. TPP는 어떤 의미인가? 중국도 참여할까? TPP가 역내 평화와 협력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
- **짐 볼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음. 이 말을 국경에 적용해보기를 바람. TPP는 무역을 통해 국경을 제거하겠다는 것임. 민족주의는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지역이 무역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TPP처럼 큰 협정은 많은 국가가 참여해 국가의 정체성과 같은 것들을 해결해줄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임. 국경을 통해 구획 짓는다는 것은 역사 속에나 있는 것임. 국경을 지키기 위해 전쟁이 있었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크림반도) 등이 그러함. 서구 국가와 러시아의 대결은 국경 때문임. 이러한 대결은 역사적 교훈을 다시 얻어서 생각해봐야 할 것임. 예전에 마오리족은 영국의 침공 때, 영토를 공유하자고 말한 적이 있음(물론 영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전에도 이런 협력과 공생의 전통이 이미 있었음.
- **홍석현** 무역이 역내 갈등에 도움이 된다고 봄. 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대결 구도로 가는 듯함. 이 두 개의 시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 **한승수** 양자 간 FTA라는 것은 무역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임. 이는 다자 간 FTA가 실패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 중국의 FTA 참여에 대해 기대가 컸으나 이후 정체되고 있음. TPP, RCEP는 다자 간 무역 체제의 산물이며 아시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개인적으로는 TPP와 RCEP가 합쳐지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기 어려움.
- **홍석현** 진보적 엘리트나 지식인들이 각국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
- **무라이마 도미이치** 한마디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일본은 전쟁에 지고 원폭 투하 등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중요한 교훈을 얻음. 그런 경험이 지식보다도 중요한 힘이라고 봄. 대립과 갈등 등의 문제

해결에서 무력은 일시적 방편일 뿐임. 모든 이가 납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노력이 중요하며, 대화와 설득이 필요함. 일본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불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곳 주변 사람들이 모두의 이익이 되는,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봄. 일본인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홍석현** 각 정상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번 포럼의 주제인,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과 관련한 난점과 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한승수** 어쩌면 이번 주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봄. 아시아가 마치 무질서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음. 물론 소련 붕괴 후 아시아가 잠시 혼돈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임. 이제는 아시아에서 미중 관계의 역할이 중요함. 정상들 간의 만남, 대화가 필요함. 이는 아시아 평화의 조건임.
- **엔리코 레타**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임.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아시아가 중심인 시대에 살게 될 것임. 이웃 국가들과 문제는 큰 그림 속에서 해결하고 실천해야 함.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라면 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임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함.
- **짐 볼저** 레타 총리 말의 연장선 속에서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함. 전쟁 영웅에 대해서는 교육 시키지만,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음. 현실적으로 이 점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봄.
- **마하티르 모하맛** 전쟁은 민족주의의 극단적인 선택임.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개인의 목숨을 거는 것은 무모한 일임. 협상과 중재, 재판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함.
- **고축통** 우리는 모두 전 국가지도자였음.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아시아의 세기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됨.
- **무라이마 도미이치** 센카쿠 제도 같은 영유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중국에 간 적이 있음. 사람도 없는

섬을 위해 과연 전쟁을 할 것인가를 중국인들에게 물어봤음. 만약 그곳이 정말 필요하다면 함께 개발해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함. 영유권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같이 이익을 나누는 것이 필요함.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이익을 얻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봄. 힘으로 해결하면 반드시 복수가 일어나며, 도리와 인도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봄.

Keywords

TPP, RCEP, FTA, 갈등 해결, 대화, 아시아의 세기, 아시아의 책임감, 교육, 평화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아시아는 크기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함.
- 청년층이 협력에 대해 교육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관점과 의식이 변화를 유도해 협력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요건임.
- TPP와 RECP 등 미중의 경제 통합 경쟁은 당분간 합쳐지기는 어려울 것임.
- 경쟁보다는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아시아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과 핵 보유 유혹

동아시아재단

사회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장관/ APLN 명예의장
발표	첸동샤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학교 교수/ 핵무기폐기연구센터 원장 G.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정리	민인영 서던캘리포니아대학 박사과정

첸동샤오

동북아 국가들이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핵무장에 대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안보 환경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 이는 북한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음. 핵무장은 또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오판의 가능성 등으로 오히려 심각한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중국의 핵 전략은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최소 억지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았음. 중국 핵 전략의 목표는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 중국은 향후 역내 안보를 위해 가교(예를 들어 북한 및 한미 간) 또는 역내 안보 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G. 존 아이켄베리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안보 상황은 지난 수십년간의 헤게모니 중심에서 세력 균형으로 진행 중. 역내 국가들의 급속한 국방비 증가는 역내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쟁은 향후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큰데 두 국가가 현재 핵

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 큼. 중국은 과거의 최소 억지 전략에서 벗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을 확충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등 공격적 핵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 또한 대탄도미사일(ABM)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태는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 결국 서로가 상대방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핵전력을 확장하는 안보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됨.

스즈키 다쓰지로

일본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론의 대세는 핵무장을 강하게 반대함. 일본 대중의 강한 평화주의 성향 때문에 만약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약화된다 할지라도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송민순

북한의 계속된 핵개발 시도를 방관할 수 없는 한



가렛 에반스

첸동샤오

스즈키 다쓰지로

G. 존 아이켄베리

송민순

국에서는 이제까지의 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대안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자체적인 핵무장에 대한 대중적 논의도 더 이상은 금기시되지 않음.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계와 아시아 비핵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음. 미국은 중국에게 공을 떠넘기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 나름대로의 전략적 계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Keywords

핵무장, 핵전략, 핵우산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부 트랙2 방식의 '나가사키 프로세스'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동북아 비핵화 지대 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핵 보유 3개국인 미국·중국·러시아가 핵 미보유 3개국인 일본·남한·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주는 비핵화 지대 조약을 맺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일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당량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플루토늄 보유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때까지 재처리 유보를 선언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자적 기구의 창설을 고려해볼 수 있음. 남미의 핵물질 관리와 통제를 위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협력기구(ABACC)를 참고할 수 있음.
- 현존하는 트랙2나 트랙1.5 대화에 더해 미국과 중국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 트랙1 대화를 시작할 필요성이 절실함. 양국이 서로 인지하는 안보적 취약함을 인정하고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도출해내야 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소련이 맺은 핵협정을 제한적이거나 모델로 생각해볼 수 있음. 여기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상호 취약성'인데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탈피해 핵무기에 의해 동일하게 위협받는 동반자적 정신으로 역사적인 협정을 이끌어냈

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함. 공식 정부 간 대화에서 핵무기 정책을 다룬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봉쇄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함. 봉쇄정책은 매 파적인 정책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임.

• 현실성을 고려할 때 군사적인 방법보다는 외교적 수단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안임. 한반도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계속 악화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비핵화 지대 아이디어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등 여러 가지 기타 조건이 있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집증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이 먼저 양보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됨. 주변 국가들이 먼저 북한에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해야 함.

•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은 생각보다 제한적임. 과거에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핵개발이 북한의 안보 이익에 역행한다고 설득했지만 북한은 움직이지 않음. 중국에게만 공을 떠넘긴다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은 기대하기 힘들.

한중일 3국의 시각: 동북아 지역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회	우메자와 아키마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발표	장오우 중국 환경보호부/ 핵방사선안전센터 프로젝트 매니저 및 엔지니어 김군태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단장 후지타 겐이치 일본 원자력규제기관 국제협력과장
정리	황예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정무원연구원

장오우

- 중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당국에서는 원자력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있음. 중국의 원자력발전은 1) 빠른 경제성장, 에너지 구조조정, 에너지 안전 보존 그리고 환경보호적 측면 2) 2013년 중장기 원자력발전 계획 3) 지난 30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운영, 인적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안정성을 띠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2014년 중국 국가핵안전국(NNSA)과 중국 에너지국이 안전문화정책 성명을 처음 발표한 이후 원자력 문화 증진과 홍보에 대한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옴. 반면,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의 안전 확보가 가장 큰 도전으로 남아 있으며, 새로이 건설될 발전소의 안전 강화와 방사선 폐기물 처리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향후 과제로 남아 있음.
- 중국은 양자(MOU 체결, 전문 세미나 개최) 및 3국 간 협력 틀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와 고위급 전문 세미나를 통해 3국의 원자력 관련 상황 업데이트와 논의가 이루어졌음.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적인 공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더 개방적인 자세로 협력에 임하고자 노력함.

김군태

- 한국에서는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중대 사고에 대한 대응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짐. 2001년 이후 통합적인 원자력 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던 가운데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50개 후속 조치가 마련되는 등 원자력 안전 개선이 더욱 강화되었음. 이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대응과 사고 발생 시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 비상 대책을 강화하면서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도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됨.
- 후쿠시마 후속 조치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개정법은 중대 사고 포함 모든 사고를 규정하고, 모든 가동 및 신규 발전소에 사고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 이를 일정 수준 이상의 원자력 안전을 늘 유지하고자 함.

- 한국 당국은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일본, 중국과의 협력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분야가 잠정적인 협력 분야이며, 관련 기관들이 기술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우메자와 아키마

장오우



김군태

후지타 겐이치

후지타 겐이치

- 올해 4월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음. 재난의 정도나 크기와 무관하게 당시 국민들에게 구마모토 지진이 역대 원자력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당국의 홍보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 당국은 공식 홈페이지, 비상문자 서비스, 트위터 등을 통해 원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있음.
-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은 2016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시행하였음. 일본은 여기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투명성을 보유한 새로운 규제 기관의 신속한 개설과 규제 틀 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효과적인 재건 부분이 돋보였음. 한편,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 법률 개정, 안전 문화 확산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포함되었음. 그 최종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음.
- 일본 당국은 TRM 체제를 기반으로 중국, 한국과 협력을 굳건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Keywords

원자력 안전, 한중일,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안전 문화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TRM을 통한 한중일 3국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협력이 중요함. 3국 협력 틀 안에서는 행동지향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기이 드라이브를 정하는 것이 가능함. 8년 이상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온 TRM은 각 국가의 원자력 안전 규제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3국 모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화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안전 문화는 안전 수준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조성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 해당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근간이 되는 TRM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특히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왔음. 세션 발표자 모두 TRM 체제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3국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을 권고함.
- 세션 논의를 통해 안전 규제의 시행과 경험, 특히 안전 문화 강화를 위해 원자력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속적인 발전 과정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현재 각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국 협력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함.

유엔 정보안보 GGE의 성과와 전망

외교부·고려대 사이버법센터

사회	유대중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발표	에네켄 티크링가스 국제전략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카 케르트넨 사이버정책연구소 연구부장 존 맬러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연구교수 윌리엄 부스비 전 영국 공군 법무심의관
정리	박주희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연구원

■ 이날 발표는 유엔의 정보안보 맥락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GGE)의 현재까지의 작업과 향후 작업에 대한 전망,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뤘다.

이전까지 UNGGE 논의(2009~2015)

■ 2003년 러시아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맥락에서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룰 정부전문가그룹을 소집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그룹의 작업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첫 번째 UNGGE 회의 의장국은 러시아가 맡았다. 그러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의 안드레이 쿠릅스키 대사는 “모든 참석국들이 각기 다른 배경과 언어 사용으로 이해가 달라 합의가 힘들다”고 언급했다.

■ 2010년 UNGGE 회의에서는 15개국이 모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회의에서 15개 국가들은 정보안보(information security) 영역에서의 위협이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이 악용될 경우 국제평화와 국가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2010년 UNGGE는 신뢰 구축 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와 사이버 안전 관련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이용과 관련된 규범에 대한 추가적 논의와 강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2010년 UNGGE 회의에서는 규범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해 미국과 같은 관점을 가진 국가들은 기존 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법을 ICT 분야에서 국가들의 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 규범에 관한 논의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UNGGE 회의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2013년 보고서 제19항에서 국제법, 특히 유엔헌장이 적용 가능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개방되고 안전하며 평화롭고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동 보고서 제16항에서 어떻게 그런 규범이 국가의 행동에 적용되며, 국가들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적용될지에 관한 공통의 이해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독특

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규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제인도주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열띤 논의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합의는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을 포함한다고 결론지으려 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그러한 해석이 전문가그룹의 숙고사항과 합치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2013년 UNGGE 보고서는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의 논의 방향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

기존의 국제법을 어떻게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복잡성과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비구속적 규범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UNGGE 회의는 국제법과 규범에 관한 담론에 물꼬를 텃다. 먼저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의 규범과 규칙, 원칙 논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안전을 위한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규범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범과 규칙, 원칙 논의는 국제법과 달리 합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규범과 규칙, 원칙을 다루기 위해 의도되었다. 기존 국제법 적용에 대하여, 2015년 보고서는 전문가그룹이 국가들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수많은 기존 규범과 원칙을 나열하였다.

향후 UNGGE에 대한 전망

- 주도적인 사이버 파워들의 논의를 통해 향후 UNGGE 논의에서 다뤄질 내용을 예상해볼 수 있다.
- 먼저 사이버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미국은 사이버 안정성을 모든 국가가 사이버공간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해한다. 모든 국가가 협력하고 충돌을 피할 인센티브가 있으며, 서로 지장을 주거나 공격을 하지 않을 이유를 갖는 그런 환경으로 이해한다.
- 또한 미국과 같은 관점을 가진 국가들은 평시 규범(peacetime norms)이라 일컬어지는 부분(주권과 국가책임에 관한 규범)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인도법에 관한 추가적 논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의 경우 교전규칙 논의를 개시하려고 할 수 있으나, 다음 UNGGE 논의가 유엔헌장 제2조 4항 및 제51조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기보다

는 사이버 사고의 예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요구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명확하다. 비구속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네덜란드가 핵심적 인터넷 기반시설의 불가침성의 규범을 촉구하고 있으며, 상당주의(duo diligence) 의무의 이슈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점

-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당한 적 있는 한국은 사이버안전에 관한 국제적·국내적 규범과 규칙, 원칙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상당주의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박노형

- 3차 UNGGE에서는 기존 국제법(유엔헌장 포함)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4차 UNGGE에서는 사이버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UNGGE에서 GGE는 정부전문가그룹을 의미하지만, UNGGE 논의는 정부전문가보다 사실상 정부기관의 협상 자리로 볼 수 있다. 4차 UNGGE는 20개국만 참여했는데, 그중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들도 있어서, 시간이 영뚱하게 지체된 면도 있었다. 4차 UNGGE회의가 끝난 뒤에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멤버십이 확장되었다. 이처럼 멤버십이 확대되었는데 제3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이러한 제3의 목소리가 UNGGE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미카 케르트넨

- UNGGE의 세 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로, 배제(exclusion)의 문제이다. UNGGE의 멤버십이 20개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적 수준에서 국제적 수준

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어떤 국가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국가가 들어갈 수 없는지 논란이 있다. 둘째, 대표성의 문제이다. 민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각국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UNGGE가 안고 있는 도전 과제 중 하나다. 셋째로, 소진(exhaustion)의 문제이다. UNGGE 초안 만드는 과정이 길며, UNGGE의 내용이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이를 각국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 제안하고 싶다. UNGGE는 법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의의 자리다. 반드시 국가의 꿈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그것에 기반해서 법적, 정치적, 기술적 목표들이 따라 붙어야 한다. 또한 전체적 싱크탱크로서 UNGGE는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존 앨러리

- 사이버 기반시설은 주로 민간이 담당한다.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게 할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은 북한에서 시작된 사이버 공격이 중국을 통해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UNGGE에서 다루어 어떻게 이러한 위협을 줄일지 논의해야 한다. 또한 국가마다 시스템도 다르고,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비례적 의사 결정을 잘해야 한다. 민간부문을 포용하고 활용해서 어떻게 악의적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UNGGE는 일차적으로 국가 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윌리엄 부스비

- 향후 UNGGE 회의의 우선적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를 바라보기보다는 앞을 바라봐야 한다. 둘째, UNGGE 논의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활동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들을 더 세부적으로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경청해야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들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

에네켄 티크링가스

-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UNGGE 멤버십이 확대되면서 제3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이러한 제3의 목소리가 UNGGE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자 한다. 제3의 목소리는 단일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이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국가들이 있을 것이다. UNGGE의 멤버십 확대를 통해 여러 가지 논리와 경험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 사이버 안전을 위해 국가 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논의한다. 또한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Keywords

정부전문가그룹(UNGGE), 유엔헌장, 사이버 보안, 국제법, 정보통신기술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한국은 향후 UNGGE에서 다른 논의 사항을 예견하고 그에 대하여 우리의 관점을 정리하고 대비해야 할. 이번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제3국의 책임 또는 상당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다음 UNGGE에서 다루어질 가능성 있음.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개시하여 중국의 서버를 통해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다음 UNGGE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임.

아시아태평양의 핵 안보와 안전: 오랜 쟁점과 새로운 사고

동아시아재단

사회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
발표	아베 노부야스 2003~2006 유엔 군축 사무차장 존 칼슨 핵위협이니셔티브 수석 자문관 페르베즈 후드보이 파키스탄 포르만 기독교대학 물리·수학 명예교수 센딩리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정리	김가원 동아시아재단 펠로

2015년 4차이자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네 번에 걸친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유지해온 핵 안보 안전 협력의 모멘텀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에서, 이 세션은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회로 아태지역 핵 안보 안전의 미래를 짚어보고자 했다. 지난 4차에 걸친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국제협력을 통한 핵 안보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봤다.

아베 노부야스

- 핵 안보에는 테러리즘의 위협이 상존한다. 향후 5년 이내 핵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상이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핵안보정상회의가 효과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핵 분해 물질 감소와 핵무기 감축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다만 핵 안보 이슈를 고

위급 차원에서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핵 안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핵 안보 안전에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존의 COE(Centres of Excellence)를 활용해 각국 간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경계와 대테러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테러리즘 대응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재정적 한계, 핵 안보 테러리즘 대처에 각국 간 정치적 계산의 간섭이 국제협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존 칼슨

- 핵안보정상회의 구상 단계에서 참여국들에게 의무 부과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했다. 덕분에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핵무기 물질 보유국 수가 40개국에서 25개국으로 줄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현재 핵 안보 레짐과 핵안보 표준이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 또한 핵 안보



김성환

아베 노부야스

존 칼슨

페르베즈 후드보이

센딩리

예상이 한정되어 있기에 핵 안보 안전 확보가 우려된다.

- 이상적인 핵 관리 방법으로, 핵사찰 등 의무 부과와 상호 검토(peer review) 시스템을 도입하고, 표준이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게는 핵 관련 인증 철회를 가능하게 하면 된다. 특히 상호 검토 시스템을 개별 국가들의 안보 문제에 다른 나라가 관여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상호 검토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군사용 핵물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해 각국이 안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페르베즈 후드보이

-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과 같이 은밀하게 핵개발을 진행하는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파키스탄과 러시아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불참했는데, 그 원인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우라늄 농축이나 감축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핵물질 안보에 대해서만 다루었기 때문이다. 핵안보 안전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파키스탄 내 원자로 안전 보강을 위해 미국이 1억 달러를 지원했던 사례가 있다. 양국 정상 간의 이해와 합의로 이러한 지원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핵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 대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각국이 관련 정보 공개를 원치 않으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NTI가 최근 내

놓은 핵 위협 지수에 대해 그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센딩리

- 핵안보정상회의의 목적은 전 세계 지도자와 국제사회가 핵분열 물질에 대한 의식을 환기하려는 것이었다. 위험한 핵물질이 불법적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하고, 후쿠시마 사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 아래 저농축우라늄(LEU)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연구용 원자로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다. 안전한 원자로를 설계하려는 노력과 민간 용도의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는 데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중국은 아태 지역 리더로서 역내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우라늄 연료봉을 탄소 코팅하는 1세대 고압 원자로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방사능 유출을 차단한 안전한 원자로다. 핵안보 안전에 관해 국가 간 기술·정보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평화학 창시자' 요한 갈통 대담]

격랑의 동북아, 평화 해법을 찾는다

제주평화연구원

기조연설 **요한 갈통**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 창설자

대담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정리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갈등 발생의 원인

- **김영희** 평화학의 창시자로서 수많은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 이슈를 다루어온 입장에서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요한 갈통** 상호 대치되는 목표와 호혜성의 부재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양측이 얻는 결과가 상호 호혜적이지 못한 경우 갈등과 폭력이 발생한다.
- **김영희** 그렇다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의미인가?
- **요한 갈통**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욱더 밀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개인 간, 공동체 간, 국가 간, 문명 간 등 여러 차원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민주주의와 호전성

- **김영희** 칸트는 공화국들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박사님은 저서에서 민주주의야말로 호전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 **요한 갈통** 칸트의 이론에는 무역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나라는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국가 간 관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주의보다는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어떠한 사고와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호전성의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민사상과 자국이 약속의 땅이라는 생각을 지닌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국가가 호전성이 높다. 지난 100년간 각 나라별로 전쟁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보면 미국, 이스라엘, 영국, 터키 순으로 이어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인 독일·이탈리아·일본의 경우 전쟁 참여 횟수가 매우 낮은 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와 대북 제재

- **김영희** 북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위협 요소다. 오늘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해 박사님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제안하는 해법은?
- **요한 갈통** 남북 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 동등한

파트너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달성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보다는 유교주의 사회에 가까우며, 남북은 유교사상과 효, 근면성 등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비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을 시작한다면 북핵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영희** 대한민국과 같은 민족이며,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요한 갈통**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대외적으로는 안보와 대외 협상 카드 확보, 대내적으로는 자신감 표출과 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김영희** 대북 제재 없이 북한과 같은 국가가 호전성을 버리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북한 붕괴론에 대한 견해는?
- **요한 갈통** 과거 핵을 개발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제사회가 유독 북한에게만 심각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간 미국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해 제재를 해왔지만 북한 붕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붕괴론이라는 개념은 붕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제국의 붕괴

- **김영희** 박사님은 과거 미국 제국이 2020년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202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현재도 같은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요한 갈통** 현재 시점에서 미국 제국의 붕괴는 진행 중이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동맹국들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나 현재는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홀로 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이 감퇴하고 있다.



요한 갈통

김영희

한반도 통일

- **김영희**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가?
- **요한 갈통** 남북은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단 민족통일을 위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게 되면 향후 통일의 기반이 될 단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갈등 해결, 한반도 문제, 대북 제재, 한반도 통일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북한과 비군사적 측면에서 협력과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함.
- 남북 간 국가통일에 집착하기보다 우선 민족통일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관계를 만들어야 함.

한반도 통일과 한미 동맹의 역할과 미래

국립외교원

사회 발표	신동익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스캇 슈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청샤오허 인민대학교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교수
토론 정리	인남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미주연구부장 정혜영 국립외교원 연구원

스캇 슈나이더

- 2009년 6월 한미 공동으로 '한미 동맹 미래 비전'을 발표했으며 시장 주도, 민주주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내용을 포함했음.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며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 안정과 한국 안보를 최우선한다고 강조함.
- 한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추구한다면 한미 양국이 갈등을 겪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 안정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음.
- 미국은 통일 후에도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통일 후 한반도와 지역 내 안전 보장과 한미 동맹 필요성에 따라 동맹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미국 개입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 한반도 통일 시 미국이 재건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향후에도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 동북아 정세는 역내 관계 변화 구도에

따라 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자 간 지역협력 메커니즘 조성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계속 유용할 것으로 보임.

청샤오허

- 중국이 한미와 각각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통일 이후에도 미중 간 라이벌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중국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통일 후 한국은 국내 안정에 10년 이상 과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이며,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정당화 시도가 계속될 것임.
- 한미 동맹은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방어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북핵 안보리 결의 이행, 제재를 통한 압박, 급변사태 시 개입을 도모할 수 있는 공세적 역할도 가능함.



신동익

김현욱

스캇 슈나이더

청샤오허

니시노 준야

인남식



- 통일 과정이 교착상태로 지속되더라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으로 인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할 것임.
- 한미 동맹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안보 필요성과 우호 관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통일 후 미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한미 동맹이 와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김현욱

-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미중 간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현 정세에서 미국이 간섭하기 쉽지 않을 것임.
- 통일 후 한미 동맹의 미래는 통일 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위해서 한국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
- 통일 방식에 대해서 한국은 경제적 통일과 연합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연방제를 원함.
- 한미 동맹의 위협 인식 대상이 북한에서 지역과 세계적 위협 대상으로 바뀌고 통일 후 한국은 중

국을 위협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임.

- 한미 양국은 동맹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새로 작성해야 할 것이며 미군의 규모와 배치, 전략적 유연성, 군사지휘 체계가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임.
- 한미연합사(CFC)는 와해될 것이고 한국의 전작권은 주한미군에게 넘기지 않고 미일 동맹처럼 평행적 조정 구조로 바뀔 것임.
- 미국 군사전략 전환, 북한 위협 요소 상실, 주한미군의 육군 규모 감소 등의 변화가 생길 것임. 통일 한국과 중국 관계를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의 이전 북한 영토 배치는 수용 가능하지 않고 통일한국 군대만 한반도 북쪽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니시노 준야

- 일본에게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 과정과 관계없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함.
- 한반도 급변사태 시 일본은 통제권이 없지만 한국이 이 사태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함.
- 반복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적 리더십을 향해: 이론과 실제

동아시아재단

사회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 및 토론	왕용 베이징대학 교수 겸 국제정치경제센터 소장 존 닐슨라이트 채텀하우스 아시아프로그램 책임자 존 들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리	최하은 동아시아재단 펠로

국가지도자들 간 전략적 대화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의 구성요소다. 그러나 최근 안보 이익상의 갈등, 경제적 이익의 차이, 문화적 가치의 차이 등으로 인한 아시아 지역 리더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외교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아시아 역내에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전략적 맥락 속에서 각국 지도자들 간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모색한다.

• **박철희** 이번 세션은 올해 제주포럼의 전체 주제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에 부합하는 하위 주제를 다루는 시간이다. 저명한 3인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사실 아시아 역내 협력에 관한 문제는 해마다 제주포럼에서 다루는 단골 주제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추상적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부상, 일본의 군사안보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 등 최근 불안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구체

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다.

• **왕용** 그간 중국의 부상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오도되고 과장됐다. 단순히 중국만이 아닌 아시아 지역 전체의 부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냉전 종식 후 지난 20년간 아시아의 부상은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개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공통의 이해가 증대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고 있다. 반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급작스런 부상에 따른 역내 변화로 인해 영토 분쟁, 역사 문제, 안보 경쟁 등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인지하고 공통 목표를 설정해 역내 질서를 어떻게 재편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거 냉전의 유산이나,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재균형화 기전략(Pivot to Asi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분절된 아시아를 인식해야 한다. 이

사로 인해 일본은 억제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미국과 긴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음.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1990년대 이후 북한에 대한 관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 일본 방어 능력 구축에 한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 일본은 한미 동맹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봄.

인남식

- 통일 후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위협 대상을 파악해야 함.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은 위협인 동시에 경제적 기회이기 때문에 균형적 요소를 잘 파악해야 함.
- 한미 동맹의 미래를 논할 때 양자의 상호 인식이 중요하며, 특히 트럼프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재로서는 미국의 리더십과 외교정책이 변화하는 교차점에 있는바 이에 관한 정확한 미래 예측이 중요한 시점임.
- 통일 후 한미 동맹이 한미일 3자간 안보 지역 동맹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동북아 지역 협력 형태의 3자 협력체 논의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 다자 역학 관계를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음.

짐 볼저(전 뉴질랜드 총리)

- 통일을 향한 장·단기적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함.
- 남북한 모두 지속적으로 함께 잘살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남북 협상에서 제3국과 같은 외부 참여자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질의응답]

Q. 짐 볼저 트럼프 후보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이는 한미 동맹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Q. 박인국(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2009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한반도 정책을 볼 때 '평화안정 유지'를 '비핵화'보다 우선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결정이 북한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생각함. 중국 정부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Q. 신동의 청샤오허 교수는 한국이 통일된 후 10년 정도 과도기가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미군 철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10년 인 이유가 무엇인가?

A. 스캇 슈나이더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간헐적으로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를 종결시킬 만한 단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함. 미국 내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이 기존의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오히려 고립이 아니라 국제주의를 나타낸다고 생각함.

A. 청샤오허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평화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결 등 세 요소는 다소 갈등이 있음.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 안정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음. 개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안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함.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반도 통일이 시 과도기는 10년, 15년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편의상 설정한 기간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음.

Keywords

한미 동맹, 한반도 통일 과정, 북한 비핵화, 북한 급변사태, 통일 후 미중 관계

테올로기 대립과 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역내 안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 역시 부상하는 국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 국가들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일대일로 등 중국의 대외정책을 보면 자국의 발전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의지가 잘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남중국해 문제나 다오위다오 등의 영토 분쟁과 같은 몇몇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치 리더들 간에 솔직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 **존 낄스라이트** 유럽인의 시각, 평소 합리적으로 정평이 난 영국인의 시각으로 덧붙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시아 지역 내 협력적 리더십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본다.

도전 과제를 나열하자면, 첫째, 헤게모니에 대한 영향력 경쟁(미국과 중국의 경우 이러한 경쟁이 무기로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침) 둘째, 영토 분쟁(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 부분에서 경쟁이 발생해 지역 불안을 일으킴) 셋째, 정당성 확보의 어려움(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초의 극우파 대통령 탄생 직전까지 갔고, 법을 넘어 공권력을 남용해 '징벌자'라는 별명이 붙은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아시아에서도 유사 파시즘이 발호할 징후가 보임) 넷째, 민족주의 대두 다섯째, 엘리트와 대중 간 불신 증대 여섯째, 급속한 경제성장(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잡기 어려움. 일곱째,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재해 등 여덟째, 제도적인 피로감(너무 많은 제도로 인해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대두)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들이 왜 이제서야 대두한 것일까? 냉전 종식 후 전략적인 적대 관계가 해소되

었고, 많은 문제들의 양상이 달라졌다. 미국의 개입 정도와 관련해서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이나 아베 총리가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남중국해 관련 영향력 면에서 두 국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헤게모니 측면에서 단축적인 세계에만 갇혀 있지 않는다. 주요 플레이어들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중이라 본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각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전통적 동맹 관계로 회귀하거나 일본과 같은 일방적인 새 접근이 가능하다. 혹은 한국처럼 중국을 통해 리스크를 제거(해징)하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변화들이 왜 더 중요해졌는지 생각해보면 기술의 진보도 한몫을 했다. 기술 진보는 각국의 군사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하여, 적의 공격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게 하였다. 북한의 경우 기술 발전이 탄도미사일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통적 정치 엘리트층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한 공산당 지지가 예전 같지 않으며, 일본은 경제 쇠퇴로 인해 정치 엘리트층에 대한 지지가 낮아졌으며, 한국은 최근 총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들, 특히 젊은층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전통적 지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밖에 지역적, 국가적 불안 요소도 많다.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일본의 경우 분쟁적인 정치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아베의 헌법 개정은 판도라의 상자로, 향후 정치적 양상이 달라져 포괄적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 역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있으며 중국도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잇따라 정치 변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아 협력에 관한 많은 구상들이 나오고 있으나 과연 이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존 들러리** 아시아 지역 협력 문제에 미국의 역할을 빼놓고 논의할 수 없다. 사실 아시아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방적인 개별 이해 추구가 지역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적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일까? 전략적으로 누가 더 아시아의 비약적인 협력과 발전을 원하는 것일까?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안보의 중심축을 좀 더 아시아에 가깝게 두겠다는 것으로 아시아 입장에서 중국의 급작스런 부상에 따른 균형 전략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국 균형 전략은 일부 국가들로 하여금 미중 긴장 상태를 이용해 자신들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서, 안보는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으려는 국가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소국 혹은 중견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협력 추구보다 오히려 미중 간 오해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볼 수 있다.

중국사 연구자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사 정체성과 교육 문제이다. 동북아시아의 역사 정체성은 역사적 내러티브(서사구조)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와 밀접하다. 최근 이 지역을 보면 민족주의적 내러티브를 강화해 다음 세대에 이를 전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교육해 국민국가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역사 교육 자체가 민족주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단일 입장만을 고수하여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역사적 서술에 도덕주의를 더하고 있다. 북한이 그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정도는 약하지만 한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역사 왜곡을 통해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일본이나, 역사적 민감한 부분에 있어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역시 제외될 수는 없다. 비단 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최근 미국에 불고 있는 트럼프 현상



박철희 왕용



존 낄스라이트 존 들러리

역시 민족주의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나마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러한 민족주의를 인식이 라도 하는데, 트럼프의 경우 주요 언론을 통해 민족주의적 성향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리더들은 정책 결정을 할 때, 대중들의 생각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려면, 역내 대중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자에게 협력을 주문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낄스라이트 교수가 언급했듯이 현실에서 대중들은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된 아무런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하며 새로운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더욱 우려스럽다.

• **박철희** 현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시아 지역의 경우 1979년 이후 큰 전쟁이 없었으며 대규모 학살이나 대규모 테러도 없는 평화의 상태를 유지한 채 국제적으로 점차 영향력을 증대시켰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는 여전하고 북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나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왕용 교수에게 질문하겠는데, 앞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시아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개방적인 질서의 정의는 무엇이며 과연 이 지역에서 미국에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왕용** 우선 역내 협력을 저해하는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간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 동맹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열강의 부상과 쇠락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역내 새로운 질서 전환 시기에 살고 있다. 이전에 비해 급진적으로 진행돼서 그 속도를 다소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공통의 이해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인적 교류 통계를 살펴보면 관광객, 유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왕래가 잦아지면 자연스럽게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게 되고 나아가 지역 차원의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쉽사리 풀기 어려운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역시 비교적 협상이 쉬운 경제나 문화 분야부터 대화를 하다보면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열강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큰 상황이기 일방적인 관계 악화로 치닫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내 협력에 대해 충분히 더 많은 낙관적 기대를 가져도 될 것이다.

또한 역내 공동체를 만들 때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나머지만 뭉치는 것은 유럽에서 러시아 봉쇄의 선례를 보듯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 **박철희** 미국이 아시아 지역 협력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왕용**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 집단적인 안보 상황에 미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박철희** 닐슨라이트 교수는 지역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불신을 품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유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신뢰 구축을 위한 소다자주의적인 제도가 지역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될까?

• **존 닐슨라이트** 유럽의 경험을 동아시아에 투영시키는 것은 어렵다. 유럽의 경우, 소비에트연방이라는 공통된 위협이 있었기에 이에 대응하는 공동 체제를 마련할 수 있었다. 사실 유럽의 경우도 완전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지도자가 무릎 꿇고 반성하는 모습에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러한 정서적 공감에서 협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오바마가 히

로시마를 방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감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과거를 재조명하고 있는데, 특정 리더 혼자 독단적 결정을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유럽의 경우, 과거 문제 대응은 항상 공동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

중견 국가들은 강대국 사이의 긴장을 활용할 때 그 이해관계를 따지게 된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공공외교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경우 공공외교 예산을 해마다 확대 편성하며 미국의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협력 측면에서 보면 공공외교는 진전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비생산적인 제로섬 경쟁과 접근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

• **박철희**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 전 타계한 일본의 와카미야 전 <아사히 신문> 주필이 떠올랐다. 그가 일본에서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루 존경 받고 높게 평가 받는 점은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탁월해서였다.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공감 능력이 대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공감 능력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존 들러리 교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만약 국가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역사에 대한 유일사관적 개념을 벗어나 지역적 동아시아(일본사, 한국사, 중국사가 아닌)를 가르치는 게 가능할까?

• **존 들러리** 미국적 낙관주의에 근거해 답하자면, 그렇게 되는 건 상향식이다. 이러한 제안이 아이디어로 끝나고 결국 좌초하는 이유는 국가 리더십 전달 체계가 민족주의 자긍심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시민적인 현상은 아니다. 우리 같은 연구자들, NGO, 젊은 세대들에 의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이니셔티브로는 어렵다.

• **존 닐슨라이트**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냉전 당시의 정량적(경험적) 평가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를 보면 내러티브가 중요하다. 배타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계속 바뀔 수 있다. 대학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적인 틀만이 아니라 다양한 틀이 나오길 기대한다.

[질의응답]

Q.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협력적 리더십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에서 놓친 부분이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트럼프, 힐러리 모두 국내 정치의 포로라는 점이다. 다들 국내 정치의 다이내믹스를 최소화하는 데 급급해서, 국내 정치의 포로가 되어 있는 한 협력적 리더십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와 리더십

유럽의 대표적 양속 관계인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공동 번영을 위해 대승적 화해를 한 사례와는 전혀 판판이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 총리는 자국민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여론을 화해 쪽으로 이끌었다. 여론에 끌려가지 않았다. 대의를 내걸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국민을 설득했다. 그 결과 역사적인 화해를 이룬 것은 물론 유럽연합을 이끈 쌍두마차가 됐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나, 아베 총리, 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지도자들이 생각을 바꾸거나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 또한 국내 정치가 집단정치와 협력적 리더십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다고 보는가?

A. 존 들러리 리더만이 아니라 대중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정치 영역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모두 대중들이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까지도 대중의 요구 반영이 필요하다. 지도자가 있는 이유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A. 존 닐슨라이트 들러리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아베 총리의 경우 대중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안보정책을 살펴보면 대중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모든 것을 미일 관계 중심으로 생각한다. 강경한 이슈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정통적 역할 관계를 혐오, 합리적인 독자적 노선을 추구한다. 따라서 지금에서 크게 벗어난 새로운 솔루션 제시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유럽의 경우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투표에서 알 수 있듯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A. 왕용 국제관계에서도 국내 정치는 중요하다. 정치 지도자들과 관계, 대중들과 관계를 생각해보았을 때 아베 총리는 하토야마 총리와는 다르다. 시진핑 주석도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과는 다르다.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생각해본다면 성격, 시스템, 신념 체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중 문

제는 복잡하다. 산업별, 이해관계자, 성향별로 그룹 지어 나누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도자는 특정한 그룹의 단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므로, 모든 그룹을 대변하기 어렵다.

A. 박철희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 각료, 언론, 일부 정치자문단의 의견만 중시하고 반영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한 대중의 입장을 너무 따라간다고보다는 본인의 의제에만 집중해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과 지도자의 괴리가 커지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인들은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어 부정적,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다.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냉전시대 이후 최근 20년간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인지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역내 안보질서를 만들어야 함.
- 현재 도전 과제로는 헤게모니에 대한 영향력 경쟁, 영토 분쟁, 정당성 확보의 어려움, 민족주의 대두, 엘리트와 대중 간의 불신 증대, 따라잡기 힘든 급속한 경제성장,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인재, 제도적인 피로감 등이 있음.
- 중소국 혹은 중견국의 경우 미중 긴장 상태를 이용해 리스크 제거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지역 내 강국들의 경제 상호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일방적인 관계 악화로 치닫기는 어려울 것임.
- 특히 최근 역사 정체성과 교육의 경우, 민족주의적 내러티브를 강화해 다음 세대에 이를 전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교육해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임.
- 국가 리더십 전달체계가 민족주의 자긍심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 NGO,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역사에 대한 유일 사관적 개념을 벗어나 지역 통합적인 역사를 교육해야 함.
- 지역 내 진정한 협력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완전한 제도보다 먼저 정서적 공감이 필요함.
- 비교적 협상이 쉬운 경제나 문화 분야부터 대화를 하다보면 쉽사리 풀기 어려운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역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동북아역사재단

기조연설	유의상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
사회	김민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발표	민디 코틀러 아시아폴리시포인트 소장 라인하르트 최르너 독일 본대학교 교수 이토 준로 일본 쓰쿠바대학교 교수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토론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원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리	김민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민규

- 작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말해주듯,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오랫동안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 내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데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세션의 취지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더십이 요구되는지 논의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역사인식’을 심어 주고자 한다.

유의상

- 최근 들어 한일중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해결 방안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은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서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대내적 또는 대외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각국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정치지도자들이 역사와 역사에 관한 해석을 국내 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때에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오늘 세션에서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둘러싼 갈등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 등에 관해 세 분 발표자들께서 깊이 있는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믿으며, 재단 소속 학자 분들께서 흥미로운 토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유의상

김민규



민디 코틀러

라인하르트 최르너



이토 준로

이종국



곽진오

이원우

역사 교과서 문제

이토 준로

-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이 정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근거해 작성되고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교과서 검정 기준에 입각해 검정을 거쳐 교육현장에서 쓰인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 입장인 '국사' '정사'를 기술한 역사이다.
- 2014년 1월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정정 기준을 개정하고 동시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도 개정해 독도, 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교과서에 쓰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로 인해 영토 내용이 늘고 반면에 위안부 사항에 관한 부분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따라서 이러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 역사 교과서 작성이 필요하며, 현행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원우

-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이 정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근거해 작성되고 또한 교과서 검정 기준에 의해 검정을 하게 되므로, 집필자는 아무래도 정부의 역사관에 강하게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교과서 채택도 각 지역 교육위원회의 선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결국 2중, 3중의 규제가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교류를 통해 교과서의 편향된 부분을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 갈등 극복의 한 방법

라인하르트 최르너

- '역사 전쟁'은 대부분 역사적 사건을 각국이 자국

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방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곤 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일 간에는 갈등도 많았지만 교류에서 생긴 미담도 적지 않다.

- 예컨대 도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지바 현 다테 야마에 가보면 위안부 동상이 있는데, 이 지역의 학생들이 자주 가서 본다. 이런 동상을 세우고 견학하는 것은 희생당한 '위안부'들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또 잊지 않고자 기리는 행위이다.
- 대마도에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의 초상을 모셔 놓은 사찰이 있는데, 아메노모리는 임진왜란으로 악화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한 인물이다.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사에 대한 기억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곽진오

- 한일 양국의 지방사 속에는 최르너 교수가 지적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정치다. 특히 아베 총리의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외교정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한일 관계를 심각히 방해하고 있음이 극명한데, 그러한 점이 최르너 교수의 발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역사 리더십 부재의 동아시아

민디 코틀러

- 제2차 아베 정부는 동아시아와 함께 일본의 역사를 재정의하는 것으로 그 리더십을 견지하고 있다. 역사라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며, 어떠한 변호나 변명·책무 또는 열망이 아니라는

아시아태평양 핵군축의 재고

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모든 정책 그리고 활동을 옹호해오고 있다.

- 반면 중국과 한국은 일본에게 단순히 '정직하고 깊은 반성' '올바른 역사 지식'을 통해 '역사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라고 요구한다.
- 일본은 이러한 훈계들이 그저 말뿐임을 잘 학습해오고 있으며, 자국의 역사 이야기를 색다른 프로그램과 전략으로 공고히 구성해 국내외로 퍼뜨리고 있다. 아베 정부는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시험(문제)에서부터 일본 외교관이 유엔 관료들에게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까지, 역사 문제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 다른 이들이 소극적인 데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또 다른 이들이 진실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만주와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고 주장한 요시다 쇼인이 운영했던 학교 쇼카손주쿠 근처에 있는 탄광과 제철소를 일본의 근대화 산업시설로 최근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것이 좋은 예이다. 유네스코가 역사를 세계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일본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곽진오

- 워싱턴 현지에서 아베 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정리해주어 감사하다. (동)아시아에도 유럽과 같은 미래 평화 구축을 지향하는 유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글로벌화와 지도자의 역사인식

이종국

- 글로벌 역사관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지도자의 역사인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글로벌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역사 문제가 이슈화됐다. 냉전기에는 미국의 리더십이 그런대로 효과적으로 기능했으나, 1989년 냉전 종식 후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 역

사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 부상과 지역 정치지도자의 지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원우

- 글로벌 시대에 지역 정치지도자들의 한계를 노정시키는 현상과 비례해 동아시아의 국가 간 역사 문제는 참여하게 대립되게 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입구에서 좌절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사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 형성에 주력하기보다는 동아시아사 자체를 공동의 역사로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교과서 내용 개선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미담'을 총정리해 책자나 영상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양국 시민과 학생 간의 상호 방문 여행이나 방문 수업 등을 통해 서로의 역사를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역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행태에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컨대 일본이 워싱턴에서 전개하고 있는 과거 침략주의에 대한 정당화와 미화를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일국사 내지 민족사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각국의 지도자들이 깨닫고 실천해야 함.

동아시아재단

사회	라메시 타쿠르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공동의장/ 전 유엔 사무총장보
발제	이홍구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카를로스 소레타 주러시아 필리핀 대사 존 킬만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연구부장
정리	김가원 동아시아재단 펠로

라메시 타쿠르

- 우리는 제1핵단계에서 제2핵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냉전기 제1단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극 체제에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대결이 벌어졌다. 이때는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가 존재했다. 현재의 제2단계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핵무기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핵보유 국가가 다수로 늘어난 데다 억지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예컨대 인도와 파키스탄은 개념적, 정치적, 전략적으로 중국과 얽혀 있다. 핵전쟁은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의 경계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
- 아시아에는 세 가지 범주의 핵보유국이 있다. 첫째, 핵 비확산조약(NPT)이 공인하는 핵보유국, 즉 중국이다. 중국은 핵 비확산조약 6조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비확화와 핵군축의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둘째, 비NPT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이다. 셋째, 전 NPT 회원국이자, 현재는 탈

퇴한 북한이다.

이홍구

- 최대 관심사는 양대 초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관계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항상 스스로를 대서양 세력이라고 간주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미국은 경제, 정치적으로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중심이동을 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주로 인정받아 미국 영토로 공식 편입된 이후 미국은 지리구조적으로도 태평양 쪽에 더 가깝게 되었다. 하와이 출생인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여겨왔고, 재임 기간 중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발표했다.
- 냉전 기간 중 미국과 소련은 각기 상이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었고 서로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시장에 편입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유일한 방도이기도 했다. 이것은 냉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합리적 시장경제가



라메시 타쿠르



이홍구



카를로스 소레타



존 틸만



미중 간 공존·공영하는 상호 관계를 조성하기에 충분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 모두 상업 문화가 대국 굴기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 한중일은 상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 3국의 미래 운명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들 간의 친선 우호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일관된 외교정책을 견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아시아는 지역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대륙 전체가 핵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바로 이웃한 북한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거시적 관점을 갖기가 어렵다. 이제까지 북한이 조성해온 핵위기는 북한식 예외주의와 세계·지역질서에 반발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은 두 개의 세력 관계 서클에서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는 미국-중국 서클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중국-일본 서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불참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참여하고,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식에 동석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두 개 서클을 한데 아울러서 관련 당사국 모두와 대화를 통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 호주를 포함한 동아시아만 놓고 본다면 제1핵단계와 제2핵단계의 차이를 크게 실감할 수 없다. 북한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 역내 유일한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 유럽 국가들이 소련을 바라봤던 시선과 다르지 않다.

-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급부상은 예상 밖의 일이라 한국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내놓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핵무장을 원하지 않고, 일본에서의 한국인 피폭자가 많았던 경험에서라도 핵무장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카를로스 소레타

- 대서양과 중동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태평양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가장 적은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비핵화 전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 감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신뢰 구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해군 연합훈련을 해왔다. 동시에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런 태도는 푸틴이 확실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 제2핵단계는 1단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권역에서 지역마다 다른 관계를 맺어왔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동남아에서는 경쟁, 남중국해에서는 대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존 틸만

- 핵우산은 핵 안보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국가들은 핵우산에 의한 확고한 보장 아래 다자간, 양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 조치에 참여하는 데 동의해 왔다. 예를 들어 호주는 비확산조약의 지원을 전제로 핵 능력을 포기했다. 여기에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역내의 핵보유국 숫자를 줄이는 것이 자국 안보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다.

- 핵우산은 대한민국과 나토 국가들의 경우처럼 공식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호주와 일본의 경우 핵우산은 비공식적 형태인데, 핵우산의 존재는 관련 정부 간 성명으로 발표된다.
- 아시아·태평양의 핵무기 감축을 위해 새로운 사고가 긴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고 있는 비핵 국가들도 핵군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자국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고 있고,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호주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선두에 섰고 국제핵비확산및군축위원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았다. 냉전시대 나토와는 달리 아시아에는 현재 상호 신뢰 구축의 기반이 없는 상태다.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핵군축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사고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필요하다.
- 제2핵단계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핵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아직 부족함. 대서양에서의 핵 안보 구조와는 다른 구상이 등장해야 함. 아울러 기존 군축안에서 반보 또는 일보 더 나아가 트랙1.5, 또는 트랙2.0을 만들어내려는 지적 노력이 절실함.
- 아세안지역포럼(ARF)은 애초 핵문제를 다루도록 짜여져 있지 않았고 이 문제를 다룰 기구가 없음. 동시에 동남아비핵무기지역구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임. 대서양에서와 같이 책임성을 띤 신뢰 구축 조치 도입이 시급함.
-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 있음.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요구가 엄존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략

세종연구소

사회	진항수 세종연구소 소장
발표	이상현 세종연구소 동북아평화협력연구센터장 김군태 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단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토론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김수인 외교부 외무사무관
정리	안아람 세종연구소 연구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현황과 성과

동북아평화협력포럼 개최와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 2014,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개최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기능별 협력 강화 지속 등 외형적인 진전을 이루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실행의 지연 △엄중한 동북아 안보 환경 속 기능별 협력의 진전 가능성 △현 정부 이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음.

민관 협력 방안 논의의 진전과 기능별 협력 강화

- 원자력 안전 분야는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범 사업,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국내 심포지엄, 한중일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제3차 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회의(TRM+) 등을 개최하였음.

- 환경 분야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한중일 3국 생물다양성 정책 대화, 동북아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BBI국제전문가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음.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인식공동체 형성과 공동 내러티브 설정

-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이라는 하나의 '우산'으로 묶기 위한 공동의 인식, 관심사, 이익 등을 고려한 공동 내러티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협력 분야별 인적·지적 교류와 동평구 민관 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 구체적 역할과 기능, 재원 설정을 통해 기능별 위



진항수 이상현 김군태 추장민 김태환



고재남 김수인

크숍, 기능별 연구 추진 등 각 분야별 교류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평구 민관 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

민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제도화 기틀 마련

- 각 기관 실무자(실장급)를 중심으로 한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원 조달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해외 네트워크로 확대·발전시킴.

국가별 민간연구소의 포컬포인트 지정과 지역 맞춤형 전략 설정

- 세종연구소와 유사한 기능(동평구 사무국)을 하는 국가별 민간연구소를 선정하고, 이슈별 협력담당연구소(포컬포인트)를 마련하도록 함.
- 예를 들어 몽골 전략연구소로부터 공식적인 제안

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메커니즘이 없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음.

대국민 홍보 확산

- 일반 국민뿐 아니라, 언론인, 학자들 또한 동평구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함.
- 협력 분야별 회의 개최 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기입·언급하는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정책 제안 및 시사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안

- 장기적인 의제로 가기 위한 인식공동체를 만들고,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 협력과 대화의 틀을 지속한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아래 점진적,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불안정한 동북아의 안보 환경 속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 민간 차원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Keywords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 민관 협력 네트워크, 연성 안보, 아시아 패러독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유엔의 역할

유엔협회세계연맹

사회	조창범 유엔협회세계연맹 부회장
축사	박수길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기조연설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 및 군축고위대표
발표	알렉세이 보리소프 유엔협회세계연맹 집행이사회 의장/ 러시아 유엔협회 사무총장 남주홍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 주캐나다 대사 곽영훈 사람과 환경그룹 회장/ 세계시민기구 대표 유대중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토론	보니안 골모하마디 유엔협회세계연맹 사무총장 박홍순 선문대학교 대학원장/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정리	임지성 유엔협회세계연맹 협력담당관

박수길

- 올해는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창립 70주년인. 세계적, 지역적 전략 환경 면에서 유례 없는 도전에 대응해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특히 동아시아는 세력 구도의 구조적 변화, 북한의 핵무장화, 주요국들의 민족주의적이고 공세적인 대외 정책과 대결적 경쟁 심화, 군비 경쟁, 유엔의 원칙과 국제 정의의 경시 등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며 큰 변화와 도전을 겪고 있음.
- 유엔은 보편주의와 정당성을 의미하며 소프트 파워임. 동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분쟁 방지를 위해 유엔을 활용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원수

- 동북아 지역은 포괄적인 지역 안보 협력체계가 없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 잠재성은 매우 큼. 이 지역의 제도적 안보 대화와 협력체제 발전을 위해 유엔이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 유엔헌장 8장은 지역협력 체제의 창설을 권장하고 있음.
- 지역 안보 대화 발전에는 포용성과 실용성이 중요함. 북한도 포함해야 하며 마약 관리, 보건, 재난 관리, 에너지 안보 같은 연성 이슈를 먼저 다루어 신뢰의 기반을 쌓은 다음 강성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가 중요하며 국제사회의 단결을 보여주어야 함. 그러나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불



조창범

박수길

김원수

알렉세이 보리소프

남주홍



곽영훈

유대중

보니안 골모하마디

박홍순

러널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안보, 화학·생물·방사선·핵무기(CBRN) 위협, 테러리즘은 3대 안보 위협 요소임. 유엔은 이에 대응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음.

유대중

- 동아시아 질서는 역내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 정착의 회귀(return of geopolitics), 북한의 4차 핵실험, 사회경제적 불평등, 폭력적 극단주의,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으로 도전을 겪고 있음.
- 유엔은 국제 기준 제정, 범세계적 가치 등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에 있음. 유엔 정당성의 원천은 회원국의 보편성이며 국제사회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가장 보편적이고, 민주적이며 정당성 있는 기구임.
- 유엔은 다자 협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질서 안정에 기여함. 또한 유엔은 보편적 기준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리의 제재 조치는 그 좋은 예임. 북한 인권 문제도 인도주의에 반한 죄로 세계적 우려 사항이

며 보편적 가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유엔은 지역협력과 다원적 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고무함으로써 지역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 점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신기후변화 체제 출범은 역내 상호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 한국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지역 평화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음.

알렉세이 보리소프

- 동아시아에 대등하고 통합적인 안보 체제가 필요함. 폐쇄적인 군사 정치 동맹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러시아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신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대화를 제의했음.
-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상당히 악화됨. 북한은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해야 함. 북한의 행동은 이 지역의 전략적 안정과 핵비확산 체제 유지 노력,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모두 배치됨. 러시아는 북한의 원자력,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주권적 권리와 안보적 우려는 이해하나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는 받아들

일 수 없으며 모두 반대해야 함.

-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군비를 강화하려는 일부 국가의 의도가 우려됨.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계획이 바로 그것임.
-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함. 2005년 9월 합의가 이행되고 6자회담에서 합의된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에 관한 대화도 재개되어야 함. 6자회담 복원을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동북아평화안정 노력 약속, 미북 간의 주권 존중, 평화 공존, 관계 정상화 용의 표명,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ELWR) 등 평화적 원자력 사업을 인정하는 타협책 모색 등에 관한 성명 등의 사전 조치가 도움이 될 것임.
- 관계국 간 외교 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군축,

남북 경협, 대북한 경제 원조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협의하는 ‘한반도 평화회의’도 개최될 수 있을 것임. 동 회의에는 유엔 사무총장,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남북한, 여타 남북한이 협의하는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

남주홍

- 북한의 위험도 계산과 위기관리능력에 심각한 문제 조짐이 있음.
- 북한의 고립 지속, 조직적인 탈북 사태, 고위관리 망명, 극단적 식량·에너지·외화 부족에 따른 혼란, 핵심 지배층 내 혼란 등은 북한 정권 붕괴를 초래할 잠재적 요소임.
-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



을 선택하기를 바라지도 않음. 중국은 그들 나라의 소위 ‘북한 긴급사태 대책’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변화 문제를 유엔을 통해 협의한다는 입장임.

-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유엔 제재와 맞춰 북한 정권의 변화를 고려해야 함. 현재 시급한 일은 위기관리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며 정치적 레토릭이나 추상적인 통일 구호가 아님.

곽영훈

- 88올림픽 이후 유엔개발계획(UNDP)은 두만강 개발계획을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 한국과 함께 진행했고 당시 실행된 실크로드 지역 개발 계획과 함께 급증하는 도시 인구를 감안한 도시 중심 지역 평화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53개 도시가 가입한 실크로드 도시포럼이 생성되는 계기가 됨.
- 각국의 시민을 유치해 지역 평화와 공영을 목적으로, 유니피스 도시 DHR, 롬비니 PHD등이 지역 평화를 위한 환경 도시로 추진된 바 있으며 유엔 역할의 좋은 사례가 됨.
- 공산주의가 쇠퇴한 것처럼 자본주의도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유엔과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유엔 협회세계연맹은 실크로드 도시포럼 같은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북한에도 유엔협회(UNA)를 개설하여 ‘신냉전시대’에 평화 도시를 중심으로 ‘평화롭게 평화를 달성하기를 제안함.

보니안 골모하마디

-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봐도 지역주의와 지역 기반 협력은 실패한 사례가 많고 제약이 다분해 세계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며 다자 협력이 현 재로서는 최우선책임.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6번 목표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는 개발을 위한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 해결이 개발 문제를 촉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편협한 사고와 배타적인 국가주의를 배척해야 한

다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발언처럼 아시아 지역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 문제의 이해, 공감 능력의 배양, 행동의 변화로 구성된 세계시민의식 확산이 필수적임.

박홍순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 핵협상 모델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5자회담 구도도 방법임.

Keywords

지역협력, 다자 협력, 지역 외교, 북핵, 도시포럼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 잠재성이 매우 크므로 유엔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역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 추진을 건의함.
- 동아시아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 과제는 북한 핵문제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간 실패했던 노력을 반복하는 잘못(Einstein's Insanity)을 다시 범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 이란 핵협상 사례를 활용한 포맷이나 5자회담 또는 6자에서 나아가 유엔과 IAEA가 참여하는 8자회담 등 새로운 방안 검토를 제의함.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가 중요하고 국제사회가 단결을 보여주어야 함. 그러나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낼 필요가 있음. 지역안보 대화의 발전에 북한도 포함해야 하며 의견차가 적은 연성 이슈를 먼저 다루어 신뢰의 기반을 쌓은 다음 강성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북한의 붕괴나 정권 변화 시나리오에 구체적 계획이나 전략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유엔의 역할은 국가 간의 다자 협력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이룬 사례가 많음. 앞으로 SDGs와 기후협정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세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화할 필요가 있음.

동북아시아 해양 질서와 지역협력: ‘협력 상승의 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사회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제프리 킬 난양기술대학교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유안 그레함 호주 로위연구소 국제안보연구국 국장 최강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토론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정지용 중국 푸단대학 조선·한국연구소 소장 이와타니 시게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전 사무총장
정리	윤석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서항

제프리 킬

유안 그레함

최강

백진현



정지용

이와타니 시게오

조 훈련 등의 신뢰 구축 방안을 군사적 범위만이 아닌 법집행과 같은 비군사적 범위와 공중에서 항공기 간 우발 충돌 방지 등의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 이러한 제안은 한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심각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환경, 에너지 안보, 핵 안정, 재난과 인도주의 지원, 사이버 안보 등 비군사적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 간 안보 협력, 해양 안보를 지향하는 사례를 통해 실질적이며 효과적 역내 해양 신뢰 구축을 위한 비교적 표준적 모델로 인식되었다. 특히 일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해양 문제를 반드시 해양의 문제로만 보기보다 해양 외의 범주 문제와 연계해 좀 더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인식되었다.

■ 최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이견은 양자 간 문제로 보기보다는 역내 포괄적 안보 현안으로 간주해 유엔해양법과 같은 법적 기준과 원칙에 의거, 레짐과 국제법에 기초한 역내 해양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궁극적으로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아세안 연안국 그리고 미국 간의 갈등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벗어나, 역내 관련국 간 상호 신뢰와 국제법 또는 레짐에 의한 협력 상승의 장으로 발전시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는 해양 안보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이번 ‘동북아 해양 질서와 지역협력’ 세션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역내 해양 안보 문제와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제시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연계성을 다루었다.

■ 역내 해양 갈등과 분쟁은 주로 해양을 보는 시스템적 시각 차이, 역사적 주권 집착,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등에 의거,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소규모 해군력 경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관련국 간의 상호 신뢰 구축과 위기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특히 최근 남중국해 등 일부 민감한 해역에서 벌어진 관련국 간 해양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실질적 시스템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평화적이며 구체적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역내 해양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핫라인, 2014년 역내 21개 해군이 합의한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책, 수색과 구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제주평화연구원

좌장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발표 및 토론	롤프 마피엘 주한 독일 대사 에릭 월쉬 주한 캐나다 대사 존 프라세티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오준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사주강 전 유엔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
정리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주철기

- 오늘날 아시아 지역에는 북핵 문제, 미중 갈등과 국제경제 문제와 관련된 여러 도전 과제들이 존재함.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커지는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다자적 협력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경우, 이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당면 과제 중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을 발표한 바 있음. 이 구상들은 대화의 장을 확장해 북한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이 함께 해결법을 구축하자는 제안임.

롤프 마피엘

- 독일과 유럽의 관점에서 현재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냉전 종결 이후 세계화로 인해 과학기술·교통·통신 등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발

생했지만, 동시에 국지적 위협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함. 예를 들어 난민 문제, 테러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은 한 국가를 넘어 지역·국제 안보에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이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과거보다 긴밀한 양자 간, 다자 간 협력이 절실했음. 이처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점이 많기 때문에 현존하는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대응 체계, 더 나아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자면, 오늘날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음. 이에 따라 독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된 한편 한국에 대한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짐. 한국과 독일과 유럽연합 간 관계를 살펴볼 때, 독일의 입장에서 한국은 분단의 역사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국가 안보·위기관리 등에 관해 신뢰할 만한 동반자임. 독일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주철기

롤프 마피엘

에릭 월쉬

존 프라세티오

오준

사주강

적으로 협력할 것임. 특히 유엔의 북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함.

존 프라세티오

- 제주포럼의 주제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인 이유는 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은 중국의 부상과 영토 관련 분쟁, 미국의 재균형외교전략, 북한의 공격적인 지도부, 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중국 등 많은 지역에서 국방 예산 증액, 중국의 저성장 등이 있음. 중국의 저성장에도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아시아로 전환되고 있음. 아시아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적극적 협력이 요구됨. 현존하는 여러 문제에도 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역내 국가들의 협력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이 지역에서 다자협력기구의 역할이 중요함.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대국뿐 아니라 중소국들의 역할도 중요함. 아시아의 세기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질서가 마련되어야 함.

에릭 월쉬

- 한국과 캐나다는 국민 간 서로 친밀감을 갖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캐나다는 한반도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 캐나다는 연평

도 포격,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에도 북한에 적극 항의한 바 있으며,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도록 국제사회와 뜻을 함께하고 있음. 지리적 거리와 중견국의 입장에서 모든 지역 이슈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겠지만, 캐나다는 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의 여러 문제에 참여하려 함. 특히, 북극해 연안국 입장에서 캐나다는 한중일 3자 간 북극해 협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3국의 동북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오준

- 오늘날 아시아가 세계경제 성장동력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리더십이 중요해짐. 아시아 국가들은 높아진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고 공적개발원조(ODA), 기후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함.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유엔 내 아시아 지역 그룹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아시아 국가들의 리더십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아시아에 역내 협력 장치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물론 아세안 같은 협력체가 존재하기는 하나, 아시아가 유럽연합과 같이 전체적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개별 국가의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은 급부상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지역 주도 국가들보다 정치적 위상이 낮음. 일본은 전통적 경제 강



국이나, 과거보다 경쟁력이 낮아져 아시아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인도 역시 부상하고 있지만, 빈곤 인구가 상당히 많아 리더로서 한계가 있음. 한국은 국가 크기에 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분단국가로서 한계가 존재함.

샤주강

- 중국과 한국은 친밀한 파트너 국가로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동안 중국은 한국에 많은 지원과 협력 활동을 해 줌. 한국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게 된 것은 한국인들의 근면성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결과이며, 한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함. 중국은 과거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해결했거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중국은 평화적 방법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국과 상호 협력하려 함.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안정을 구축해 2020년까지 중간 수준의 선진국이 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모든 외교·경제 정책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음. 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때

때로 도발을 시도하는 북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큰 전쟁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생각함. 평화와 안정, 번영이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매우 다양해 단결이 어려우나 다양성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아시아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나름의 방법으로 단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통합 모델을 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참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Keywords

아시아 신질서, 협력적 리더십, 다자주의, 아시아 협력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위상이 높아졌음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리더십과 책임감을 지닐 필요가 있음.
-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내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다자협력체 설립이 요구됨.

북한의 비핵화-실천 어젠다

동아시아재단

사회	문정인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공동의장/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와 토론	나모수르 투야 전 몽골 외교부 장관
	판젠창 중국개혁포럼 선임자문관/ 인민해방군 퇴역 소장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 창립자·연구소장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센터장
정리	민인영 서던캘리포니아대학 박사과정

나모수르 투야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수차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지역 안정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 규범에 위배되는 것임.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북 봉쇄를 넘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6자회담 재개와 둘째, 6자회담 참가국 외 국가들까지 포함해 핵문제 이외의 이슈들에 대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임.
- 6자회담은 비록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다자적 제도이므로 그 중요성이 큼.
-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 봉쇄 아래 역내 국가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트랙2 차원에서 신뢰 구축과 상호 이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임.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 야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몽골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도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트랙1,5와 트랙2 차원에서 북한 관리들을 초청해 안보에서부터 경제 협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로 교류를 하고 있음.

판젠창

-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남북한의 첨예한 대치와 한반도가 아직 휴전 상태임을 고려할 때 안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므로 마치 북한의 행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듯 대하는 자세는 북핵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임.
- 새로운 평화적 해결의 창을 여는 방안으로 대북 봉쇄가 아니라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한 강경책은 감정을 설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풍



문정인

나모수르 투야

판젠창

피터 헤이즈

황용수

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큼.

- 위 제안들은 사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 6자회담을 재개하고 그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될 것임.

피터 헤이즈

- 북한 핵문제를 중국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만약 중국이 미국과 한국 내 강경론자들의 바람대로 북한의 붕괴를 조장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중국 자신의 이익에 반할 뿐 아니라 역내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임.
- 북한 붕괴론은 1980년대부터 있어왔지만 장래에도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대북 봉쇄 정책도 일반인들의 비인간적 삶을 더 악화시키고 오히려 북한 지도부가 핵무장을 정당화할 명분만 제공할 뿐임.
- 북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핵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 핵위협 사용의 제한을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절실함.
- 이와 같은 포괄적 문제 해결 방안이 실현되기 위

Keywords

북핵, 비핵화, 봉쇄 정책, 북한 붕괴론

해서는 한국전쟁 종전과 함께 북한과 미국 간 평화협정 체결, 역내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평화 선언, 역내 비핵화 지대의 선언 등이 필요함.

황용수

-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게 어떤 종류의 '달콤한 당근'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한 가지 매력적인 당근은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거나 발전 시설을 제공하는 것임.
-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최근 이란과 협상에서 채택되기도 했던 연료 대여와 사용 후 연료 반환(Fuel Leasing and Take Back)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미국, 한국, 일본의 주도로 채택된 대북 봉쇄 정책은 북한의 핵 무기 포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적대적인 반응을 조장하기 때문에 봉쇄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봉쇄 정책의 실효성은 판단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새로운 한중일 협력 관계 구축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일본연구센터)

사회	정상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소장
기조연설	양허우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발표	귀엔원 중국외교학원 교수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학교 교수
토론	조희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소장 신봉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구자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객원교수
정리	박명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객원교수

양허우란

- 1999년 이후 한중일 3국 간 협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음. 재해 관리, 핵안보,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성과를 이루었으며, 3국 간 교역은 2006년 대비 2배 늘었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3국 환경장관 회의는 제도화되어 18차 회의가 진행된 바 있음. 한중일 3국은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0년 3000만 명 방문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문화수도 3개국 문화교류포럼, 한중일 3국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한중일은 지리적·문화적 인접성이 높으나, 3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아직 10% 정도로 낮은 가운데, 교류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편 양국 간 역사·영토 문제가 여전히 있으며, 북한 핵문제는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과 글로벌 노력을 방해하고 있음. 한중일 3국은 새로운 협

력을 위해 이러한 이슈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3국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3국의 공통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이즈미 하지메

- 북한에 대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주로 북한 핵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3국 간 협력이 필요함.
-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함. 첫째, 과거 남북 간 협의되었던 남북합의서, 비핵화 선언, 2000년 6·15 선언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이 노력하고, 중국과 일본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함. 기존 합의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합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둘째, 한중일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



정상기 양허우란 권연진 이즈미 하지메 조희용



신봉길 구자선



회의를 정상화해야 함. 과거 한중일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은 최고지도자가 참여했으나, 중국은 총리가 참여했음. 과거 북한에 대한 정치적 발언이 어려운 중국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구상할 필요 있음.

권연진

- 3국 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 간 발전이 기반이 되어야 함. 다오위다오(센카쿠 제도)와 위안부 문제는 양국 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양국 관계는 이성적 대화, 상호 이해, 상호 수용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루게 됨. 대화를 증진시키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정치지도자뿐 아니라 시민 차원의 이해가 중요함.
-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함으로써 3국 간 경제협력 관계의 심화를 이룰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함. 일본은 미국의 정

치적 압력 때문에 3국 간 FTA 추진에 소극적임. 향후 한중일 FTA 협상에서 일본의 태도가 중요함. 일반적으로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양립 불가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 TPP와 한중일 FTA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동아시아 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TPP등 지역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아세안+3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 아시아태평양 협력에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아세안은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음. 동아시아에서는 아세안이 주도하고, 한중일에 의해서 강화되는 프로세스가 더 적합함.
- 초기 일대일로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양국의 산업구조가 중국보다 고도화된 데 기인함. 중국은 더 많은 국가들이 일대일로에 참가하기를 원함.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혁신경

제, 일본의 혁신정책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 각국은 개별 국가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 전략적 협력을 이룰 수 있음. 3국은 인터넷,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등에서 공동 연구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음.

- 동아시아 공동의 가치를 육성하기 위해 인적 교류, 특히 청년층의 교류가 필요하며, 싱크탱크는 이론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동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공할 수 있음. 3국 간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공동의 연구와 제안을 정치적 리더들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함.

조희용

- 한중일 3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함. 한중일 3국은 갈등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협력, 교류의 역사를 지속해옴.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임. 단, 각국이 가지는 외교적 가용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각국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함. 한중일 3국이 중시해야 할 점은 첫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둘째, 각국의 모든 가용자원을 역사·영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당분간 3국 협력이 용이한 소프트웨어 이슈와 비전통 안보 분야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민간 교류 확대와 각국 정상 간 대화를 정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넷째, 한중일 3국 정부가 협력사무국 기능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구자선

-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각국의 생각이 서로 다름.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국력 확장에 위협을 느끼는 반면, 중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설정된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고 보고 있음. 한국은 중국의 국력 확장에 대한 위협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우려함. 향후 동아시아 질서의 현상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극단적인 갈등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 첫째, 공동의

관심사 발굴이 필요함. 둘째, 정상 간 대화 외 안보 협력에 대한 직접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셋째, 한중일 협력사무소를 3국으로부터 독립시켜, 독립 싱크탱크를 만들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신봉길

- 한중일 협력 강화를 위하여 첫째,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가 필요함. 둘째, 한중일 3국 협력기금을 확대해 한중일협력사무소 기능을 강화하고, 3국 간 교류 확대를 도모해야 함. 셋째,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플랫폼이 없어진 가운데 한중일이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 넷째, 3국 간 역사 갈등 문제에 대해 해결이 필요함.

Keywords

한중일 협력, 한중일 FTA,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

정책 제안 및 시사점

한중일 협력 강화를 위하여

- 한중일 정상회의 정상화, 정례화와 채널 확대
-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기능 강화: 한중일 3국 협력기금을 확대해 한중일 협력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총장의 권한을 강화해 3국간 교류 확대 도모
- 한중일이 북핵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사용되어야 함.
-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혁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 각국은 개별 국가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 전략적 협력을 이룰 수 있음. 3국은 인터넷,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등에서 공동 연구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
- 동아시아 공동의 가치를 육성하기 위해 인적 교류, 특히 청년층의 교류가 필요하며, 싱크탱크는 이론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동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공할 수 있음. 3국 간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공동의 연구와 제안을 정치적 리더들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함.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동아시아

국립외교원

사회	신성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연구부장
발표	스도 도모노리 리쓰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교수 위르야 아디웨나 인도네시아 하비비센터 국제관계부장 강선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토론	박은하 주중국 대사관 공사
정리	노유경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연구부 연구원

-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169개 타깃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복지, 인프라, 자연환경 3가지 분야로 구별해 상호 연관성과 영향력이 있는 다수의 공통 타깃을 확인하면서 이뤄나갈 수 있음.
- 역내 국가별로 상이한 개발목표 수립, 이행은 각국의 발전 과정에 서로 영향을 미치며, SDGs에 관련한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영향을 미침.
- SDGs 달성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은 역내 국가들의 상호 목표 달성을 촉진하거나 한 국가의 목표 달성이 다른 국가의 목표 달성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방지하는 협력임.
- 일본은 공적개발원조 현장을 개발협력 현장으로 확대해 비군사적 협력, 민간 안보, 평등 파트너십 중심으로 Post-2015 개발협력 어젠다를 계획하고 있음. 포괄성, 지속가능성, 탄력성 향상을 비롯한 개발협력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분야 발전과 법치, 굿 거버넌스,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 추구에 집중해, 새로운 시대의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통합 우선 과제에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포함해 아세안 공동체 차원으로 정치적 안정, 경제·사회·문화적 발전 분야에서 접근했음. 그에 따라 지난 25년간 각자 목표로 한 국민을 감소에 성공했지만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도시와 지방 간 개발 수준 격차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동남아시아 역내에는 SDGs가 'ASEAN Vision 2025'를 통해 지원되고 있지만, 각국의 국내 정치적 제약과 SDGs 달성을 위한 조율 체계와 운영상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MDGs 미결 과제도 남아 있음.
- 아세안이 지역협력체로서 회원국들의 MDGs 달성에 어떤 협력 방안과 지원을 제공했는지 점검해 앞으로 SDGs 달성에 아세안의 역할과 전 회원국에 걸친 전반적인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강조될 필요가 있음.



신성원

스도 도모노리

강선주

박은하

- 동아시아 역내 지역 협력은 여러 국가가 갖는 SDGs 아래의 공통 타깃 달성을 목표로 할 수 있음. 역내 협력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아세안+3 등 정부 차원의 계획,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 연구,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CSO) 간 협력을 통해 연계성을 국내외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진작시킬 수 있음.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환경적 연결성으로 인해 재난 방지와 회복력 강화 등의 개발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 과제의 효율적 달성은 자원 조달과 동원의 근본적인 변화와 과학기술혁신(STI)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수원국과 여러 분야 협력체 간 자원 조달은 다양한 조합을 통해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임. 또한, 다른 수준의 과학기술혁신을 갖는 역내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정보, 지식, 모범 사례의 공유를 통한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3자 협력의 조직화된 지역협력이 바람직할 것임.

Keywords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지역협력, 동아시아, 자원 조달, 남남 협력, 이행 수단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비슷한 도전 과제를 갖는 동아시아 역내 인접 국가들의 지역 차원 협력을 위한 보편적·포괄적·구체적 계획이 필요함. 추가로 이미 수립된 협력 네트워크 간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 SDGs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SDGs 세부 타깃이 각국의 국가 계획과 예산 수립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인 추진력과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SDGs는 각국 특유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개발 도전 과제에 맞추어 재정비되어야 함. 이는 각국의 국내 정책과 SDGs 간 관계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전제로 함.
- 협력 체제를 계획, 이행,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각국의 목표 달성 기여도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제도를 구축

해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체계적인 후속 조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발 협력을 매개체로 민간 협력, 지역 정부와 NGO·CSO와 협력을 강화해 포괄적이고 공평한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함.
- MDGs 이행 과정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확인해 미결 과제 수행과 SDGs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함. 이를 위해 양질의 자료와 점검 체계가 필수적임.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내 개발 수준 차를 줄일 수 있는 역내 협력체제 수립 과정에서 지역과 각국의 규범과 시민사회, 문화, 민간 부문 참여 등의 요소도 고려되어야 함.
- SDGs 달성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구축해야 함. 개발협력 계획 이행 수단을 확립해 민간 협력과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자본시장 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해야 함.

핵확산금지조약의 미래

동아시아재단

사회	라메쉬 타쿠르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 공동의장/ 전 유엔 사무차장보
발표 및 토론	자안타 다나팔라 과학과 세계의 분쟁에 관한 퍼그워시 회의 회장 라케쉬 수드 전 인도 군축과 비확산 대사 마르티 나탈레가와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사주캉 전 유엔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
정리	최하은 동아시아재단 펠로

- **라메쉬** 핵확산금지조약은 가장 효과적인 핵 통제 체제였다. 현재 지구상의 핵보유국은 한 자릿수이고,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기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승인 핵보유국 5개 국가가 핵 폐기를 피하고 있으며, 핵군축의 진전은 더디다.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1998년 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NPT의 규범적 억제는 비가입국에게 무용하며, 북한처럼 가입했다가 탈퇴한 경우도 있다. NPT에는 상임기구가 없으므로 관리 감독 능력이 부족하다. 5년마다 실행되는 평가회의로 대체되는데, 이 평가회의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왔다. 작년 평가회의는 실패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이제 NPT가 실질적 군축을 이끌어낼 힘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직면한 정책적 어려움을 패널들의 견해를 통해 풀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우선 자안타 다나팔라 회장님께 유엔과 NPT의 관계에 대해 묻겠다.
- **자안타** 스티브 밀러 하버드 교수는 NPT를 두고 정

신분열적이라고 평했다. 국제사회 심리가 복잡해 이는 치료되기 어렵다. 유엔은 행위당사자인 각 국가들이 조약을 등록하고 이행하는 데 그들의 노력을 조화시켜주는 능력밖에 없다. 국가 간 조약은 유엔의 소유물이 아니다. 냉전 당시 미소 갈등 아래 만들어진 NPT 틀은 핵보유국에게 매우 유리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걸 감안한다면 NPT의 기여도는 눈부시다. 가입국은 189개국이며 평가회의가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25년간 조약을 마무리 짓고 당사국 다수가 투표 없이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NPT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은 비확산, 군축,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다. 그러나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에 어느 원칙을 중시할지로 대립했다. 비보유국은 군축을, 보유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했다. 유엔은 이들을 만나게 해주었을 뿐이다. 공식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위치다. 각 행위 당사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할 장을 제공한다.



라메쉬 타쿠르

자안타 다나팔라

라케쉬 수드

마르티 나탈레가와

사주캉

유엔이 실질적인 활동에 나선 경우도 있다. 2010년 평가회의에서는 중동을 대량살상무기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요청을 받았다. NPT의 무기한 연장 합의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끝끝내 이스라엘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결렬됐다. 회원국들의 실망은 컸다. 뒤이어 2015년 평가회의에서는 핵군축과 관련해 진전이 없었고, 중동 문제도 유예됐다. 이대로라면 2020년 평가회의의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다. 중동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 **라메쉬** 핵 통제를 주장해온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유일하게 G20 회원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을 대신해 이 주제를 여러 회의에서 제시해왔다. 마르티 전 장관의 의견을 들겠다.
 - **마르티**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고맙다. 인도네시아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NPT 조약 실행을 위해 여러 수단을 총동원했다. 아세안, 비동맹국가연합, G20을 모두 포괄해 활동했다. NPT 평가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의제는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모든 아세안 국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군축이나 비확산에 대해 많은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우리는 동남아 지역의 비핵화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내 임기 동안 완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모멘텀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NPT 평가회의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무

기력한 상태를 생각해볼 때 다른 가용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엔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겠다. 유엔은 대화를 촉진하는 기능적 행위자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예로 들면, 유엔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홍보해 대중의 공공인식 제고에 성공했다. 앞으로도 유엔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는 분명히 있다. 유엔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라메쉬** 나는 인도계지만 호주를 대표해 이곳에 와 있다. 인도 대표인 라케쉬 수드 전 대사에게 질문하겠다. 인도는 NPT를 반대해왔다. 인도는 NPT의 규범적 잠재력이 소진되었다고 보는가. 일각에서는 인도가 NPT 체제를 훼손했다는 비난도 있다.
- **라케쉬** 인도가 항상 NPT를 반대해온 것은 아니다. 1965년 NPT 최초 결의안 채택에 인도는 분명 기여했다. 그러나 NPT의 세 가지 원칙 중 군축 원칙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이 원칙은 모호해서 핵군축에 대한 어떤 시간적, 물량적 조건도 부여하지 못했다. 그게 인도가 NPT를 떠난 이유다. 인도는 핵 비확산과 군축 원칙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실례로 여러 이니셔티브를 통해 군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NPT 발효 이후 독자적으로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를 발표했다. 그러나 1998년 인도 주변 지역에서 핵 확산이 일어났다. 우리 안보 환경에 위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도는 핵보유국으



로 거듭났다. 지금으로부터 5600년 전, 인도의 한 국왕에게 9명의 현자가 있었다. 국왕은 이 현자들 앞에 바닥 선을 그어주고, 이 선을 지우지 않고 짧게 만들어보라고 했다. 그러자 현자들은 더 긴 선을 옆에 그었다. NPT의 대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NPT의 한계를 안다. NPT 내 5대 핵보유국과 NPT 외 4대 핵보유국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NPT 규범으로 다룰 수 있는가. 예컨대 북한을 NPT 맥락으로 다룰 방법은 없다. 지난 7월 채택된 결의안도 NPT 체제 밖에서 이루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NPT가 비회원국에게 규범 준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NPT 협상 당시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당시 갈등의 중심은 미소였다. 그러나 이제 핵문제는 유럽과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이제는 아시아태평양의 핵규범을 확립해

야 한다. 선제공격금지, 핵무기 비사용, 점진적 핵폐기로 이어가야 한다. 인도는 핵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하겠다는 게 아니다. 1967년 1월 1일 이전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NPT 조항의 개정은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핵문제가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겨오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냉전시대에는 위험 수위가 높았지만 예측 가능한 긴장이었다. 2대 열강을 중심으로 동맹이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않다. 당사국들이 정치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생화학무기처럼 핵무기도 줄여나갈 수 있다면 인도는 이 협상에 가까이 참여할 것이다.

• **자안타** 샤주캉 전 사무차장에게 묻겠다. 9개 핵보유국 중 인도와 중국만 핵무기의 선제공격금지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선제공격금지 협약을 만드는 데 지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나? 또 중국은 NPT 조약하의 핵보유국이라는 특수한

입장에 있다. NPT가 실패하고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 **샤주캉** 중국은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다가 1992년 NPT에 가입했다. NPT의 취약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확고한 군축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이 그 이유다. 중국은 분명히 선제공격금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개발과 개방을 통해 NPT의 강점은 받아들여기로 했다. 유엔은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정부 간 기구다. 국력에 상관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유엔은 회원국들이 원하는 만큼 좋아진다. 유엔은 사무국의 유엔이 아니다. 우리는 NPT 연장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중국 정부는 25년간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도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당시 비동맹 운동에 참여한 압도적인 다수 국가들이 공동으로 무제한 연장을 지지했다. 우리도 중국 정부를 설득해 무제한 연장에 동의했다. 실상 NPT가 없었다면 세계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3대 원칙 모두에서 진전이 있었다. 적어도 2대 열강 냉전 구도와 전략적 핵무기도 사라졌다.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12월까지 339개 이상의 원자로가 평화적 용도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지구상 전체 발전량의 12.5%를 차지하는 수치다. 그렇다 해도 아직 핵군축 분야가 미진하다고 보겠다. 선제공격금지에 대해 동의한다. 인도의 선제공격금지 원칙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은 침묵을 지켜야 했다. 우리는 NPT 가입국이자 핵보유국이므로 인도의 선제공격금지를 인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과거 내가 책임자였을 때 중국 정부는 냉전 당시 5대 핵보유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선제공격금지 조항을 결의하려 했다. 이때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대했고, 소련은 중소 간에만 합의하자고 했다. 그걸로 협상은 결렬됐다. 중국이 핵실험을 처음 실시한 것은 1964년 10월 16일이다. 우리는 일반적이고 완전한 핵군축을 원한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계적 접근이다.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 즉각적인 핵무기 금지를 논하는 것은 실리적이지 못하지만 중국은 이를 지지한다. 인도는 결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인도는 NPT 회원국도 아닐뿐더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데 인도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도의 이러한 결정은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나는 1985년부터 26년간 핵군축 분야에 종사해왔다. 중국은 유엔에서의 지위가 복구된 이래 처음으로 결의안을 작성했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같은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받았다. 핵보유국들은 특별한 책임이 있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대 열강이 앞서고 나머지 국가들은 적절히 따라가야 한다. 중국은 아시아의 핵보유국으로서 책임이 있다. 미국은 물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해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P5국으로 아시아에 존재한다. 한 당사국에 의해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이 폐지됐고 미사일 배치가 촉진됐다. 이는 양적으로 핵무기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 **자안타** 핵군축 이야기를 할 땐 미소 열강에 초점을 맞추 수 밖에 없다. 전체 핵무기의 93%를 보유하고 있다. 이 두 국가가 핵군축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다원주의 체제에 언제 참여할 것인가? 핵보유국끼리 과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비핵보유국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목적에 대한 선언이 없다면 그를 달성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생화학무기는 완전한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실행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핵무기와 관련해서도 검증 가능한 수준의 협약이 발효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Q. 김원수(유엔 군축담당 사무차장) 두 가지 질문이 있

한반도 통일과 국제사회: 국제 언론의 역할

한국국제교류재단

사회	박홍순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인사말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발표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마이클 하워튼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편집국장
	스테판 라가르드	라디오 프랑스 인터네셔널 국제부 편집위원
정리	박민희	한국국제교류재단 대리

통일의 공공재적 이익과 과제

김재천

-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나타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한국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통일이 국제사회의 공공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가져옴.
- 통일의 공공재적 기능으로는 1)북한의 핵무기 제재 가능 2)북한 내 인권 신장 3)환경적 효과를 들 수 있으며, 통일의 수혜자는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동북아와 역내 이해관계자에게도 확산될 수 있음.
- 그러나 통일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공이익이 되려면 많은 산을 넘어야 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2016.1.6. 4차 핵실험, 2016.2.7. 미사일 실험)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대북 제재 방안으로는 1)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2)북핵 감시 강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한미중 간 외교적 연합이 중요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국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통일은 북핵 재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북핵 문제는 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임.

국제 언론의 역할

마이클 하워튼, 스테판 라가르드

- 북핵 문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언론의 압박은 주요한 문제임.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한 점에 공감하며, 남북 분단의 아픔이 국제사회에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북한은 한국의 호의적인 정책에도 계속 핵실험과

다. 첫째, 중국과 인도는 CTBT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두 국가다. 둘 중 어느 나라든 먼저 비준하면 연쇄작용으로 다른 국가들이 비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가? 둘째, 핵무기 폐기 전에 사용금지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A. 라게쉬 국제법적으로 주권국가가 협상을 거부했을 때 이를 다른 행위자가 강요할 수 없다. 14조 때문에 CTBT에 대해 인도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압력을 가하겠다는 전술처럼 보이면서 대중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 이 이슈에서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제네바 의정서에 의해 생화학무기 사용은 금지되었다. 2차 대전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이란-이라크 전쟁 때 화학무기가 재사용되는 걸 확인해서 사람들이 인식했다.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낸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계적 금지뿐이다.

A. 사주랑 생화학무기와 핵무기의 경우가 다른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법은 힘 있는 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화학적 무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기에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이를 금지한 것이다. 핵무기는 다른 나라들은 만들 수 없다는 기대를 갖고 강대국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다. 나도 단계적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즉각적인 금지가 불가능하다면 대안이 없다. 14조가 없었다면 5대 핵보유국만 비준하고 발효된다. P5가 앉아서 결정하면 된다. 보편성이 중요하다. P5국들은 자체 합의가 있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국가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유예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비준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은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혼동하지 말아 달라. 미중은 좋은 관계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러시아, 중국에 가혹하다. 결국 CTBT 협상은 2대 열강의 협상이

돼 버린다. 미국은 국내에서 비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비준하는지 아닌지는 상관 없다.

A. 마르티 국가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다른 국가의 존경을 받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른 차원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다. 많은 국가들이 건설적 리더십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Q. 요르그 알 레딩(주한 스위스대사) NPT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미국의 보유 핵무기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A. 라메쉬 우리 모두 그걸 매우 안타까워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권 초기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임기 말기에 군비 증강을 시도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Keywords

NPT, CTBT, 인도와 중국의 핵보유, 선제공격금지, 핵무기의 점진적 군축과 폐기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NPT가 그간 보여온 장단점, 특히 규범에 강제성이 없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CTBT, IAEA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도와 중국 핵보유의 서로 다른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핵문제가 유럽 미국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겨왔으므로 역내 행위자들의 주의를 요구됨.
- 생화학무기 관련 협상처럼 급진적이고 즉각적인 핵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점진적 핵군축과 폐기에 대한 모호하지 않은 상호 합의가 필요함.



미사일 실험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음. 그 바탕에는 북한의 투명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됨.

- 국제 언론의 역할은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북한 국민의 인권을 위해 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통일을 위한 과제

- 토론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미-이란 관계를 예로 들며 미국이 대이란 협상 때와 같이 북한을 상대

로 협상을 벌일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이란은 미국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을 한국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함.

-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진정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제재 조치가 북한의 체제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가, 북한과 중국의 거래가 감소할 것인가의 세 가지 질문이 통일을 위한 주요 논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북한에 대한 제재는 중요하나, 북한을 너무 강하게 압박할 경우 반발로 인한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박홍순 이시형 김재찬 마이클 하워튼 스테판 라카르트

없음. 미국의 대이란 전쟁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한 반발이 전쟁으로 이어진 예로, 대북 제재 역시 이러한 사례를 주의하며 시행되어야 함.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오만 <데일리 옵저버> 경제부 편집장

- 오만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대상국으로, 원유와 에너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오만은 한국의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짐바브웨 <짐바브웨 헤럴드> 외신 편집장

- 박근혜 대통령이 이디오피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들었음.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의견과 북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북한이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독립운동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민 방문 시 한국의 통일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함.

박홍순

-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에 치중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북한은 그간 동맹 관계를 이어올 정도로 아프리카 국가와 관계가 좋았으나, 이제 한국도 아프리카와 우호 관계를 강화해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

요하다고 생각됨.

Keywords

통일 대박론, 통일과 국제 언론, 통일과 국제사회의 협력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6자 회담 외 사전 회의, 트랙1.5 대화 등을 통해 북한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화해야 함.
- 통일을 위한 국제 언론의 역할로 북한의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언급되었음. 국제 언론인들이 북한의 인권과 현실을 취재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으로 보도해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함.
-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의 이해 대상 국가와 역내권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오만, 짐바브웨 해외 언론인은 각각 중동·아프리카 지역과 협력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역설함. 특히 현재 아프리카 지역은 북한과 오랜 동맹 관계이자 무역을 통한 친북한 성향이 강해, 한국과 우호 관계 증진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 I

제주특별자치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회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인사말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기조연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홍구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이사장
정리	박지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이승환

- 미중 갈등 고조, 한반도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위기 증대, 일본 평화헌법과 안보법안에 대한 갈등 등 동아시아는 현재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 이러한 상황 아래 한일 양국 간 시민사회의 지성들이 모여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가능성과 조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홍사덕

-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화협에서는 이번 세션 주제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을 선택함.
- 이는 한반도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이 평화를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황 인식에서 시작됨.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의 해결을 남북 당국에만 맡겨야 할지, 아니면 이러한 기존의 틀을 변경해서 동북아 전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

고, 이 과정에서 이 세션의 주제가 선정된 것임.

- 오늘 모이는 지혜가 우리 모두의 고뇌를 담아 평화의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

원희룡

-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범지역적 노력이 필요함. 많은 국가가 참여해 집단적 협력으로 구성되는 '다자 간 안보 협력'은 최근 등장한 사이버테러 등과 같은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됨.
- 이러한 다자 간 안보 협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옴. 특히 2001년 출범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를 지향하며 2007년 '제주 프로세스'를 제안하기도 했음.
- 최근 악화된 남북 관계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빙의 시기를 기대하며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광 협력, 생태환경 협력 등 실행 가능성이 높은 평화 협력 과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구체적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사업'과 '한라산-백두산 생태 환경보존 공동협력 사업' 등은 추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제주포럼에서는 확장된 평화의 개념으로 '에너지 평화를 제안하고 있음. 에너지 평화 개념과 이에 기초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은 향후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제주도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앞으로도 제주는 냉전 종식, 남북 평화협력을 위

해 확장된 평화의 개념을 더욱 확산시키고, 동북아의 다자 협력을 재시동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

이홍구

-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배경하에 두만강 이북 극동지역의 한인들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목격하고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하와이나 미주로 망명한 한인들은 미국을 무대로 한 독립운동을 벌임으로써 우리나라에는 크게 좌우의 두 줄기가 생겨났음.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냉전시기가 도래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 분단과 갈등이 고착화되었음.
- 세계는 공동체화되고 있고, 아시아 지역도 ASEAN+3 등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그 방향을 함께하고



이승환 홍사덕 원희룡 이홍구 하토야마 유키오

있음. 제주포럼도 이러한 공동체화 노력 중 하나임.

- 하지만 중국의 초강대국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 세력인 미국과 충돌하며 역내 세력 판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고, 강대국 관계가 재편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세력 변이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었음. 한미일 3자 협력 관계와 한중일 3국의 특별한 협조 관계, 바로 이 두 서클이 동북아시아에 형성된 것임.
- 이러한 협력 관계들이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핵 문제임. 남한이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한 것과 달리 북한은 '우리식'을 고집하는 예외화의 길을 택함. 근래 북한은 더욱 국제사회 제재와 흐름에 반하여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이 군사적 방법보다 외교적,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음. 평화와 번영은 예외성보다는 동질성에서 나오고, 당면 과제들에 대한 선처리에서 나오는 것임. 협의와 협상은 약자가 아닌 강자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므로, 이러한 길로 가는 문을 열기 위해 국제사회와 남북한이 다시 한 번 노력해야 할 시점임.
- 앞으로 도래할 미중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 체계 강화와 한중일 협력 등 두 트랙을 잘 활용해야 하며, 여기에 동시에 포함된 두 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협력해 이 두 트랙을 잘 관리해나갈 때 미중 갈등을 완충하고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아울

러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 내 각 국과의 관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하토야마 유키오

-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함.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며 생각난 것을 제안하고자 함.
- 제주도와 오키나와에 두 회의체를 설치하자**
- 제주도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회의체'를, 오키나와에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회의체'를 만드는 것임. 두 섬이 그렇게 각각 평화의 섬으로 기능하며 서로 협력해 평화를 위해 진전해나가는 것임. 마치 수레의 두 바퀴가 잘 회전하며 굴러가듯 이 두 섬의 회의체가 지역과 동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 이 두 회의체는 왜 중요한가? 동아시아의 한 구성원이나 현재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으로 어디에도 관여하기 어려운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이 회의체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물론 당장은 북한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겠으나,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북한 없이 이룬다는 것은 완전한 평화 달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임. 오키나와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회의체'에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볼 수 있으며, 이런 동력이 향후 제주도 회

의에도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평화, 문화, 교육, 환경, 에너지, 의료, 재난 예방 등 여러 의제들에 대해 각국이 담당하며 논의를 진행해갈 수 있음. 제주도는 평화에 관해서는 전담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상호 신뢰 관계를 증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오키나와와 제주도가 두 회의체를 잘 전개해나간다면 언젠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함. 오키나와 회의에 북한이 스포츠, 문화 등 분야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가능한 일로 여겨짐.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상

- 원희룡 도지사께서 제주도를 자연에너지 섬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매우 공감함. 이와 관련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몇 년 전 제안한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상은 몽골, 내몽골과 같은 사막 지역의 무한한 자원, 즉 풍력, 태양광과 같은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아시아 전역 수급을 담당하게 하자는 구상으로 에너지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결되어 에너지로 인한 운명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임.
- 이런 비정치, 비군사적 영역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 협력 사업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가진다면 북한도 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평화의 길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전쟁을 하지 않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 경제공동체보다도 어찌면 더 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한중일 역사 문제 갈등 해결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의 전제 조건

- 한중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임. 개인적으로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해 피해국들이 "그만해도 좋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점에서 한일 간 위안부 협상은 최종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에게 전달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지는 말아야 하며,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공유해가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공동체 회의를 여는 것이 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함.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 군사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음.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포기할 리는 만무함. 핵 포기를 요구하는 강대국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설득력이 없음.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어한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 핵감축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협의체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군사적 위협에 군사력으로 맞서면 당연히 군비 경쟁, 나아가 큰 전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함. 최대의 억지력은 '대화과 협력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 군사력으로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함.

[전직 외교장관 초청간담회]

동북아 신질서와 한국 외교의 과제

제주평화연구원

사회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발표 및 토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세종대학교 이사장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특훈교수
 정리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 **천영우** 지난 1년간 동북아시아에는 주목할 만한 외교안보상 변화가 발생함. 구체적으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비롯한 핵무장 진전과 대북 제재, 위안부 문제 협상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한일 관계, 동아시아 전략 측면의 남중국해 문제, 미국 대선과 향후 한미 관계 등의 도전 과제가 존재함. 오늘 이 자리에서 동북아시아의 신질서와 한국 외교의 과제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함.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

■ 북핵 문제 해법

• **송민순** 북핵 문제 해결에는 대북 제재, 그리고 대북 접촉과 협상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우리는 제재는 그대로 하되,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 의해 북한 내부가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북한에 관여(engage)해 변화(change)를 가져와야 함. 한편, 내부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북한과

접촉하고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관리(manage)하기 쉽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유명환** 제재 없이 접촉만 한다고 북한의 변화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임. 과거 우리의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은 북한에게 핵실험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어, 결국 제4차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지게 됨. 따라서 북한이 정권 붕괴나, 핵무장이냐 하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할 수 있는 대북 추가 제재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을 설득해 북한의 정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김성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함. 시급한 것은 우리 스스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간 우리는 북한을 말로만 제재했을 뿐, 실제로는 북한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던 것이 패배주의의 원인임. 따라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제재가 필요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제재



천영우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가 계속되면 결국 북한은 대화에 나설 것임. 대북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해야 함.

■ 대북 제재의 강도

• **천영우** 물론 관여정책도 중요하지만, 대북 압박 수준에 따라 북한이 협상에 나올 인센티브의 성격과 강도가 달라짐. 현재의 대북 제재 수준은 북한

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만한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거의 이란과 같이 전면적 제재를 가해야 북한의 행동이 변화할 것인가?

• **유명환** 3대까지 이어진 김씨 세습제라는 구조적 상황에 놓인 김정은에게 핵은 정통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수단임. 따라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와 관련해서도 정권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함.

최근 영토·해양법 관련 판례와 동아시아: 향후 발전과 과제

대한국제법학회

사회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테드 맥도먼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정리	이서연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 **송민순** 대북 압박만이 북핵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협상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 관계 없이 핵실험을 해왔으나 6자회담 진행 중에는 중국으로 인해 핵실험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
- **김성환** 중국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의견에 동의함. 한국은 미국, 중국과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잘 조정하고 주변국들과 협력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 **천영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불거지고 있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 **김성환** 핵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붕괴한 소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핵무장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이보다는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유명환** 우리나라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옳지 않다고 생각함.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 한일 관계

- **천영우**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협상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분분함. 협상 이행과 소녀상 철거 문제, 그리고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견해는?
- **유명환** 소녀상 철거와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의 이행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함. 특히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관련시켜 예산을 지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일본의 도덕적 위치가 하락하는 꼴이 될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 두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야 하며, 재단도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역시 시기상조라고 봄.
- **김성환** 한일 관계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함. 특히 통일의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송민순** 소녀상이 철거될 경우, 그 파장 효과는 엄청날 것임. 국가 간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전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임. 즉, 시간에 쫓겨 충분한 고민 없이 정치적 타결을 이루어낼 필요는 없음. 정치적 선언은 정부가 바뀌면서 또다시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지하여 외교 문제를 다루어야 함.

Keywords

동북아 신질서, 북핵 문제, 대북 제재,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관계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역시 필요함.
- 북한 비핵화에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
- 대북 제재의 목적은 제재 자체가 아니라 비핵화를 얻어서는 안 될 것임.
-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임.
-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협상 이행과 소녀상 철거 문제는 많은 고민과 논의 이후 해결해야 함.



김부찬

테드 맥도먼

이창위

백진현

박경길

이창열

- 1982년 해양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채택되고 유엔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강제적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해양 분쟁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경우 그 사법적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본 세션에서는 유엔해양법재판소의 최신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동북아시아 해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함.
- 테드 맥도먼 교수는 2013년 1월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2016년 7월 판결 예정)을 소개함. 남중국해의 해양 영토와 경계 획정 분쟁의 법적 정치적 이슈는 동북아시아의 이슈와 상당 부분 겹치므로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함. 특히 바다 위로 튀어나온 대상이 유엔해양법상 섬(island)인지 암석(rock)인지에 대한 판단이 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언급함. 이 사건에서 특히 중국의 불출석(non-appearance) 문제를 자세히 다루면서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이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이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검토해 그 해소 방법을 모색했음. 최근 재판소의 법리 해석이 한국을 둘러싼 해양 경계 획정 문제에 갖는 함의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이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였음.

유엔해양법협약은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협약 탈퇴를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이창위 교수는 ICJ의 두 사건을 검토했는데, 우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주요 현안이 되었던 페드라 브란카 섬 영유권 분쟁에 대해 ICJ는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판결하였음(미들 락 섬의 영유권은 말레이시아에 주어짐).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시파탄 섬 사건을 통해 실효성에 대한 재판소의 태도를 자세히 검토함. 궁극적으로 두 사건을 검토해 한국과 일본 간 독도 문제는 이와 같은 재판소의 태도를 고려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평화적인 현상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Keywords

필리핀-중국 중재 재판, 섬, 켈식재판, 독도

- 독도에 분쟁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ICJ 판례는 '분쟁은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유권적 해석을 한 바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독도에 분쟁은 없다'고 결정할 수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 해양 분쟁 문제는 결국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양국의 합의가 없으면 재판소에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도 문제의 경우 정치적 해결을 위해 '현상 유지'를 선택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공감을 얻었음.

제2차 세계대전 관련 미해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 모색

대한국제법학회

사회	전순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아시프 큐레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임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이함준 라메르 에릴 대표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리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BK21+ 법사업팀

-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그 이후 처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관련국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피해자 보상 방안 등 그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이처럼 전후 처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역사적 미해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려할 때 법적 해결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적 정의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정의와 다른 차원의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 따라 역사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아울러 역사 분쟁에서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법상 소급적용금지 원칙이

- 적용되지만, 이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급적용금지 원칙은 관습법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실행 등 국제법 실행상 다양한 격차가 존재한다.
- 역사 분쟁 해결을 위한 특정한 포럼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하에 대화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소급적용 방식으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중일 3국 간 구성한 TCS를 통한 3자간 대화로 역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동북아국제법포럼(ILNEAF)이 국제법에 기반을 두고 한중일 3국이 연관돼 있는 국제법 유관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관련 지식의 축적은 역사 분쟁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 위에 적극적인이며 협력적인 역사적 분쟁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전순신 아시프 쿨레쉬 강병근 임한택 이합준 오승진

동아시아 대테러 대응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과거사 문제의 경우 한일 양국 간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며, 이러한 방식이 한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아시프 교수의 제안과 같이 한중일 3국 간 협의 방식과 지식포럼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1910년대 국제법을 살펴보면 로터스호 사건(The Lotus Case)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상호 동의는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1910년 한일 간 협약의 내용은 극히 정치적이며, 구체적 내용이 결여된 것에 불과하다. 1951년 강화 협약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65년 한일 간 경제협력협약 상 청구권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가

진다.

- 사실상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문제는 1900년대 관점으로 2000년대 현실을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동북아 과거사 문제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과거사 문제는 다양한 국제적 분쟁 해결 방식을 포함하여 제3자적 해결과 대화, 지식포럼을 이용한 해결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Keywords

역사적 미해결 문제, 교정적 정의, 한일 청구권 문제, 1951년 협약과 1965년 협약, 제3자적 해결 방식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중국의 부상은 사실적 변경이지만, 법률적 변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법률 관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경에 대해 평화적 방식으로 법률적 변경을 이끄는 방식을 찾아서 유도해야 함. 중국의 급부상으로 기존 질서에 관한 중국의 새로운 관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탈유리법적 국제법적 접근을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법 체계에 순탄하게 또한 평화롭게 편입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상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방식은 한중 간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음. 이와 달리 한일 간에는 1965년 체제 후 이러한 해결 방식이 사실상 한계를 가짐. 일본의 경우 동북아 문제에 관

해 비합리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이 현실적 방안으로 이해되기엔 곤란하다고 생각됨. 한중일 3국 간 지식 포럼의 확립과 확장, 장기적 운영을 통해 점진적인 방안은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일본의 경우 국제법을 이용해 식민지·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일으켰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 한일 관계와 과거사 문제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긴밀한 발전 필요성이 있음. 다만 과거사 문제와 상호 협력의 문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함. 과거사 문제의 경우 독도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문제 간의 이중 기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의 경우 정치적 해결 필요성이 높음.

대한국제법학회

사회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발표	존 유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교수 로랑 마알리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교수
토론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신용호 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리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서연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 시대별로 각양각색의 테러리즘이 있어왔지만 오늘날 테러리즘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붕괴시킨 9·11 테러 이후 그간의 테러리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종 초대형 테러리즘이 등장했고,

미국은 테러리즘 근절과 예방, 자위권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테러와 전쟁을 치렀음. 이는 새로운 국제법 질서의 출현을 암시하면서 국제법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로랑 마알리 교수는 최근 알카에다보다 이슬람국





최승환 존 유 로랑 마알리 이근관 신용호 김성원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와 한미일 협력의 역할

가(ISIS)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활동은 9·11 이전의 테러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함. 최근의 테러는 자생적으로 자국민에 의해 자국 내에서 발생하며, 특히 아시아에서 지역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

- 존 유 교수는 정규군은 기르는 것도 아니고, 상하관계 없이 전 세계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기습 공격 또는 위장 공격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함. 9·11테러 이후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동맹국들은 이러한 성격의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와해'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동맹국은 도청과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해 돈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작전이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모자이크 이론에 따라 리더를 알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 포착 방법을 사용해왔음을 논의함.
- 이근관 교수는 테러리즘을 정의하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국제 테러에 대한 포괄적인 협정의

초안(Draft 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이 마련되고 있는 최신 움직임을 소개함. 동아시아에서 최근 대테러 대응 법률 제정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테러에 대한 이해가 상이함을 설명하고, 한국에서도 2016년 3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항에서 테러에 대한 정의를 넓게 규정해 야당과 국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음을 소개함.

Keywords

9·11 사건, 이슬람국가(ISIS) 테러, 테러의 정의, 네트워크 대응, 테러 조약 초안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테러리즘은 그동안 국제법에서 개별적으로 정의되어왔지만, 최근 테러의 행태가 다양해지면서 그 '보편적인' 성격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독립운동의 무력 활동을 정의에서 제외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공동의 테러법 제정에 관한 논의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이슬람국가(ISIS)에 의한 파리 테러와 벨기에 테러 이후 새로운 형태의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범죄 발생 위험이 날

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대테러방지법을 마련하거나 강화 노력을 하고 있음. 새로운 형태의 테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국제범죄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대테러 대응에 대한 지역적 차원에서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을 고려해 구체적인 협력이 진전되어야 함.

- 각국의 테러방지법과 지역적 협력 기반 마련에서 유의할 점은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과 '대테러 작용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되는 면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임. 테러와의 전쟁 제도가 인권침해에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양자를 대립되는 법익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조화 방법을 모색해야 함.

한국국제교류재단·맨스필드재단

사회	스캇 슈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발표 및 토론	고토 시호코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담당 연구원 엘렌 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웨스턴 코니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강사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정리	정상락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대학원생

앤드류 여

- 1990년대 초반,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비제도적이라고 여겨졌으나, 현재 아시아의 제도적 질서는 'Complex Patchwork'로 대변되며, 수많은 양자간, 삼자간 그리고 다자간 관계로 변화함.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제도적 질서 변화에 따라 미국의 입장도 끊임없이 변화함. 1990년대 미국은 다자간 협력 요구에 다소 냉랭한 반응을 보였으나 지금은 이를 적극 지지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간 협력을 권장하는 추세임. 또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바 한미일 3자 협력은 명백한 사안으로 사료됨. 특히 북한의 핵 확산 등의 문제는 세 나라간 정책 협력과 정보 공유를 필요로 하며, 한미일 협력 증진은 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이상적인 자유적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웨스턴 코니시

- 한미일 군사 협력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재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봄. 2014년 12월 세 나라는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했으며, 2016년 6월 하와이에서 진행될 한미일 평양합동군사훈련(RIMPAC)을 계기로 미사일 경보훈련 또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이와 같은 한미일 협력 증가의 움직임은 북한 등의 도발에 의해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도발의 부재에도 현재 3자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3자간의 지속적인 협력은 한일 간 양자 협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맡고 있기에 더욱 중요하며, 특히 한일 간 영토 분쟁과 역사 문제 등이 3자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시사하는 바, 3자 관계의 발전 여부는 한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봄. 일본은 미국-일본-인도와 미국-일본-호주 간 삼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일본은 향후 한미일 삼각협력에 더욱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협력 강화를 통해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봄.

고토 시호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중요한 경제체제임. TPP는 오픈 플랫폼으로서 12개국과 40% 이상의 글로벌 GDP를 포함함. 이를 통해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 표준화와 관세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입국 확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정부 역시 TPP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함. 미국의 피터슨경제연구소(PIIE)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TPP를 통해 평균 1% 정도의 경제성장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평균 2~3%인 것을 감안했을 때, 꽤 큰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아직까지는 한국과 일본 모두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지만, 머지않아 국내 수요에 한계가 올 것으로 보임. 또한 새로운 시장과 성장 분야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TPP는 지적 재산, 금융 서비스업, 환경문제, 분쟁 처리 메커니즘과 노동법 등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스캇 슈나이더

고토 시호코

엘렌 킴

웨스턴 코니시

앤드류 어

규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물론 TPP가 완벽한 체제인 것은 아님. TPP로 인해 여러 분야의 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대안은 부족한 것이 사실임. 특히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회적 안정은 경제적 안정에 달려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함. 미국, 일본, 한국은 TPP 체제 내 로드맵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아울러 TPP가 가입국들에게 구조개혁과 사회개혁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함. 한미일 3국은 TPP를 협력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역내 평화 역시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봄.

국이 한국의 국가주권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과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반응이 향후 한중 관계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한국의 복잡한 입장을 고려해 한미일, 한미 간에 대중국 외교를 함께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Keywords

경제협력, 군사협력, 한미일 협력, TPP, 중국의 부상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엘렌 킴

• 현재 아시아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하는 등 한미일 3국이 전략적 한계와 차이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한국이 한중 관계에서 조심스러운 이유는 Δ 한중 간 현저한 차이 Δ 중국에 대한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Δ 북한 문제 관련 통일 정책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임. 하지만 중국은 천안함 사건과 동북공정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한중 관계와 중국에 대한 호감도 하락을 초래했으며, 중

- 현재진행 중인 TPP 협상은 한미일 3국의 중요한 협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바, 더욱 포괄적인 경제성장에 중점을 맞춰야 함.
- 시장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아 한국은 TPP에 가입해야 함.
- 아시아 지역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아시아에서 NATO와 같은 기구는 앞으로 한동안 존재하기 힘들 것으로 봄.
- 미국과 일본은 한중 관계 내 전략적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미국의 지원과 한일 양국 간에 신뢰와 노력을 바탕으로 한 메커니즘이 필요함.
- 한국 정부는 긴밀한 중국과의 관계 유지로 인해 잠재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을 인지해야 하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대중국 외교에서 자국의 위치를 높인다는 것 또한 인지해야 함.

미중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제주평화연구원

사회 **김숙** 전주 유엔 대사

발표 및 토론 **김봉현** 주 호주 대사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연세통 중국 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김우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히라이 히사시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객원교수/ 전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정리 **이영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김숙

- 아시아에서 미중 관계에 다양한 의제가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함.
- 관련국들 역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결국 역내 큰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김봉현

- 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 유지임.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게 된 계기는 중국의 급부상임. 중국의 급부상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변화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의 급부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함. 하나는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되어 동아시아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오히려 미중 양국 모두가 평화적인 질서를 구축해 지

역에 평화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임. 나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 민간 교류의 활성화와 다양한 대화 채널의 존재로 인해 양국 관계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함. 이러한 평화 정착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제언함. 첫째, 역내 중견국으로서 이른바 4개국 연합(Four Countries Coalition, FCC) 역할이 중요하며, 둘째, 중국 역시 역내 다른 국가들과 공통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함.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 본 논의는 미중 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견해임. 현재 세계는 다중심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역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김숙

김봉현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연세통

김우상

히라이 히사시

관심을 돌리고 있고 이에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함. 중국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러시아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도 우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안보적 균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사드 등). 북한 역시 핵실험으로 인해 역내 안보 상황을 힘들게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역내 노력을 경주할 수 있다면 북한 문제에도 긍정적인 해결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사실상 미국과 서방의 정책으로 러시아는 운신의 폭이 좁고 이는 현재 동북아 지역에도 적용됨. 이럴 때일수록 창의적 발상의 전환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세통

- 현 세계는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양극화(미국과 중국)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양극화에서 다른 국가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완벽한 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편향이 불가피한 상황임.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거나 중국과의 관계는 비우호적임.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영역을 구분

하여 균형을 추구하려는 입장으로 간주됨. 사실상 동아시아 지역은 유럽보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이며, 전 세계에서 안보 관련 대화가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 문제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취하고 있는 재균형회기 정책으로, 미국의 이른바 아시아 중시 정책에 중국이 반응하는 것임. 따라서 역내의 안보 불안을 일으키는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은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 차원임.

김우상

- 동북아시아 양자 체제에서 과연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중견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만든 동북아 양자 체제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음.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서로의 핵심 이해관계를 잘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주권이며, 미국의 핵심 이익은 역내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재균형회기정책으로, 중국과의 협력(북한 핵문제 등)을 중시하는 가운데, 기존의 안보 제공자 역할을 넘어 안보 증진자 역할을 고려함.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끼리의 충돌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투키디데스의 함정)임. 현재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는 상수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음. 따



라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은 향후 만들어지게 될 구조를 가능한 한 중견국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함. 즉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중국이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히라이 히사시

-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관계를 논의하는 데 일본의 역할이 약화된 것은 사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대외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미국의 재균형외교정책은 단순히 아시아로의 귀환이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을 중시하는 정책임. 현재 미 대선의 트럼프 현상은 다수 미국인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것임. 중국이 현재 아시아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북한 핵문제와 양안 문제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 처한 입장이 유사함. 즉 일본 역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되어 있고,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과 일본 모두 동북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함. 특히 한국과 일본은 모두 비

핵국가이기 때문에 핵문제에 발언권이 있음. 물론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함. 결국 정치군사적 문제에서는 한미일이 중국에 한목소리를 내고, 경제 문제에서는 한중일이 미국에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Keywords

중견국 4개 연합, 중견국 외교, 재균형외교정책, 비핵화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동아시아 지역은 군사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현재 미국의 재균형외교정책과 중국의 대외정책이 충돌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중견국들은 실리 위주 외교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미중 관계로 요약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음.

동아시아 녹색 평화협력의 새로운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회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발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정성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이이다 데쓰나리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연구소 소장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연구소 소장
정리	이현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홍보팀장

이 세션에서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군사안보적 측면,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환경 분야 중심의 가능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음.

조한범

- 한반도 안보 환경을 진단하면서 미일 중심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하고,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동북아 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
- 동북아 안보 환경과 관련해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핵을 이용한 압박 전략으로 한반도 통일 여건이 근본적으로 악화되었음. 더불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내구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동북아 국제질서는 미중, 미일, 중국과 아시아 등 각국 간 갈등 구조로 역내 외교안보적 긴장이 고조되어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부담이 되고 있음.

• 1945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처벌하지 않고, 동맹화한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인데 이러한 패전 처리가 아시아에 거대한 분단의 획을 그어놓았으며, 지금까지 미국이 만든 분절구조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구조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미일 동맹 중심 체제에서 중국을 압박해 온 구조를 극복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새로운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높여나가야 하며, 우리 정부가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은 동북아시아 경제 통합, 문화 통합, 사회 통합을 통해 세계를 견인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동북아 미래 비전이 될 수 있음.

추장민

- 동북아 환경 이슈와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북아 환경 협력 방안을 모색함.
- 동북아에서 환경 협력과 같은 기능적 협력이 진행



되어왔지만, 이러한 협력이 안보와 역사적 협력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 환경 협력 발전 방향과 관련해 한중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몽골, 러시아, 북한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환경오염 물질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협력 체 건설이 필요하고, 전통적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과 재난성 환경오염에 대한 긴급대응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역협력체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여기서 중요한 곳이 북한임으로 북한의 재난에 대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환경 협력도 강화해나가야 함.

- 기후변화 협력과 관련해,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에 북한 기후안전지원협의팀을 설치해 협력 구조를 만들면 동북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환경을 통해 동북아 안보 협력을 이끄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동북아 그린벨트 구축을 통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그 시작을 두만강 하류지역에 대한 협력부터 시작해나갈 수 있다고 제안함.

정성현

- 1996년 시작한 남북 강원도의 협력사업 경험을 소개하면서 남북 환경 협력 사업을 어떠한 인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강조함.
- 기후변화와 관련해 실제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



임강택 조한범 추장민 정성현 이이다 데쓰나리 안병민

었고, 한반도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북한도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뭄을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수계 협력이나 나무심기 사업이 필요함. 이러한 협력은 체제와 이념, 정권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는 북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라는 자세와 인식이 필요함.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인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 결국 나를 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남북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을 보통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후변화와 관련된 나무 심기 등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임으로 우선은 정부가 민간이 북한에 나무 심기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소한 3년은 준비를 해야 하는 사업이니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함.
-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100억 그루 나무를 심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녹색 사례를 만들었는데, 북한에는 최소 300억 그루를 심어야 하는데, 이것이 핵과 미사일로 간다고 인식하지 말고, 미국이 해방 직후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밀가루를 줬듯이 우리도 북한이 나무를 심으면 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함.

이이다 데쓰나리

- 자연에너지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이를 환경 협력의 대안으로 제시함.
- 보통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때 산업활동, 그리고

생활을 통해 배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지만, 에너지 문제부터 보는 것도 필요함. 더불어 우리가 흥미롭고 역동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재생에너지 분야를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음. 작년 한 해만 해도 풍력발전, 태양광 등 큰 성장을 이루었고, 바이오매스와 수력 등을 합치면 약 150만 와트의 재생가능에너지가 생산되었음.

- 지난 10년간 100배의 자연에너지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환경 이슈이며, 최근 에너지 체계를 보면 지역분산형, 네트워크 형으로 바뀌고 있고 선진국도 분산형 모델로 바뀌고 에너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중국은 성공한 풍력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원자력 에너지는 늘고 있지만, 석탄에너지는 줄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5년 전 원자력 사고 이후에 80% 이상의 국민이 원전 폐쇄를 희망하는 등 변화가 있음. 자연에너지의 폭발적인 보급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향후 동아시아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한일중뿐 아니라 대만, 북한을 포함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에너지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대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음.

안병민

- 녹색평화협력의 장애 요인 중 하나인 동북아 인프라 건설 현황을 진단하고, 환경 분야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제안함.

-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관련해, 그동안 경제적 측면의 강조가 많았으나 실제로 TSR, TCR 등 철도가 연계된 지역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철도·도로 연결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시되고 있음. 또한 동북아지역물류협력과 관련해 두만강 유역의 중러북 협력 방안이 많이 논의됐으나 그동안 가동이 별로 되지 않다가, 최근 3자 간 물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협력을 연결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주목해야 함.
- 북중 접경 지역의 환경 실태와 관련해 두만강 무산 지역은 광산에서 나온 물질로 인해 오염이 심각하고, 두만강은 바닥까지 파헤쳐져 개발되는 등 환경 파괴가 심각함. 북한은 하천뿐 아니라 산림 황폐화로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심각해 농업생산량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북한과의 환경 협력이 필요함.
- 한반도의 교통네트워크는 일제하에 일본이 X자축으로 개발했는데, 현재는 북한과의 연결 단절로 해상운송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중국은 북항 운송망 구축으로 거대 경제권 구축, 운송시장 통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서울, 평양, 중국의 대련, 선양, 창춘, 하얼빈 등 삼각축 개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현재 동북아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형성된 미일 중심의 체계와 미중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해나가야 함. 한미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더라도 한국, 일본, 중국이 새로운 동북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동아시아 공동체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함. 한중일에는 이미 하나의 생활,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외교안보 문제가 이러한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극복해나가야 함.
- 한중일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면 북한을 끌어들이야 하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도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므로 한중일이

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개발논리 중심으로 환경을 무시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북한의 경우 교통 관련 네트워크가 거의 철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발과 환경을 고려한 패키지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 체계를 통해 유라시아 개발과 환경 협력이 동시에 되어야 함. 또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역내 사업을 만들어 발전시켜야 함.

Keywords

한반도 안보환경, 동북아평화협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동북아 생태평화벨트, 동북아 환경 협력, 기후변화, 지역 환경 문제, 동북아 환경 이슈, 다자 간 환경 협력

새로운 평화 문화를 만들어야 함.

- 최근 동북아 지역은 경제성장을 위해 인프라 구축 등을 강화하고 있고, 북중러 협력을 비롯해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구상 구체화 등 유라시아 지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협력과 개발이 환경을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개발 협력이 생태적 개발로 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군사적으로 평화를 절대 이룰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한일중 3국이 모두 과거사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내야 하고, 환경 분야가 3국의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드는 분야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재난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여기에 북한도 끌어들이면서 평화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야 함.
-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밀착 역할이 생태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임.

중견국가 공공외교의 재고: 기회와 제약

동아시아재단

사회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발표 및 토론	폴 에반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 리우 세계문제연구소 교수 에블린 고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대학 전략정책학 교수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겸 교수 스캇 슈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정리	최하은 동아시아재단 펠로

- 김태환 공공외교와 중견국가란 용어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흐름이 존재하며 (메가 포스), 서로 영향을 주는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지리적, 공간적 경쟁이 심화되었고 군사력을 통한 외교에서 국가 간 균형과 이를 통한 국제질서의 형성에 대한 외교로 외교정책의 목표가 바뀌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혁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지정학적 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 발달의 도움으로 다양한 주체가 행위자로서 힘을 얻고 있으며 이에 테러 그룹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국제 무대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슬람국가(ISIS), 종교 단체 등이 등장하며 전 세계적인 이슈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와 무관한 범세계적 정체성을 띠고 있다. 지역 경계가 무너지고 공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의 확대와 더불어 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도 점차 국경이 사라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파워가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했고, 관계를 이용하는 이러한 힘은 기존에 있던 권력과 결합해 더 큰 파급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양상의 권력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기술 혁신과 지정학적 요소의 변화 등이 결합해 생긴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공공외교의 탐구 영역이다. 공공외교는 정부가 아닌 국민을 목표로 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목표 달성의 도구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존과 차이가 있다. 공공외교는 현재 학문적으로뿐 아니라 실무 외교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미중러 등 다양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중견국 이론의 창시자인 폴 에반스와 떠오르는 신진 학자 에블린 고, 지난해 <중견 국가 중심 동아시아 공공외교의 이해>라는 책을 출판한 손

열 교수, 최근 <중견외교 국가로서의 한국>을 집필한 스킷 슈나이더와 이와 관련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먼저 폴 에반스 교수에게 질문하자면, 1세대 중견국가 출신으로 중견국가에 대한 정의와 그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폴 에반스** 중견국가는 두 세대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1세대 중견국가는 50년대 냉전 이후 형성되었으며, 당시 일련의 국가들이 가진 공통점을 보면 1)국제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당한 역량 2)국내적, 국제적으로 규칙 기반 시스템에 대한 지지 3)다자 기구에 대한 깊은 관심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 국가는 규율을 바탕으로 서로 간 갈등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고자 했으며, 평화, 안정, 갈등 해소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2세대 중견국가는 현재의 중견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1세대 국가들보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견국가의 과제는 과거와 같지만, 그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2세대 국가들이 마주한 도전 과제를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른 원칙 기반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권력 이동을 지켜볼지 등이 있다.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으로 인한 강대국 질서 변동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 역내 긴장 완화 문제 등에 있어 어떻게 규율 기반 시스템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추후에도 G2의 역할은 안정되지 않을 것이며 이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통합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중견국가들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위치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를 찾고 이들과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기초가 될 것이다. 캐나다는 지난 10년간 중견국가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는 그러한 기초에서 선회한 상태이다. 점차 자국의 목소리를 내며 중견국가에서 벗어나려 노

력하고 있다. 과연 캐나다가 중견국가이고 싶어하는지 혹은 힘의 이동을 원하는 것인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등은 캐나다의 추후 고민거리이다.

- **김태환** 사실 대부분의 중견국가는 국가의 물리적 힘과 강대국과의 경제적 비교우위 등에 의해 규정된다. 이 외 중견국가를 정의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나?
- **폴 에반스** 먼저 국제사회 기여도와 영향력을 꼽을 수 있다. 보통 중견국가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국제질서에 대해 취하는 태도로, 중견국가는 국제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 시스템에 대한 변화 혹은 대체의 의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 중견국가라는 개념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서로 다른 국제질서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로 정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이 중견국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이다.
- **김태환** 일본은 중견국가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폴 에반스** 일본의 저명한 학자 소에야 교수는 일본의 꿈으로 중견국가를 꼽는다. 하지만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권력을 갖기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핵무기 등 군사적 강제력을 갖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 소에야 교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은 가장 높은 수준의 원칙 기반 중견국가이며 다자 기구 지휘, 군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중견국가가 되기에는 미국과 맺고 있는 관계가 문제가 된다. 미일 동맹은 매우 강력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일본의 중견국가 꿈은 이러한 동맹관계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가에 달려 있고, 따라서 중견국가 꿈은 당분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 **김태환**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지속적 상호작용



김태환 폴 에반스 에블린 고 손열 스킷 슈나이더

과 그에 따른 성장이 중견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에블린 고** 중견국가의 카테고리 확장에 영향을 준다. 1세대 중견국가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냉전 종료 직후 승전국과 패전국이 나뉘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견국가로 발전했다. 이들 국가들은 규칙이 기반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잘 지켜왔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기존 국제질서에 편승해야 했고 규칙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견국가는 지정학적 상호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요소에 대해 판단이 불필요했으나 오늘날의 중견국가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기와 미국에 안보적으로 의존하기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김태환** 미중 간 상호작용을 보면 강대국 사이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상황이 중견국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손열** 에블린 고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현재 국제정치를 보면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지리적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네트워크 정치가 등장했다. 네트워크 정치란 더 많은 주체들이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의존하는 정치를 일컫는다. 권력이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 능력, 즉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동의하는 다른 국가를 끌어들이는 능력에서 발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단히 복잡한 시기이며 기존의 정치와 네트워크 정치가 상호 연결된 두 개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면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성 증대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정치와 네트워크 정치 두 층이 연계되어 더 큰 영향력이 발생한다.

중견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의는 변화 중이다. 건설적으로는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중견국가의 역할이 재정의되고 있다.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한국은 자원 능력이나 군사 능력으로 보았을 때는 중견국가이지만, 지정학적 주변에 4개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중견국가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 지평이 좀 더 넓은 다른 분야에서는 좀 더 많은 주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 참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다자 기구와 다자 협정이 생겨나고 있다.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고 제도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비전통적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태환** 한국이 현 국제정치의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 **손열** 세 가지 역할이 가능하다. 첫째,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 간의 링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칠레 등이 이러한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잘하는 국가들로, 한국은 무역 등의 분야



에서 충분히 다리 노릇을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는 평행선을 그리는 두 개의 개별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한국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 아시아·태평양 무역네트워크와 아시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간 조화를 이뤄 하나의 네트워크로 진화시킬 수 있으며 혹은 네트워크 디자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네트워크의 구축 자체는 강대국의 역할이므로 한국은 여러 기구가 협력 관계에 있을 경우 네트

워크 재구축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스캇 슈나이더**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도전 과제는 분명하다. 한국은 과거 체스 경기의 관찰자였다면 이제는 행위자로 입장이 바뀌었다. 주체적으로 자국의 위치를 규정하고 적절한 공격을 해내는 것 모두 한국의 역량에 달려 있다. 중견국가는 강대국처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은 복잡하다. 한국보다 인터넷 자산과 금전적 자본이 많은 나라는 대단히

많다. 명확한 시스템이나 규칙 없이 역동적인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자산은 많은 부분 미국과의 동맹에서 비롯된다. 이는 1세대 중견국가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실제로 한국은 캐나다와 같은 1세대 중견국가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또한 중견국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중견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외교정책 변천사를 살펴보면 지정학적인 특징으로 인해 늘 균형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중견국가로서 이상은 한국의 정체성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의 정체성은 과거 반공, 반제국주의 등 부정적인 형태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인 형태로 점차 변화하는 중이다.

- **폴 에반스** 다시 중견국가와 공공외교의 정의로 돌아가보면, 오늘날과 같이 다각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관계 형성으로 인해 중견국가와 공공외교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공공외교는 정부가 대중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중이 나서서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기는 것이 있다. 기존의 중견국가들은 공공외교를 적절하게 이용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대인지뢰 관련 문제를 직접 상대국가의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며, 정부가 아닌 NGO와 소통해 대인지뢰금지 캠페인을 펼쳐 원하는 바를 이끌어냈다. 정부가 시민 네트워크를 이용해 안전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호주 또한 핵문제에서 시민사회와 연계해 중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중견국가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와 해양 자원 분배 등 다양한 갈등 사항에 대해 새로운 협력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자면 21세기 중견국가의 특징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 측 인사가 아니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 또한 특정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 **김태환** 공공외교의 행위자 대부분이 NGO이고 그

기반이 탈영토화라는 것이 흥미롭다. 인권, 대인지뢰, 기후변화 등 구체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되었는데, 중견국가가 공공외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틈새 이슈(niche issue)'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권, 전쟁, 기후변화 등의 문제도 해결 가능할까?

- **에블린 고** 현재 세계는 매우 복잡하므로 '틈새'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틈새 이슈가 이제는 더 이상 틈새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 일례로 남중국해 문제는 더 이상 틈새 이슈가 아니다. 어업 관련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인구 증가와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어족 자원 수요가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더해졌고, 따라서 이전까지와는 달리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의 틈새 이슈로는 금융 관련 사항들을 꼽을 수 있다. 중견국가와 중소국가는 국제사회와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공공외교를 통해 금융 관련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융 규제 강화 또한 중요한 논의거리가 될 수 있다.

- **손열** 전통적 안보 분야 혹은 경제 분야에서도 중견국가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한국은 국가의 지위나 크기로 봤을 때 중견국가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중견국가의 역할은 캐나다 혹은 호주가 정의한 것으로, 실제 한국이 처한 상황은 이들과는 다르다. 한국은 주요 정책에 집중해 실질적인 안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4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안보 딜레마에서, 외교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 정부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만 중견국가 외교를 도입하고자 하나 이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만의 중견국가 정의를 세우고 역할을 수립해 외교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김태환** 강대국 간 물리적 힘의 문제와 공공외교의 문제는 서로 별개인가?

- **손열** 국제정치는 두 층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강대국 정치의 연속 진행 중에 다른 아이디어들이 섞이는 것이다.
- **스캇 슈나이더** 중견국가와 관련된 이슈 중 국가 브랜딩 이슈가 있다. 이와 관련해 첫째, 비교우위를 고려해 브랜딩해야 한다. 자국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G20, 핵안보정상회의, OECD 회의 등 정부가 먼저 어젠다를 만들고 주최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브랜딩의 중심이 분산되어 이로 인해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었으며 발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질의응답]

- Q.** 일본의 중견국가로서 꿈에 대해 질문한다. 높은 GDP와 미일 동맹관계로 인한 큰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은 중견국가라고 생각하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캐나다인들은 국제 외교에서 자국의 교두보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캐나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를 조율하는 능력에 대해 의문이지만, 미국과 지리적 이웃 국가라는 점에서 공공외교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캐나다가 중국에 외교적 제안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 Q.** 중견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견국가에는 다양한 정의가 포함되고 성숙한 국가까지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중견국가에 대해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그 의미를 좁히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 중견국가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 Q.** 한국을 중견국가라고 정의할 때 두 가지 위험성이 발생한다. 첫째, 대중을 교육할 때 한국이 '중

간'이며 중립성을 띤다고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을 애매한 회색 국가, '박쥐' 같은 국가로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안주의 위험성이 생긴다. 중견국가로 안주할 경우 더 큰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스스로에게 애매한 수준의 책임, 원칙, 리더십 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잘못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Q. 중국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다. 중견국가로 정의하는 기준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 기준이 크기냐, GDP냐, 역할이나, 권력이나 등에 따라 중견국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견국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현재와 같은 국제 시스템 환경에서 유엔, 금융질서, 대테러,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중견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중국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중견국가이나 국제 이슈와 관련해 이보다 큰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있다.

A. 폴 에반스 중견국가 개념은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강대국들의 중간에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그 상호작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견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그동안 중견국가들 간의 연합은 사실상 어려웠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연합이 가능하지만 동맹을 맺기는 어려웠다. 지금까지의 연합 중 가장 앞서나간 형태는 G20이다.

캐나다는 10년 전 중견국가라는 정체성을 폐기했다. 중견국가라는 정체성이 '행동하지 않음'과 '애매함'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견국가의 정의가 교두보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반면 중국은 중견국가의 정의에 호의적이다. 문화

혁명 시절, 중국은 캐나다와 외교 협력을 지속적으로 원했다. 지리적으로는 미국과 근접해 있지만 국가적 성격을 비롯해 냉전을 종식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이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게 중견국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며, 중국은 이러한 중견국가의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연합, 영역을 형성하고자 한다.

A. 에블린 고 폴 에반스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중견국가의 범주에 대해서는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덧붙여 공공외교에 대해 언급하자면, 한국이야말로 공공외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방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며 무엇보다 신뢰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과거의 역할과 별도로 이러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 손열 강대국도 약소국도 아닌 중간 지대의 국가를 다 묶을 수 있는 개념은 사실상 없다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위치를 고려해봤을 때 중견국가라는 개념은 스스로의 위치를 재점검하게 한다. 중견국가는 지속가능한 개념은 아니며 모든 국가의 방향성을 대변하지도 못한다. 다만 중견국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꿈과 비전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게 한미 동맹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그 이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인정과 국내적 변화 양자가 모두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공공외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치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되,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

A. 스캇 슈나이더 이전에도 한국이 과연 중견국가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한국

에 중견국가 담론은 새롭게 등장했다. 개인적으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국제정치는 지정학의 부활과 눈부신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중견국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수 있음.
- 1세대 중견국가들이 냉전 이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규칙 기반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잘 지켜왔다면, 오늘날 2세대 중견국가들은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복잡한 환경 속에 원칙 기반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권력 이동을 지켜볼지 등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 21세기 중견국가들의 역할은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위치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를 찾고 이들과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기초가 될 것임.
- 한국의 경우 자원이나 군사능력으로 보았을 때는 중견국가이지만, 지정학적 주변에 4개의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어 중견국가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 비전통적 분야에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오늘날 다각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관계 형성으로 인해 중견국가와 공공외교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 정부가 대중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대중이 나서서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기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통해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음.

동아시아 국제관계, 이론과 실천

제주평화연구원

사회	은용수 한양대학교 교수
발표	이브 티버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 후 치우핑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교수 차닌티라 나 탈랑 태국 팀마삿대학교 교수 막무르 클리앗 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
토론	청초위 쿠익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교수
정리	모춘홍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기रो에 선 동아시아 경제질서: 통합이나 경쟁이나

이브 티버힌

-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치열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특히 패권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협력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 무엇보다 전환기 동아시아 지역 시장 혹은 협력은 안정적인 제도 없이는 올바르게 작동하게 힘들다고 판단됨.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규범 혹은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패러독스, 구체적으로 통합이 증대되는 동시에 분절 또한 늘어나고 있음. 통합과 분절은 글로벌, 특히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다면적인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음. 동아시아 지역의 패러독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됨.
- 통상적인 상태가 아닌 현 시점에서 새로운 규칙을 둘러싼 역내 국가들 간 갈등은 심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희망적이고 창의적인 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 또한 분출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중견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전략적 안정

후 치우핑

-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는 (군사적) 도발과 같은 위협 요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이를 '전략적 안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면, 세력균형이라고 할 수 있음. '전략적 안정'이라는 개념은 그 유용성 혹은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치적인 현상을 통해 분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동아시아의 경우 각국의 국내 정치가 지역 수준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거꾸로 지역 수준의 변화가 각국의 국내 정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전략적 안정'은 '하나



의 의식 있는 관리'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안정' 수단이 활용되었으며, 많은 측면에서 그러한 수단의 유용성이 검증되어 오고 있음. 이러한 양상은 남중국해 분쟁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음.
- '전략적 안정'이란 과거 많이 사용된 개념이지만, 최근에도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북한 문제 혹은 남중국해 분쟁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동남아시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차닌티라 나 탈랑

- 민족 분쟁에서 말레이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 보기 위해서는 아세안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이러한 분쟁은 국내적인 차원에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Ⅱ

제주특별자치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회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발표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이부영 2015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장
토론	후쿠야마 신고 일본 평화포럼 대표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교수 후쿠다 세이시로 입헌포럼 사무국장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리	권지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간사

김영희

- 평소 지론이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임. 최근 독일 통일에 대한 책을 집필하면서 그 지론이 더욱 굳어짐.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1980, 90년대 독일 통일 상황에만 집중해서 시사점을 얻었는데, 약 20년 이후 현재 시점에서 독일 통일을 바라보면 외적 조건, 즉 독일을 둘러싼 유럽의 상황에 독일 통일이 매우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됨.
- 이와 유사하게 한반도 평화 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동북아시아 평화 또한 한반도 평화가 없으면 실현 불가능함.

일본 평화헌법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와다 하루키

- 다층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일급 위험 지대인 동북아시아
- 현재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첫 번째 요소는 북한 문제임. 북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데올로기의 종식과 더불어 한국이 대립하던 중국, 소련과 수교를 맺어 스스로의 지위를 안정시킨 반면,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맺지 않아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오늘에 봉착하게 된 것 같다는 의견임.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도 있었으나 진정한 협력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음. 북한의 계속된 군사적 도발에 대해 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나 전혀 효과는 없고 오히려 긴장만 고조되고 있는 것임.
- 두 번째 위기 요소는 일본임. 일본은 지역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올바른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일관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적인 혹은 지역적인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 그러나 현재 아세안은 많은 정치적 혹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한 규범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즉 국내 정치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고, 거꾸로 국제정치 또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결국 민족 분쟁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아세안은 더욱더 개방되어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서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접촉면을 확대해나가야 함.

한반도 관련 아세안 안보 문제

막무라 클리앗

- 남북 간 분쟁은 서로 다른 두 정치체제 간의 정체성 갈등인 동시에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함. 나아가 남북 간 분쟁은 남북 간 역사적 차원의 문제로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 관련해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북한 체제 변화는 혁명 혹은 붕괴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며, 각각의 논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음. 그 결과로서 북한은 연착륙할 수도 혹은 경착륙할 수도 있음.
- 북한의 체제 전환을 예측해본다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각 시나리오에 따른 아세안의 대응도 다양하게 존재함.
- 아세안 내에서도 북한 또는 한반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아세안은 한반도 문제 또는 통일과 관련해 우호 조약 또는 대화와 협상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세안은 북한 정권의 점진적인 체제를 선호하고 있음. 결국 아세안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인 것이 아닌 외교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아세안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군사적 대응에는 반대하고 있음. 그러나 북

한의 변화와 관련해 아세안은 통일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함. 어떤 나라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또 다른 나라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함.

Keywords

동아시아, 통합, 북한의 체제 전환, 전략적 안정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 요인으로 언급되는 사안들을 단순히 위협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과 관련해 '하나의 의식' 있는 관리 혹은 가치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가들의 이익은 하나가 될 수 없음.
-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위기와 위협을 나누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전략적 안정'의 개념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함.
- 통상적으로 알려진 북중 간 우호 관계와는 다르게 현재 북중 관계 약화가 의미하는 바를 전략적 안정의 개념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김영희 와다 하루키 이부영 후쿠야마 신고 정현백

된 입장을 취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음.

- 세 번째 요소는 중국 문제임. 중국은 공산국가 체제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거대한 성공을 거둠. 중국 경제발전이 아시아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상당 부분을 지탱할 정도임. 중국은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한 국가주의를 내세우며 대국화됨으로써 주변국과 영토·영해 분쟁이 일어나고,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오키나와 문제로, 오키나와는 태평양전쟁 격전 끝에 섬 전체가 미군의 점령 아래 있었음. 오키나와 주민들은 70여 년간 미군의 지배를 견뎌왔고 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이 현재 발생 중임.

일본 평화헌법의 시작

- 일본은 '평화헌법'을 가진 국가로 자칭하고 있음. 평화헌법에 근거한 '평화국가'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본 패전 후 일본 국민들은 '평화국가'에 대한 열망과 비전을 가졌으며, 일본 지식인들은 그 내용을 비무장, 비전쟁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로 주장하며 '평화국가론'이 생겨났음. 이러한 정신을 기본으로 일본 헌법 9조가 만들어짐. 헌법 9조는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염원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었음.
-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당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미국의 참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참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에 야당도 동조함으로써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전쟁이 어떤 해결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경험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함.

- 이러한 상황은 60년간 유지되었으나 작년 아베 총리가 일본 국내에서 이를 개정하기 위한 제안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됨.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한 '평화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 동북아시아 위기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현재 아베 정권의 정책 추진 방향과는 반대로 가야 함. 즉,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에 근거한 '긍정적 평화 외교(Positive Peace Diplomacy)'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국가의 외교와는 다른 개념의 '평화외교'임. 평화헌법 9조는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무력행사는 절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음. 평화헌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평화 외교'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만일 지금처럼 점차 강화 추세인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 계속 의문이 제기된다면 급진적인 정책 전환도 고려해야 함. 특히 미국과 쿠바가 최근에 이뤄낸 외교적 성과는 일본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막대한 피해는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으로 미칠 것임. 그러므로 일본이 평화헌법에 근거한 평화 외교로 극적인



후쿠다 세이시로 박인휘

상황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 일본과 북한이 각각 수도에 대사관을 개설해 1)조건 없는 외교관계 2)상호 무역 3)양국 간 선박 운항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임. 물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물품 제한 등의 사항은 유지되어야 함.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두 가지 구체적 과제

- 동아시아공동체는 지역의 안전을 위한 공동체 형성이 우선이나 먼저 두 가지 과제가 있음. 하나는 빈발하는 지역 내 지진 등과 같은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임. 둘째는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임. 베이징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해서 한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국의 오염은 지역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노력해야 함.
- 동아시아공동체를 논의할 때 미국도 함께 포함해야 하며, 미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실효적인 공동체 형성이 불가능할 것임.

큰 꿈이 현실로

- 큰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음. 꿈같은 이야기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진행한다면, 즉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공동체라는 큰 꿈을 향해 우리가 함께 노력을 경주한다면 갈등과 긴장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동아시아 평화의 조건

이부영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향후 대북정책 전개 국면

-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따라 한반도 전쟁 위기 또한 고조되었음.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상황 아래,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대니얼 러셀 동아태국무차관이 평화협정에 관한 협상 의사를 표명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협상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음.
- 현재 북한의 군사회담 등 대화 제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대응 기조는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남북 대화 개시 등 정책에 전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경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의 의석 확보 노력에 대해 현재 일본 국민들이 안보 법안을 반대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강렬한 염원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베 정권에게 국민들이 헌법을 폐기할 만한 의석 수를 허락하지 의문임.
-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북 정책으로서 전략적 방치를 택해왔으나, 오히려 북한 핵 기술 고도화로 인해 미국에 체감되는 위협으로 다가옴으로써 향후 정책 노선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봄. 즉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 등 새로운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제재와 봉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지난 20여 년간 6자회담과 북미 협상이 지속되며 여러 의미 있는 성명과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번번이 파기되었음. 북한의 체제 붕괴를 여러 사람들이 예상하기도 했으나 20년간 북한은 고립과 제재를 견뎌내고 핵 능력만 더욱 고도화시켰음. 결국 이것은 봉쇄나 제재가 북한 핵문제를 막지 못



함을 의미함.

- 만일 현재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할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과 성과를 폐기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온 것임.

포괄적 발상의 전환을 할 때-‘코리아 프로세스’의 시작

- 결국 이제 북한붕괴론의 환상에서 깨어나 평양과 워싱턴이 대타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즉 정 전체계의 정상화, 북미 간 그랜드바겐을 추구해야 하는 것임. 예를 들면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동안 우리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중앙일보가 제시한 ‘포괄적 발상의 전환’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할 국면임.
- 무엇보다 한국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함. 대화와 협상이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강경하게 분단과 대결 무대의 단역배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대타협 국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역이 되려면 새로운 ‘코리아 프로세스’로 나아가야 함.

- 코리아 프로세스는 단기적으로는 1)남북 대화 복원 2)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3)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재개와 확대 4)6·15, 10·4 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 5)이미 합의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1)서울과 평양에 남북대표부 설치 2)미일의 대북 관계 정상화를 적극 찬성하고 추진 3)북핵 폐기와 평화협정과 연계해 한미 동맹 재조정 4)북러 당국과 TSR, TKR 철도연결사업 논의와 사할린 가스파이프라인의 한국 연결 논의 5)

중리의 산동 가스파이프라인의 한국 연결 논의 등으로 구체화될 것.

- 이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협력기구 발족으로 성취될 것인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동아시아 평화회의’ 발족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임.

박인휘

- 동북아 지역의 특이성, 불안정성의 중심에는 북한 문제를 둘 수 있을 것임. 한국이 ‘동북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유난히 강함. 그래서 동북아라는 하나의 지역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번영하는지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함.
- 동북아는 다른 어떤 지역과 구별되는 두 개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 안보적으로는 민감함과 불신이라는 상반된 질서가 상존하는 것임. 북한은 이 차이를 자기 생존을 위해 잘 활용하고 있고, 한국은 강대국과 비교해 상당히 제한된 외교적 자산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오늘 발표를 들으며 두 가지 의문이 있었음. 첫째, ‘왕이 이니셔티브’라고 표현되는,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구상이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도 회자되고 있는데, 이 두 방안의 결합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 과연 이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해안이 필요한 것 같음. 둘째, 한국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데 비해 일본 사회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음.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이라는 거대 세력 사이에서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함.

와다 하루키

- 북한은 미국과 국교를 맺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북한 핵무기를 바로 없애는 것은 당장은 어려운

문제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나, 최종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하나씩 없앨 때마다 경제협력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형식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일본도 미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점차 이를 벗어나서 동등한 위치의 협력국으로 발전할 것을 바라고 있고 한국도 이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 생각함. 미중러라는 대국 사이에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함

후쿠야마 신고

- 아베 정권은 분명히 미국의 군사전략과 연계하면서 헌법 9조를 파기하여 전쟁 가능한 나라를 꿈꾸고 있음. 이는 결국 동아시아 군사적 위기감을 높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평화운동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일본 평화운동은 아베 정권의 위험한 행동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최근 일본에서는 평화운동을 둘러싼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첫째, 2014년 12월 ‘전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전면적 운동이 발족됨. 이제까지 일본의 평화운동은 공산당계, 비공산당계가 분열해서 행동했으나, 현재 이를 넘어서 조직이 형성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 위원회와 함께 도쿄와 전국에서 평화운동 중임.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처음 있는 현상임.
- 올 3월 ‘안보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국회 앞에 3만 7000명 정도가 운집하여 아베 정권 퇴진을 외치는 캠페인이 있었고, 이후 전국 약 200개 이상 장소에서 5만여 명이 헌법을 수호하라는 운동에 참가하였음.
- 전쟁과 관련 평화헌법을 지키라는 주장의 시민 서명운동에서 12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얻음. 이는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함.
- 둘째, 안보법안 철폐에 관해 각 야당이 힘을 합쳐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외교

공동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안보법안 폐지와 현 정권 타도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함. 참의원 선거에서 큰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참의원 선거에서도 야당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함. 그러므로 여당의 의석 확보를 막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치 한국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된 것처럼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함.

- 셋째,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안보법안, 오키나와 미군 기지 건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등과 같은 개별적 정책에 대한 지지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과반수가 반대하기도 함. 다만 아베 정권에 대한 대안이 없으므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 그러므로 야당이 협력한다면 분명히 정권 교체 등과 같은 변화를 목도할 것이라고 기대됨.

오바마 대통령의 오늘 히로시마 방문이 핵의 폐기 등 평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이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는 의미의 방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됨. 평화를 주장하는 일본의 평화운동 세력은 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현재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한 활동을 계속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후쿠다 세이시로

- 현재 몸담고 있는 입헌포럼은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의 중·참의원 48명이 만든 협의체임. 아베 정권의 독특성은 '일본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으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데에 있음. 아베 총리의 최대 목표이자 그의 두 번째 정권 과제는 바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매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앞으로 아베 총리의 임기가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권이라 할 수 있음.
- 사실 자민당은 이미 야당 시절 '군대 헌법'이라고

도 말할 만한, 개인의 권리를 빼앗는 내용의 무서운 헌법 초안을 내놓았음. 그래서 우리 단체가 '입헌'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현재 700명 이상의 지방 위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는 유명한 학자들도 참여하고 있음. 일본은 전후 헌법을 둘러싼 위기에 지금 직면하여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상태임.

정헌백

-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선언과 함께 한반도에서 국지전 형태 등으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음. 한국 내에서는 언제든 발발 가능한 전쟁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야 하고, 여기에는 시민운동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함. 시민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알고 이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임.
- 이부영 위원장이 제안한 '코리아 프로세스'의 경우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과거와 현재의 상황은 달라졌고 한국은 과거보다 지금 훨씬 남북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음.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가진 성과인 6·15, 10·4 선언을 환기하며 실천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작년 '동아시아 국제평화회의'의 큰 성과는 중도,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모든 의견들이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는 점임. 이를 기초로 한반도평화회의를 따로 결성하기도 함.
- 박인휘 교수가 하신 질문에 대해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경로나 방법보다는 이러한 담론 자체를 어떻게 확산시킬지에 중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함. 즉 한반도 평화 체제 시스템 정착을 위한 담론 확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동아시아재단

사회	문정인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공동의장/ 연세대학교 교수
대표	조첸 프란틸 호주국립대학교 부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외교대학 학장 에블린 고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대학 전략정책학 교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황징 리재단 미중관계학 교수/ 싱가포르국립대학 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리	김가원 동아시아재단 펠로

전략외교의 개념

조첸 프란틸

- 국제사회에서 현재 국가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워지고 있다.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요령은 없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략외교는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체제를 기반으로 한 시각에서 국제 문제를 바라본다. 더 큰 범위의 국제 체제 속에서 국제 금융을 다루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독일 통일은 단순히 양국 관계가 아닌 유럽 안보체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했다.
- 오늘날에는 국제 체제를 지배하는 하나의 주요 아이디어 대신, 미국의 자유주의적 세계 관점과 중국 고유의 세계 조직화에 대한 관념과 같은 서로 경쟁적인 개념들이 존재한다. 중국은 스스로 국제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차별성 있는 전략적 논리를 구사한다. 전략적 논리와 주요 전략(테러와의 전쟁, 중견국 외교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생겨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이해

에블린 고

- 전략외교는 일상의 문제보다는 국가의 이해 혹은 지역질서라는 더 큰 목적에 봉사한다. 전 세계 테러에 대한 전쟁은 하나의 패권국이 내세운 성공적인 전략적 명칭으로 여러 국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 부처들은 서로 다른 영역(안보, 경제 등등)으로 나뉘지만, 이것으로는 전략외교처럼 문제를 처리하지는 못한다.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외교정책이라는 전략적 논리는 아시아를 주요 지역으로 우선시하는 세계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은 재균형외교정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목표 1 이 지역 내 미국 우방들에게 미국의 약속을 확인해 주는 것

목표 2 중국을 억제하고 미국 주도의 체제로 평화롭게 통



문정인 조첸 프란틸 에블린 고 박철희 황정

합시키는 것

목표 3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는 것

- 목표1은 필리핀과 같은 우방국들이 과거보다 모험적 행위를 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는 목표2의 달성에 방해가 되었고, 미국은 애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목표3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 전략외교 없이는 이 신흥 강국이 미국의 현 패권을 받아들여 만들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목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일관적이지 않고, 미국의 행위와 조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략외교적 시각이 필요하다.
- 우리는 오늘날의 복잡한 체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정부 부서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나뉘어 있지만(안보, 경제 등), 이것으로는 전략외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다.
- 상호확증파괴(MAD): 미국의 생활 수준과 민주주의는 중국이 미국의 부채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 전략 논리를 짜내기 위해서, 한국은 자국 내의 이해당사자와 함께, 미국, 중국 등등의 다양한 상대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 한국의 지역적, 국제적 영향력 최적화 방안

박철희

- 한국은 일관된 외교 목적을 추구해왔지만 그 수단은 여러 가지였다. 한반도 수준에서는 북한 문

제의 해결과 한국에 유리한 변화 그리고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현상 타파적 국가 혹은 단일 패권국의 부상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고자 한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한국은 다른 분야(예를 들어 안보, 군사, 경제, 소프트파워)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되고자 한다.

- 한국은 몇 가지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중국의 부상인데, 중국은 때로는 적극적이고 때로는 점진적인 수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른 도전은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일본과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이다.
- 박근혜 정부는 대일본 관계를 회생해, 중국으로 너무 많이 기우는 느낌을 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선택을 했는데, 이는 경제 관계와 북한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관계 개선 권고에도 일본과 대화 단절은 한중일 삼각관계에서 취약한 고리를 만들어냈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서 한국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점진적으로 균형을 되찾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하나의 예는 아베 일본 총리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이다.
-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의지 부족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상호 보완적이기보다는 점점 경쟁적으로 변해가는 중국과

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가 없다. 또한 한국은 최근의 도발 행위에 대한 제재로 북한에 당분간 압력을 가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총선 이후 변화된 국내 정치와 국제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지위에서 오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략외교는 명확한 통제 부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 통제를 맡고 있는지 불확실하고 청와대에서도 전략외교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정부의 의도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화가 부족하다.
- 한국은 외교의 탄력성, 국제화된 인력 그리고 연성적 힘(소프트파워)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전략외교를 더 잘 추진할 수 있다.

중국, 부상국으로서 전략외교 활용

황정

- 미국과 중국은 현재 두 개의 세계 조류에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 국제경제 통합 면에서 이 두 국가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반면, 점증하는 다양성과 다극화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 중국이 사회기반시설 주도의 개발 모델(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미국의 지배적 역할과 달러의 패권(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범대서양무역동반자협정 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 중국은 세 분야에서 전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주요국가' 간 새로운 관계를 선언함으로써 세계의제 설정, 규칙 설정, 미국과의 관계 제도화에서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공동운명의 공동체'를 창출하는 데 경제가 우선하는 '공통의 이해관계'(일대일로 사업, 아시아인프라은행 등)를 구축하여 공동의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이러한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집단안보 체제를 이룩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국제적전략적동반자네트워크(GSPN)를 추진



하고 있다.

- 중국의 선전 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미국의 동맹 체제는 이념적이고, 군사대결 지향적이고, 배타적이고, 불평등하고 미국 지배적인 반면, 중국의 세계전략동반자관계는 가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작동되고, 대결이 아니라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포용적이고, (예를 들어, 상하이협력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세안) 평등한 관계를 가진다고 선전한다.
- 중국은 미국보다 많은 최대 무역 상대국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국가가 미국의 우방이다. 이는 중국이 더 강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국, 일본, 호주가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긴 하지만 이들은 미국과 정책을 같이한다. 이는 미국의 패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기존의 패권에 맞서기보다는 우회적 패권 전략을 추구한다(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 일당 체제인 중국은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으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야당을 지니고 있는 한국은 의사 결정에서 양당 간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지만, 일단 합의가 되면 정책은 일관되게 실행된다.

실크로드와 아시아: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의 세계화

제주평화연구원·뉴욕 뉴스쿨·난양공대

사회 L.H.M. 링 미국 뉴욕 뉴스쿨 교수
 발표 및 토론 림 타이웨이 싱가포르 경영대학 교수
 구마다 나오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위원
 파알 바너지 미국 스미스대학교 교수
 알란 칭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정리 이영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L.H.M. 링

- 실크로드 기풍(Silk Road Ethos)은 남에게 배움을 뜻함.
- 비단 중국의 현재 일대일로 정책에서뿐 아니라 고대의 맥락에서도 실크로드가 중요함.
- 현재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동질화라는 과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타자들에 대해 일방적 기준과 헤게모니를 강요함.
- 실크로드의 고대 맥락은 차이, 다원성, 상호성, 존경, 책임감 등이 담겨 있음.
- 여행자들이 오아시스 마을에 모여 쉬면서 서로 어울리는 것이 바로 실크로드의 의미임.
- 글로벌 오아시스가 필요함. 차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차이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을 뜻함.
- 서로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통합의 공간을 형성함.
- 고대 실크로드의 함의는 다양함.
- 실크로드를 통한 식량의 교환은 다양한 지역의

교역과 더불어 지식의 교환을 의미함.

-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정치를 가능하게 함.
- 연극과 퍼포먼스 역시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함.
-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음.
- 두려움과 거부는 학습으로 승화할 수 있음.
-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관계적 오아시스가 형성되었으며, 미래에도 가능한지를 탐구할 수 있음.

림 타이웨이

- 정화 제독은 해양 실크로드의 선구자임. 특히 말라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정화의 유산에서 해양 실크로드가 상징하는 바가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는 일이 중요함.
- 정화에 대한 기록이 많이 소실되었음.
-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일대일로 정책을 선언한 이후



L.H.M. 링 림 타이웨이 구마다 나오키 파알 바너지 알란 칭 도종윤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이 폭증함.

- 말라카 박물관의 유물 배치에 대한 공간적 의미를 파악하고 관련 당사자를 인터뷰해 연구함.
- 원래 창고였던 말라카 박물관에는 5개의 내러티브가 있음.
- 정화의 원정은 단순히 약탈이나 점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 지향적 성격이 있음.
- 말라카 박물관의 규모나 소장품으로 볼 때 당시 정화의 원정 규모나 기술이 얼마나 대규모이고 진보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음.

구마다 나오키

- 주변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질서, 즉 새로운 것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 고찰, 이는 주변부가

중심부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기도 함.

- 이러한 배경에서 실크로드의 재발견에 대한 연구는 외부 지역으로부터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차이의 대응과 수용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줌.
- 과거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흘러들어온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이를 대체해나가는 부분 역시 실크로드의 은유와도 연관이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미얀마 북부 고산지대 부족에 대해 연구함.
- 국가 시스템 아래에서 길을 잃은 부족으로 7개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
- 동남아는 과거에 중국과 인도 사이의 어떠한 공간으로만 인식함.
- 산악 지대의 카친 부족들은 정치적 단위로도 소

- 규모 단위로 문명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리치라는 학자는 이 지역과 부족에 대해 야만적이라고 묘사함.
- 이 지역은 실크로드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임.
- 미얀마의 개방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동남아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함.

파알 바너지

- 실크로드 기풍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해줌.
- 실크로드 기풍의 유효한 부분은 학자들에게 연구의 대상(정치, 역사 등)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부여해줄 수 있음.
- 물론 실크로드 기풍을 통해 과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님.
- 실크로드 기풍은 유럽 중심적, 혹은 오리엔탈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음.
- 실크로드 기풍을 통해 각국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가능함.
- 실크로드 기풍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는 이미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음.
- 실크로드 기풍은 전통적 의미뿐 아니라 현재적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현재의 중국과 인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음.
-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 연구하는 기존의 연구 방식과는 다르게 실크로드 기풍을 통한 연구 방식은 중국과 인도의 과거 공통된 경험을 통해 다양한 결론을 도출함.

알란 칭

- ‘압둘라 빈 압둘 카디르(Abdullah Bin Abdul Kadir)’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글로벌화에 대해 비판함.
-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윤리적 정치경제임.
- 윤리적 정치경제는 정치경제의 윤리적 문제, 즉 식민지 무역이 증가되면 시민의 안정이 저해되는가

- 에 대해 관심을 가짐.
- 또한 사회계약을 통한 번영에 대해 고찰함.
- 압둘라는 말레이의 지도자들에게 영국의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지적했음.
- 압둘라는 말레이 문명의 쇠락에 대해 경고함.
- 압둘라는 저서를 통해 현재에도 다양한 함의를 전달해주고 있음.

도종윤

- 과거 해상 실크로드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었음.
- 인도 아유타국 공주 출신인 허황후는 한국의 고대 가야국으로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함.
- 신라에도 아라비아 상인들(색목인)이 왕래함.
- 한반도까지 과거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 교역이 활발했음.

Keywords

실크로드, 실크로드 기풍(Silk Road Ethos), 미얀마 북부 지역, 압둘라, 허황후, 해상 실크로드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실크로드 기풍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연구 방법과는 달리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음.
- 실크로드 기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제공해줌.



...
제2장
경제·경영

PROSPERITY

[조 케저 지멘스 회장 대담]

통일한국,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제주평화연구원·인간개발연구원

사회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기조연설	조 케저 독일 지멘스 회장
대담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정리	차완용 한경비즈니스 기자

조 케저 지멘스 회장은 변화에 잘 적응하는 국가는 앞서가는 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적응력, 즉 비즈니스와 사회를 재창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응력의 DNA'를 가지기 위해선 △제조업 중심의 탄탄한 산업 기반 △강력한 교육·혁신 생태계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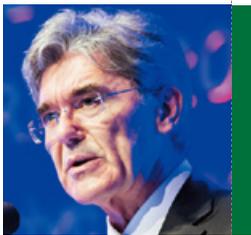
한국은 제조업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GDP의 22%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분명 한국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조업에 투자되는 1달러는 다른 분야에서 1.4달러의 GDP를 추가로 창출한다. 또한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1개 일자리는 다른 분야에서 최대 2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과거에는 산업 자체가 천재 한 명의 특허권을 통해 이뤄졌지만 오늘날 혁신은 협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지멘스는 이 순간에도 연구진과 공대 학생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협업한다고 케저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적응력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가장 중

요한 가치로 '사고방식'을 꼽았다. 글로벌혁신지수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위스를 예로 들며 스위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업가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에서 답을 찾았다. 사내 곳곳에 주인의식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적인 포부이며 이를 토대로 지멘스는 미래에 스스로를 재창조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염재호** 우리는 21세기를 맞으며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문명·산업 등의 전반적인 변화에 기업이 적응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 **조 케저** 지멘스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제품 종류의 50%를 변화시켰다. 이는 그만큼 시대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확실성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세 가지를 관리해야 한다. 첫째, 기업 구성원들의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왜 이 기업에서 일하려고 하는가, 좌절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등 구성원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기가 부여돼야 한다. 둘째,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역량 개발,



조 케저



염재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협업하고 함께 창출할 것인가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 **염재호** 10여 년 동안 50%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꿨다는 말에 놀랐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이다. 사실 기업을 운영하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멘스는 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35만 명 이상의 직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이뤄냈다. 어떻게 가능했나.
- **조 케저** 우선 주인의식을 기본 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리더십이 필요하다. 내가 직원들에게 강제로 일하라고 시킬 수 없다. 직원들 스스로 일하게 해야 한다. 사실 지멘스는 내가 본부와 멀리 있을수록 일을 잘하는 느낌이 든다. 그만큼 지멘스의 직원들에게는 주인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자신부터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보스다. 또한 직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내가 최고의 리더라고 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내 팀과 함께 움직일 수 없다

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팀 행동이 중요하다. 또한 성공을 거두면 각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 지멘스에 근무하는 35만 명 이상의 직원 중 지멘스 주식을 가진 사람은 15만4000명이다. 2020년에는 20만 명 이상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염재호** 지멘스 직원들은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가 하면 교육과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고려대도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다.
- **조 케저** 전 세계가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것이 데이터화됐다. 정보·암기·수학 등의 지식은 이제 크게 필요하지 않다. 그 대신 디지털 기기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인간 사회의 문제는 반드시 서로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지만 사람과 팀의 상호작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화될 수 없다.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내가 똑똑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의 상하 수직적 명령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 **염재호** 지혜가 지식보다 여러 측면에서 좋다고 본다. 다각화된 전문화, 이것이 20세기 미덕이었다면 21세기는 많은 부분이 결합되고 섞여 있다. 대학에서는 단지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소통 스킬이나 윤리의식도 중요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다. 폭스바겐, 미쓰비시 등 소비자에게 불신을 받은 사례가 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좀 더 사회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 **조 케저** 신뢰는 정말 중요하다. 폭스바겐의 연비 문제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멘스는 법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기업 신뢰의 기본이다. 물론 기업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이긴 하지만 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이다. 기업의 크기가 크면 그 책임도 더욱 커진다. 큰 기업일수록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업의 신뢰도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하는지 기업은 직원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완수해야 한다.
- **염재호** 한국은 통일 전 서독과 비슷한 점이 많다. 서독처럼 아주 훌륭하게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세계가 6.6배 성장할 동안 한국은 400배 성장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경제 문제나 주변 국가의 눈치도 문제다. 먼저 통일을 이뤄낸 국가의 기업인으로서 조언해 달라.
- **조 케저** 1989년에 일어난 동독 주민들의 혁명이 독일의 통일을 만들어냈다. 물론 러시아의 영향이 컸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했고 이 사례는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됐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소련은 통일 이전의 동독이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알았고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개입하지 못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등의 주변 국가들은 독일이 통일했을 때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이 될 것을 우려해 반대 성향을 보였다. 그러한데도 독일은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통일을 이뤄냈다. 통일 이후에도 서독 사람들은 동독과

잘 화합하지 못했다. 당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을 도와주길 꺼렸고 우월성을 가지려고 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독일의 통일은 실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독일은 이를 극복하고 당시보다 3배 더 많은 GDP를 달성하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한국 통일은 시간문제다. 물론 처음엔 어려움과 마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간일 것이다. 아울러 통일의 순간을 맞이하는 세대는 가장 운이 좋은 세대가 될 것이다.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세대는 이곳 한국 외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Keywords

변화, 리더십, 가치, 혁신, 주인의식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학교와 기업이 더 긴밀한 협업·협동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제조업 생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통일을 대비해 국민들의 의식 통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J.B. 스트라우벨 테슬라모터스 CTO 대담]

전기차가 몰고 올 생활혁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평화연구원

사회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기조연설	J.B. 스트라우벨 테슬라모터스 공동창업자
대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리	김태현 한경비즈니스 기자

스트라우벨

- 테슬라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다. 전 세계에 걸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교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 모델S는 배터리를 맨 밑에 놓았다. 배터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승객 공간을 넓혔다. 코너링과 가속, 브레이크 성능을 개선했다. 모델S는 지금까지 나온 차 중 가장 안전한 전기차다. 가솔린으로는 이런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 전기차는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연결된다. 모델S에서 이것을 이뤄냈다. 액정표시장치(LCD)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 또한 무선을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구현했다. 기존 자동차에서는 불가능했다. 모델S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업데이트된다. 서비스 문제도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한다. 전기차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슈퍼차저'다. 슈퍼차저는 급속 충전 네트워크다. 30분이면 충전이 끝난다. 모델S로 테스트한 결과 10분 충전하

면 120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3~4시간 달리고 충전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륙 횡단이 가능하다. 캐나다도 갈 수 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일본·중국 등으로 확대 중이다. 전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모델3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최고의 '엑스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슬라의 미션은 가격이 비싼 럭셔리 차량만 만드는 게 아니다. 에너지의 교통혁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데 노력한다. 로드스터는 10만 달러였지만 모델S는 7만 달러, 모델3는 3만5000달러다.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저가 보급 차량을 만들면서도 성능은 낮추지 않았다.

- 테슬라는 생산 물량을 늘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투자했다. 특히 배터리 생산이 중요하다. 현재 '기가팩토리'를 건립 중이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 공장이 될 것이다. 네바다 차오레노에 있는 기가팩토리가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 된다.



J.B. 스트라우벨



원희룡

기가팩토리가 가동되면 에너지 저장비용도 더 빨리 낮출 수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전기차 간에 연결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테슬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팩'과 '파워월'을 출시했다. 가정용 전력망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상업용도 있다.

- **원희룡** 모델3가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다. 획기적 성능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모델3를 주문했다. 예정된 시간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다. 한국에서 테슬라 모델을 판매하려면 슈퍼차저가 필요한데, 설치 계획은?
- **스트라우벨** 모델3는 제때 공급될 것이다. 처음에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우리도 몰랐다. 그동안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은 큰 보람이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술을 축적했고 필요한 전문가도 확보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 프리몬트에 있는 생산 공장이 풀로 가동되고 있다. 원래 도요타가 소유했던, 연간 가솔린 자동차 250만 대를 생

산하던 공장이다. 가격을 낮추는 데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 기가팩토리가 전략의 핵심이다. 3만 달리대에 모델3를 출시하는 것은 배터리 비용을 낮춰야만 가능하다.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 하나의 공장에서 이뤄진다. 물류비 등 각종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꼭 필요한 핵심이다. 한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겠다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충전 인프라를 먼저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원희룡** 제주는 2030년까지 카본프리, 즉 탄소 없는 섬을 추진 중이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100% 전기차로 해결할 것이다.
- **스트라우벨** 이번에 제주도의 비전에 대해 들었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주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 경우가 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자동차를 연결하는 것은 기업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자동차·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은 모

두 연결될 수 있다.

- **원희룡** 인공지능의 발전이 자동차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나.
- **스트라우벨** 인공지능은 사회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고 놀라운 속도로 발전 중이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도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놀랍고 무서울 정도다. 특히 교통 분야는 독특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율주행은 카메라의 이미지를 인식해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잘하지 못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발전되고 있다. 컴퓨터가 훌륭한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100만 마일의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엄청난 주행 경험을 저장해놓았다.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집단적으로 더욱 똑똑해질 수 있다. 자율주행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아직은 자율주행 기술의 초기이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50% 개선이 가능하다. 앞으로 더욱 안전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충돌 불가능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 **원희룡** 테슬라가 많은 국내 기업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배터리나 타이어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 계획이 궁금하다.
- **스트라우벨**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기술 면에서 보면 한국에 대단한 협력업체들이 있다. 우리가 어느 기업과 협력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 모델3 공개 이후 전 세계 공급사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열광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로드스터나 모델S 때는 주요 공급사들이 테슬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공급사들이 찾아와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Keywords

테슬라, 전기차, 슈퍼차저, 인공지능, 모델3, 기가팩토리

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

제주특별자치도·빅뱅엔젤스

사회	김석기 빅뱅엔젤스 파트너
발표	조에리 지아노텐 엑셀러아시아 파트너 임정민 구글캠퍼스 서울 총괄 데이비드 리 선전 오픈 이노베이션 랩 디렉터 정지훈 빅뱅엔젤스 파트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토론	황병선 빅뱅엔젤스 대표
정리	손우림 빅뱅엔젤스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조에리 지아노텐

• 현재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약 6억 명이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2020년까지 4억80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들은 잠재성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장벽을 넘어야 할 것이다. 6년 전 엑셀러아시아를 시작했을 때는 인재를 찾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현재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늘었을 뿐 아니라 시리즈A를 넘어 그 다음 펀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결과를 보면 대부분 싱가포르 국적이 아닌 사람들이 CEO이다. 레드마트는 영국, 그랩은 중국인이 창립자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잘한 점은 외국인 인재를 개방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본다.

임정민

• 작년에 문을 연 구글 캠퍼스 서울은 창업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곳이다. 캠퍼스 서울은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창업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 있다. 스타트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글로벌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캠퍼스 서울에 가입한 회원은 1만3000명을 넘었으며, 450건 이상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열었다. 입주사 9개가 졸업했고, 현재는 스타트업 회사 7개가 입주해 있다. 총 121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약 2.3배 성장해 졸업하고 있다. 현재 구글 캠퍼스는 전 세계에 6개가 있으며, 상파울로는 설립 예정지이다.

데이비드 리

• 지난해 가트너 리포트를 보면 50억의 IoT가 나왔고, 2020년에는 250억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절반이 앞으로 2년 동안만 들어지는 회사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다. 앞으로 어떤 IoT 회사가 나올지 흥미진진하다.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여러 가지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고, 큰 성장이 이뤄졌다. 이 산업 시니어들은 시장 진입에 실패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미래의 스타트업을 보면 사실상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지훈

• 한국은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 위험자

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경우와 달리 스타트업 분야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고 있다. 실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다. 기존의 잘못된 것은 극복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숙제이다. 큰 벤치는 글로벌화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작은 벤치들은 생태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디캠프, 마루180, 구글 캠퍼스 서울 등이 생기면서 스타트업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육성기관(accelerator)들이 많이 생기면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VC(venture capitalist)들의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생기기 시

작했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제2의 벤처 전성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Q.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각국은 어떤 장점, 약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

A. 임정민 한국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스타트업으로 시작하기에는 적절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앱, 콘텐츠, 커머스 시장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 시작하면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본다. 둘째, 창업하기에 좋은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다. 셋째, 글로벌로 나가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다. 중국, 유럽 등으로 진출하려는 의지가 강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A. 조에리 지아노넨 싱가포르의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점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기술 플레이어와 멘토를 가지고 있어 스타트업에게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A. 데이비드 리 중국은 헝그리한 세대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새로운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지 알 수 있다. VC 지원을 못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의 경우 0.05%의 스타트업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시장의 큰 파이를 차지하게 된다.

A. 정지훈 한국 시장은 크지도 작지도 않다. 메이저 시장에서 키우려는 뜻으로 들어온다면 작지 않은 시장이지만, 틈새(니치) 아이템을 보고 새로운 것을 타겟팅해서 들어가기에는 작은 시장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책이나 이코 시스템 문제는 시장을 만드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협회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시장 규제가 많다. 신규 비즈니스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은 파괴되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지려고만 해 시장을 뚫어나갈 수 없게 만든다. 좋

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국내 시장 환경이 어렵다면 글로벌 시장을 타진해야 한다. 아시아 또는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각국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데이비드 리 과거에는 국제시장이 미국과 유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아프리카, 중동 등에도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다. 과거에는 꼭 국외로 나가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국제적인 장벽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A. 정지훈 현재 인터넷서널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들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한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좋은 것을 주고 받아 서로 연결하는 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켓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적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각종 교류 프로그램으로 넓혀나간다면 좋을 것이다. 이런 부문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Keywords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글로벌 진출, 창업가, 교류와 협력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지금까지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주로 말해 왔지만, 앞으로는 외국 창업가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이 스타트업 허브가 되어야 함.
- 더욱 글로벌한 수준의 스타트업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함. 국제 장벽이 많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함. 지난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경제를 만들어왔는지 보고 배울 점은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조영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개회사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표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토론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 아나 베아트리즈 마틴스 주한 EU 대표부 부대사 레아 스투베 타일비아 주한 덴마크 대사관 일등서기관
정리	조경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담당

‘기업과 인권 NAP’ 수립 배경과 필요성

-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인권 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음. 또한 인권 보호와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인권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각 국가들은 국가의 이미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권에 기반한 기업 경영을 제도화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도 인권 경영에 대한 실천을 선언하는 등 자체 인권 정책을 세워 시행하는 추세임.
- 특히 2011년 유엔이 이행 지침을 발표한 이후, 이 이행 지침을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이 광범위하게 수용하면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표준적인 국제규범으로 정착했음. 그 결과 국제사회와 인권 선진국의 관심은 어떻게 이행 지침을 실천할 것인가로 옮겨지고 있음.
- 이러한 이행 지침의 실행과 확산을 위한 대안으

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개발해 실행하는 것이 유력하게 대두됨. 2013년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게 국가별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권고했고, 2014년 유엔은 <기업과 인권 NAP 안내서>를 개발해 발표함. 이후 많은 국가들이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했거나 수립 추진 중임. 이와 같이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해 실행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는 시대적 의무라 할 수 있음.

- 2015년 G7 정상회의(2015년 6월7~8일, 독일) 후 기업과 인권 NAP 수립 노력을 환영하면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지 선언을 했음.
- 그간 한국 정부는 상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비자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기업과 인권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으나, 정책적 일관성이 미흡했음. 기업과 인권 NAP는 기업의 인권친화적 활



조영호

이성호

심상돈



이성훈

제철웅

아나 베아트리즈 마틴스

레아 스투베 타일비아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2016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동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 정책의 일관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기업과 인권 NAP의 목표

- 목표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되어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기업과 인권 NAP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지향함. 이행 지침에 따르면 인권 경영은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1. 기업은 인권정책선언을 해야 한다. 즉, 기업은 스스로 인권 존중 경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2. 기업은 실천·점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실천·점검 의무란 기업 활동에 수반되거나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확인해 사전 예방 조치를 할 뿐 아니라 발생한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사후 교정을 하고, 그 과정을 여러 이해관계인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기업은 인권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기업과 인권 NAP는 기업이 스스로 인권 경영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도모함.

기업과 인권 NAP의 주요 과제

기업이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권 경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 제도화

- 정부가 공공기관장에게 인권 경영을 할 것을 직접 요구하고, 그 성과를 공개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거나 대주주인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 경영에서 인권 경영 실태를 경영진 평가항목에 반영함.

대기업의 인권 경영 권장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법적 의무로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민간기업에 인권 경영을 직접 요구할 수는 없음.
- 다양한 권장 정책을 개발해 추진함. 예컨대 인권 경영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과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권 경영 기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인권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 발굴과 정책 지원,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의무제도 도입, 공공 조달에서 인권 요소 고려 등 활용 방안 추진이 필요함.
- 간접적으로 인권 경영을 유도하는 접근법이 실제로 대기업의 사업 관행을 변화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NAP 추진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을 추진함.

Keywords

기업과 인권 NAP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을 제도화해 공공기관이 인권 경영 정책을 선언하고 실천·점검 의무를 시행하며 그 성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임.
-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지원 심사 기준에 인권에 대한 영향을 반영할 것임.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공적 자금 제공 여부를 판단할 때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임.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할 때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임.
-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임.

동아시아 관광시장의 새 지평: 3국 협력을 통한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회	우메자와 아키마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발표	김진철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실장
	오이시 에이치로 일본관광공사 해외홍보실장
	리바오롱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사무소장
	이계희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정리	브래들리 브래넨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혜민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회문화연구원

- 한중일 3국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현황과 관련 정책이 논의됨. 한국은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전체의 10%에 그치며,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방문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한중일 3국 관광 협력을 통해 역외에서 오는 인바운드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중일 3국의 인바운드 관광 정책이 소개됨. 일본 정부는 관광상품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저가 항공과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켜 2020년까지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바운드 관광객의 국적별 한중일 방문 주요 목적이 소개됨. 일본의 경우 이웃 국가에서 온 관광객은 쇼핑이, 먼 거리에서 온 관광객은 역사와 문화 체험이 주 목적임. 한국은 세계문화유산과 K-팝 문화가 주요 방문 이유로 작용함.
- 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사회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다룸. 관광은 창조경제를

- 돌아가게 하는 엔진이며, 경제성장,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대중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산업 분야임.
- 한중일 올림픽, 럭비 월드컵, 간사이 월드 마스터스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유럽과 미국에서 공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가능성 제시함.
- 한중일이 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호 비자 발급과 교통 서비스 개선과 국가별로 차별화된 브랜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한중일은 유럽, 중앙아시아, 미국-캐나다 관광협력 사례와 달리 서로 다른 언어와 지리적 거리감이 관광 협력의 난점임.
- 제7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으로 제안된 '동아시아 방문 캠페인(Visit East Asia Campaign)'이 논의됨.
- 한중일 관광 협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에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함.



우메자와 아키마 김진철 오이시 에이치로 리바오롱 이계희 브래들리 브래넨



Keywords

한중일 인바운드 관광정책, 관광 협력, 공동 프로모션, 교육관광, 크루즈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동아시아 방문 캠페인'은 한중일 3국이 시너지를 발휘해 동아시아로 오는 인바운드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블록 단위 마케팅으로 3국 관광 협력은 한중일 모두의 예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 테마여행 상품은 유럽과 미국 관광객 유입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교육관광을 테마여행의 예로 들 수 있으며, 이 분야는 3국에서 특새시장이 될 수 있음.
 - 한중일 관광공사와 국가여유국 구미주사무소에서는 현재 3국 간 관광 협력을 높이고 관련 노력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실질적 사례가 존재함(3국 연계 상품 개발과 공동 광고를 위한 3개국 관광공사와 국가여유국 해외지부 MOU 체결 추진과 공동 홍보 활동, 여행업자 펌투어 운영 등).

- 3국의 대표 관광상품을 선정해서 공동으로 홍보하고 수요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제안됨. 또 3국 모두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개발하자는 의견과 3국 지방도시 간 협력을 도모하자는 제안도 있었음.
- 개별 여행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와 SNS 여행 후기 등이 여행 경로 설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됨.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을 방문하고자 하는 고객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등을 통한 연구조사가 필요함.
- 지역 간 거리를 극복하고 한중일 역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 크루즈선 경로 개발을 권유함.
- 한중일 관광 협력에 관여할 각국 관광공사와 국가관광여유국의 분사와 해외 지부 간의 합의와 협의를 위해, 또 업무 중복 지양을 위해 협의체 논의가 필요함.
-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등 기존 협의체를 활용해 한중일 관광 협력을 위한 기술적인 방향성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정부혁신과 협력적 거버넌스

한국행정연구원·유엔거버넌스센터

사회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행정협력센터 센터장
발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닉 포비 가나 센트럴대학교 교수
토론	르영 투 히엔 베트남 호찌민 국립정치아카데미 국제협력국 부국장 칼렌 바다르크 몽골 행정아카데미 교수 김상목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희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정리	윤창록 유엔거버넌스센터 개발팀장

- 정부 혁신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세계가 새천년개발목표의 진전도를 측정하고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의 실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고 포괄적인 공공행정에 대한 논의는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서 정부 구조는 1)지도부 구성 전략, 2)의사결정 수단 3)시민과 협의, 시민참여, 시민에 대한 권한 부여 전략 4)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촉진 수단 5)책임감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공행정을 위한 필수적 수단 6)효율성과 효과를 보장하는 경영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함.
- 가나를 포함하여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부패
 - 부패로 이어지기 쉬운 비효율적 조직 구조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협의 부족, 시민 참여 부족
 -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 부재
 - 정책 지속성 부족
- 개발도상국의 광범위한 부패와 권력 남용 때문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한국에서 시민의 정부정책 결정 참여도에 관한 연구는 중앙정부의 경우 관련 법규 부족과 공직자의 낮은 시행 의욕이 저조한 권한 위임과 시민 참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법적 틀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공무원들이 주민의 요구와 불만에



김신 은재호 닉 포비 르영 투 히엔



칼렌 바다르크 김상목 박희봉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중앙정부에서보다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제 참여도를 고려하면, 정부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전략은 각 정부의 수준에 정확히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관료들은 시민투표, 시민소환 등을 통한 직접 참여보다 자문회의를 통한 간접 정책 결정 참여를 선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문위원회가 정부 관료들이 아니라 시민사회 추천에 의해 구성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임.

Keywords

협력적 정부 구조, 개방된 정부, 정부 혁신, 시민참여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민주주의는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신장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한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 국가발전 전략을 기획할 때는 균형적인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고려해야 함.
- 정부 구조를 정부와 민간 부문, 시민사회가 이루어내는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의사결정이라고 본다면, 훌륭한 정부 구조를 구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소는 공직자들이 자신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머지 두 부문의 지도자로 인식하는 것임. 이 3자는 시민지향적, 효율적 정책을 입안하는 데 서로 보완한다는 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
- 개발도상국의 협력적 정부 구조에 대한 성공적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 선결 조건이 사회에서 충족되거나 적어도 최종 결과를 구성하는 데 고려되어야 함.
 - 사회구성원 간 정보 비대칭성은 사회 불평등을 가져오고 협력적 정부구조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 정보 격차를 최소화해야 함.
 - 시민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 추구해야 함.

-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한 공통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야 함.
- 의사결정의 핵심적 참가자들은 홀로 일하는 것보다 협력이 더 높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 헌법과 법률의 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통치력과 가속화된 발전을 보장하는 지표임.
- 국내 해법과 최선의 국제적 관행을 결합시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최상의 방법임.
- 전 세계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에 일부 국가의 성공 사례는 다른 나라에 쉽게 구현될 수 있음. 국가 간 협력, 특히 남-남 국가 간 협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함.
- 정부는 정책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민참여 방법과 어떤 형식의 시민참여가 특정 정책에 적절인지 고려해보아야 함.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려면 시민들이 공무원의 태도 문제와 관료제 문제를 구분하고, 정부 행태에 익숙해져야 함. 시민들은 공공정책에 동등한 영향력을 요구하기 전에 공무원의 책임감과 비슷한 수준의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함. 정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들과 합의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함. 적절한 법적 틀을 마련해 언제라도 시민사회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한중일 CEO 라운드테이블]

상호 협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제주평화연구원 · 인간개발연구원 · 한중지역경제협회

사회	유상철 중앙일보 논설위원
발표	임수경 한전KDN 사장 리롱 후베이성 군예그룹 동사장 스즈키 시즈오 일본 리브란 회장/ 도쿄유리법인회 기획실장
정리	이제영 시민평화포럼 간사

임수경

- 한전KDN은 전력 계통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안정화와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에너지·전력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임.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동향과 국내 정책 방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 협약을 체결함. 국내 감축 목표량의 3분의 1은 에너지 관리로 가능하며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공급 위주 정책에서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신산업 정책 방향을 수립함.
- 한전KDN은 대부분의 에너지 신산업 영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마이크로 그리드 분야를 들 수 있음.
- 한전KDN은 스마트 그리드화로 저탄소 사회가 실현되는 미래를 추구함.

리롱

- 2003년부터 회사에 새로운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인 포인트 관리제도를 도입해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갖추게 됨. 중국과 여러 국가에서 수만 개 기업이 이를 도입했으며 모든 기업에서 활용 가능함.
- 포인트 관리제도는 직원의 능력, 종합적 퍼포먼스를 포인트로 계량화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기록하며,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함. 그 1차 목표는 구성원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
-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직원의 모든 부분을 대상화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포인트 정보를 볼 수 있고, 포인트를 직원의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스즈키 시즈오

- 기업은 하나의 사회운동체로서 기업이 관점을 바꾸면 아시아와 세계를 바꿀 수 있음
- 아시아의 도시와 주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유상철

임수경

리룡

스즈키 시즈오



공동주택 대부분이 고층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 환경에서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음.

- **일본 열도 개조의 문제점** 일본 열도 개조라는 고도성장의 대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
- **윤리 경영** 35년 전 설립된 일본의 윤리연구소는 윤리에 따른 경영을 추진하고 종말을 맞이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Keywords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경영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전력은 실증 모델 없이 현실화가 쉽지 않은 보수적 영역임. 한국은 우수한 실증 모델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중국, 일본과 협력해 저탄소 사회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사회가 진보함에도 기업의 관리 모델은 과거에 머물고 있어 경영 혁신이 절실함.
- 앞으로 아시아의 도시들을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제주도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한중일에는 세계의 경영을 변화시켜 긍정적 의미에서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의 이익이 될 것임.
- 아시아를 재구축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치·경제적 평가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아시아경제자유네트워크

개회사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축사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사회	존 들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세타풋 수티와르트 나루에퓏 태국 미래재단 대표이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이다 케이스케 도쿄대학교 법정대학원 교수
정리	임성은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부장

- 세계 총 생산량의 40%, 세계 무역의 30%를 차지하는 현존 최대 자유무역 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난해 10월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참가국과 한국을 포함한 비참가국 모두에게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과 함께, 정치·사회적 도전 과제 또한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TPP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 외에도 환경,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분야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른 자유무역협정이 그렇듯 TPP 또한 미국의 지정학적 대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본 세션의 모든 토론자들은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이기에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에는 찬성하나, TPP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특히 TPP의 향후 발전과 수용과정에서 세계 무역기구(WTO)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

-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략하게 말하면, 모든 참가자들은 WTO에 관해 우호적이기는 하나, 권태신 원장과 이다 교수는 WTO의 진행이 더디다는 점에서 WTO 역할에 비판적인 대신 TPP에 대해 우호적이다. 반면 세타풋 박사는 TPP에 대해 유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며, TPP와 같은 무역 특혜협정은 WTO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권태신 원장은 TPP 참가국이 시장의 확대에 의한 수출 증가와 소득 증대 혜택을 누릴 것이며, 수입 가격 하락과 한층 강화된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복지가 증대될 것이라 내다봤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TPP가 발효될 경우, 미발효 때 대비 2023년 TPP 참가국 국내총생산이 0.5~8.1%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 이다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는 TPP의 규칙 제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했다. 국제



라스 안드레 리히터 볼프 마피엘 존 들러리 세타퓏 수티와르트 나루에트 권태신 이다 케이스케

관계에서는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지, 누가 그런 규칙을 제정하는지가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TPP가 갖는 규칙 제정적 측면은 의미심장하다는 것이다. TPP는 미국의 '아시아 회기' 정책이라는 큰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에 몰두하느라 미처 아시아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므로 TPP는 오바마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일본은 TPP를 통해 오키나와에 배치한 미 해군을 오키나와 밖에서 재배치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 미국과 빚었던 일련의 마찰들을 무마시

키고자 했다.

-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TPP 수혜를 크게 누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득은 국내총생산량의 2.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잠재성장률이 0.5%에 불과한 일본에게 엄청난 경제적 보상이다.
- 세타퓏 박사는 TPP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메가 지역자유무역 체제보다 비차별 원칙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선호한다. 그는 지역을 전체로 보느냐, 아니면 역내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보느냐로 구분해 TPP 찬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내 몇몇 개별 국가들은

TPP하의 특혜적 시장 접근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지역 전체로 볼 때, 특히 개도국들은 오히려 WTO하의 무역자유화가 진전될 경우 더욱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TPP는 특혜무역협정이기에 일반적으로 무역 전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닌 다른 중요한 사안들(투자자 보호, 지적재산권 문제, 노동과 환경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개도국 이해에 반드시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개도국은 협상력이 부족하다. 미국이 TPP 협상 과정에서 취한 순차적 협상 방식과 기준, 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의 몇몇 조항 등에서 이 같은 협상력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 TPP는 분명 참가국 간 무역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참가국의 개별 이익은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TPP는 비참가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일본의 경우 TPP는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2009~2010년 미일 관계는 여러 사안에서 마찰을 빚었으며, 미 해군이 특히 중시하는 오키나와 미 해군 기지 이전 문제가 이에 포함된다.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는 몇몇 미국 정계 인사들을 격분케 했으며, 미일 양자관계에 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하지만 TPP를 통한 미일 동맹 강화는 또 다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특히 TPP 비참가국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푸틴은 TPP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중국은 러시아처럼

대놓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TPP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 무역 측면에서 보면, TPP와 다른 무역협정들 간에는 상충 효과가 들어 있지 않다.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은 여전히 RCEP에 대한 협상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껏 어느 나라도 RCEP에 등을 돌리지 않았다. RCEP의 무역 개방화 정도는 TPP하의 개방화 정도보다 불가피하게 낮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RCEP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결국 궁극적 목표는 기존의 모든 APEC 회원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TPP를 확장시키거나, TPP와 RCEP을 통합시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WTO의 경우 한편으로는 세계 무역체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다. 법적 측면에서 WTO는 가장 발전된 무역체제이며, 매우 중요한 분쟁해결 절차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WTO는 무역 협상을 촉진하는 데 거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도하 라운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WTO 체제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 세타퓏 박사에 따르면, 태국은 TPP 비가입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 손해는 그리 크지 않다. 2030년까지 누적 국민총생산의 0.9% 또는 연평균 성장률의 0.06% 이하 정도에 해당될 것이다. TPP 가입에서 오는 대부분

한국 뷰티산업의 글로벌화 방안

분의 잠재적 이득은 무역에 기인하는데, 태국이 TPP 가입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확장은 그리 크지 않다. 이는 우선 태국이 이미 TPP 가입국 중 75%에 이르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인데 이들 국가를 모두 합치면 태국 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둘째, 태국이 수출하는 상품 대부분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그다지 높지 않다. 셋째, 말레이시아를(10년간 자동차 관세 0%) 척도로 삼는다면 TPP 체제하에서 태국의 주요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축소는 가까운 시일 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한 간접적인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 세타풋 박사는 보이지 않는 비용에 더 우려를 나타냈는데,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그렇다. TPP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국제중재제도를 담고 있다. 미국통상 대표부는 웹사이트에 “미국은 한 번도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적 측면에서 형평성과 동등한 대우라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기업이 중재법원에 과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이미 미국 국내 법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 세타풋 박사는 WTO가 더 많이 발전할수록 세계적으로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TPP나 RCEP 같은 메가 지역자유무역협정들은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약화시킨다. WTO 도하 라운드에서 협상을 끝맺지 못했기에 메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도하 라운드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WTO가 사실상 실패했고, 메가 지역무역협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RCEP이 더 나은 대안이다. 왜냐하면 RCEP은 TPP에 비해 비교적 사안이 훨씬 덜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다자주의 시스템적 요소를 가장

잘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WTO 분쟁해결 절차,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등). RCEP은 최소한 TPP하에서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제한된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 권태신 원장에 따르면, 한국 경제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출이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수출/국민총생산량)는 2013년 기준으로 53.9%에 이르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28.7%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의 해외무역 의존도(수출+수입/국민총생산량)는 2013년 기준 102.8%로, OECD 평균인 57.7%보다 훨씬 높다. 그러므로 한국은 TPP와 같은 국제협정을 통해 무역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TPP 참가국이며,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라이벌인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더구나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반부패, 제도의 투명성, 투자와 지적재산권 보호, 노동과 환경 관련 규칙 등과 같은 국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으로 인해 개도국이 사실상 국내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국제 기준을 수용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개도국 제도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Keywords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한중지역경제협회

사회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발표 및 토론	진선미 대한민국 국회의원 장혜숙 한국뷰티플래너협회 회장 한미영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회장 양선길 쌍방울 대표이사 위천더 뉴화청국제여행사 대표 뚜더리 국제신에너지주식회사 회장 자오레이 중박성주식회사 수석집행관 청슈치 베이징환경연구원유한공사 총경리
정리	채하연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진선미

• 발표자들의 고견을 경청함으로써 한중 뷰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법가로서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양선길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 흐름과 화장품 '원료'의 가치에 주목
•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4선 이하 도시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증가가 예상됨.
• 한류 문화 콘텐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대 젊은 층 방문 비중 증가로 의류, 중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와 사후면세점의 성장이 예상됨.
• 코스메슈티컬(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과 안티에이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능성, 특수 화장품의 수요 증대에 따라 기능성

원료의 경쟁력이 중시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특히 출원 가능성 화장품의 비중 증가함.

청슈치

• 헬스테라피 산업이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음.
• 새로이 구축한 환구연맹의 플랫폼을 통해 한국 뷰티산업이 성장하기를 희망함.

한미영

여성의 아름다움, 화장품과 지식재산의 상호 관계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화장품 소비 증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고가 프리미엄 제품군에 대한 수요 확대, 남성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새로운 제품 창출 같은 성장 요인에 힘입어 한국의 화장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



이상기 진선미 장혜숙 한미영 양선길



위천더 두더리 자오레이 청슈치

장하고 있음.

- 최근 화장품산업의 주요 특징은 기능성 화장품 성장,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개선에 의해 프레스티지 제품에서 매스 제품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자국 대비 30~50% 저렴한 가격, 다양한 품목과 핫 아이템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임.
- K-뷰티 열풍의 요인은 한류, 비슷한 환경,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 남성 전용 화장품의 다양성 등에 있음.
-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남성용 화장품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성 전용 제품 관련 상표출원도 증가 추세임.
- 한국은 전 세계 남성 기초화장품 판매액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이며, 남성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공략한 피부 기능성 제품, 남성 성향에 맞는 올인원 화장품 개발로 남성들의 관심을 유도함.
- 남성 1인당 스킨케어 비용 지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남성 화장품 수

요가 높아지고 있고, 남성들의 외모 관심도와 노화 방지 욕구, 남성 제품 전용 판매채널 등장 등은 남성 화장품 시장의 기회 요인임.

- 화장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인 화장품 용기 디자인은 관련 소재 선택과 개발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화장품 용기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강화해 이를 바탕으로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장벽을 구축하여 시장을 선점해야 함.
- 세계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친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자연치유력 함유한 유기농 화장품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자오레이

- 중박성 인터넷 플랫폼은 세계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중국 인터넷 산업은 현재 세계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중박성은 다양한 국제기구와 중국 언론을 활용해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발전시킬 것임.
- 중국 도시와 농촌의 온라인 플랫폼은 생산 과잉 문제 해소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과 금융의 공동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음.

- 국제적인 자본, 산업 사슬을 통해 자원 소통, 부의 공유, 아름다운 기업의 공유를 희망함.

위천더

- 에클라쎄 화장품은 세포과학과 테라피의 조화로 기능을 인정받고 있음.
- 에클라쎄의 과학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배양 최적 성분과 나노 리포솜 전달 기술의 안전하고 탁월한 침투력을 보유한 '드라셀'을 출시함.
- 한중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크루즈산업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 동남아로 진출하고 있음.

장혜숙

글로벌 트렌드: 건강, 항노화 그리고 네트워킹

- 안티에이징 부상의 사회적 요인은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과 이들의 외모 중시 경향 등으로 안티에이징 수요가 증대된 것임.
- 안티에이징 부상의 경제·정책적 요인은 경제 수준 향상에 따라 안티에이징 상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증가된 것임.
- 안티에이징 부상의 기술 산업적 요인은 융복합 트렌드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안티에이징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 등임.
- 향후 전자·식품 산업에서 뷰티 가전과 뷰티 푸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예상됨.
- 스파 서비스의 급부상, 의료, 화장품 등 인접 분야와의 융합과 웰니스 서비스 사업이 본격화될 것임.
- 물적·인적 교류를 통한 네트워킹, 교류 마케팅 통해 부의 창출이 가능함.

Keywords

뷰티산업, 항노화, 글로벌 트렌드, 화장품 산업, 코스메슈티컬, K-뷰티, 유기농 화장품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중국 뷰티·웰빙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소프트웨어와 중국의 하드웨어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한중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한국의 화장품·뷰티산업은 중국의 인터넷 발달과 온라인 시장·홍쇼핑 채널 등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안티에이징은 산업화 초기 단계이며, 안티에이징 대상이 피부 외 뇌, 혈관, 근골격계 등으로 확장될 경우 현재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미래의 안티에이징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 차원의 전략과 산업화가 필요할 것임.
- 정보화, 세계화로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범위가 국제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마케팅 활동을 글로벌 기업 차원의 마케팅 전략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 세계의 특정 다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 자원, 상품, 자본, 서비스, 판촉 등의 마케팅 요소를 표준화 전략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제시장을 세분화해 표적 시장 선정하고, 각 나라의 정치·경제·문화·법률 등 환경 요인 특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케팅 믹스를 통합 조정하는 전략 수립이 요구됨.

한중일 개발협력의 민간부문 참여확대 방안 모색

한국국제협력단·국제개발협력학회

개회사	김인 한국국제협력단 전략기획이사
사회	손혁상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발표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아마가타 다쓰후미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사무총장 아테미 이즈메스티에프 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전문가
토론	김성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정리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을 포함한 개발협력 분야의 지형 변화에 따라 민간 부문은 개발 재원의 확대 차원뿐 아니라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서 참여 확대가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현재 많은 민간 기업들이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분야로 주력 산업을 이동하고 있음. 공공부문 이외의 개발 재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참여 확대는 SDGs 달성과 향후 개발협력 분야에 핵심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임. 이를 공유하고 이러한 민관 협력의 방식이 동북아시아 3국 한중일에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논의함.

곽재성

- 한국은 아직까지 개발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독려하기보다 정부 스스로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함.

아마가타 다쓰후미

- 일본 정부의 최근 민관 협력이 국익 위주로 재편되는 동향을 설명하고 일본식 민관 협력을 'Japanese-Public/Japanese-Private Partnership(JPJPP)'로 규정하며 동북아시아의 원조국 간 민관 협력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생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피력함.

아테미 이즈메스티에프

- 최근 UNDP가 추진하는 포용적 경영(Inclusive Business, IB)을 소개하고 개도국 현지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도국 민간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IB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중일에서 형성되고 있는 IB 사례를 소



김인 손혁상 곽재성 아마가타 다쓰후미 아테미 이즈메스티에프



김성규



김태균

개함.

김태균 - 김성규

- 민관 협력을 강조할 경우에 생기는 위기 관리 문제와 책무성 문제,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원조 가치 평가절하 문제,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경쟁 구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율 기제 도입에 대해 발표자들과 토론함.

한중일의 전략과 경험, 교훈을 공유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재원과 참여 확대를 개발로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봄. 또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에서 정부 또는 공적개발원조(ODA) 기관이 갖는 기회와 위험 요소들을 진단하고,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논의함.

Keywords

민관 협력, 지속가능개발목표, 한중일 협력, 책무성, 위기 관리, 포용적 경영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민관 협력을 개발 사업에 도입할 때 생기는 위기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한중일 협력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준비되어야 함.
- 개도국 현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에 민관 협력이 도입되어야 함.
- 민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각 정부가 먼저 노력해야 함.

윤리 경영이 세계를 바꾼다

인간개발연구원·윤리연구소

사회자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발표 및 토론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스즈키 시즈오 일본 리브란 회장/ 도쿄윤리법인회 기획실장 히사토 후시키 (사)윤리연구소 국제사업본부장
정리	허진원 인간개발연구원 대리

- 유한킴벌리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 중 하나로 4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유한양행과 미국의 킴벌리 클라크 사의 합작회사이다. 양 투자회사의 장점과 좋은 유전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한킴벌리는 기업 성장의 근간에 윤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기업의 시작 단계부터 생각해왔다. 지난 46년간 유한킴벌리를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지속가능 경영의 틀을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국에서 처음으로 환경과 공익을 염두에 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현재까지 30년간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규모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이다.
- 일본에는 윤리연구소가 있다. 윤리연구소를 대변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경영'이다. 36년간 윤리 경영에 대한 연구와 그 보급에 힘써왔다. 시대의 흐름이 근대화본주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윤리 경영의 시사점

과 그 역할을 매우 크다. 현재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 그 사례는 미국과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최종 목적을 이윤 추구로 잡았을 때 오래가지 못함에서 볼 수 있다. 이윤 추구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기업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핵심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외환위기 사태라는 국가적 재정위기를 겪고 일본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기업 생태계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했다. 자칫 인간이 갖는 고귀함과 존엄성이 천박한 이윤 추구에만 눈이 멀어 등한시될 수 있는 시점에서 유한킴벌리와 윤리연구소는 인간 중심 경영에 큰 가치와 중점을 두었다. 그를 위한 가족친화적 경영을 하는 경영 체계에 많은 노력과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 오늘의 주제는 윤리 경영이다. 여기서 윤리는 지켜



장만기



최규복



스즈키 시즈오



히사토 후시키

야 할 준법 사항이 아닌 조직의 문화 혹은 조직을 구성하고 꾸려가는 가치관, 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 윤리가 한 기업에서 내재화가 되고 그것이 한 조직의 문화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 직원들의 행동 기반 하나하나에 행동규범으로 내재화되고 특히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최고경영자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윤리 준법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유한킴벌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이런 문화에 동참하게 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도 윤리 경영의 또 다른 모습이며 중요한 과제이다.

- 윤리 경영을 함에 있어서 기업이 속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윤리 체계를 도입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책임 경영(CSR)이며 둘째는 공유가치 창출(CSV)이다.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유한킴벌리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슬로건으로 나무 심기 캠페인을 펼쳤다. 공

유가치 창출 경영으로는 시니어 비즈니스 육성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를 육성해 일 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에 의존하는 실버 세대가 아닌 활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시니어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를 위하고 기업을 생각하는 발전적인 방향이다. 일본은 시니어산업이 한국보다 발전되어 있으므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그에 속한 기업도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다.

Keywords

윤리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CSR), 공유가치 창출(CSV), 내재화, 인간 중심, 지속가능 경영, 이윤 추구, 가족친화적 기업.

정책 통합: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지역화



니사르 알리 이딩 윤종수 박천 크리슈나 하리 바스코타 오강탁

유엔거버넌스센터·한국행정연구원

사회	니사르 알리 피지 퍼시픽 테크놀로지 대표
발표	이딩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 윤종수 유엔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 박천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차관보 크리슈나 하리 바스코타 네팔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정리	김현정 유엔거버넌스센터 연구개발팀장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의제 2030’의 실행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정책적 통합과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들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수평·수직적 일관성을 위해 협조적 정부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SDGs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와 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는 SDGs를 실행하는 데 우선순위 설정, 계획 시행, 지도 감독,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통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중국 정부는 SDGs를 개발의 틀로 받아들인 가운데, 2016년부터 2020년에 해당하는 제13차 5개년 계획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새로운 5대 개발지침은 혁신, 조정, 포용, 환경 친화적 성장, 개방성이다.
- 전자 정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SDGs 달성에 기여한다.
 - 정부 데이터 공개와 정부-민간 합작(PPP)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탄력적 인프라 구성
 - 컴퓨터 도시 관리 시스템과 효율적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 중국의 전국 통합 온라인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수평적, 수직적 정보 공유를 개선함으로써 맞춤형 정보 제공과 공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 격자망 형태의 중국 사회서비스 행정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 정부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도우며, 지역정부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제공과 그 감독을 가능하게 한다.
- ‘의제 2030’은 4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 종합

새로운 자본시장의 변화와 애널리스트의 역할

환경비즈니스

사회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발표	임대응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한국 대표 장두영 쿼터백투자자문 부대표 김광현 디캠프 센터장
토론	안병국 미래에셋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준 교보증권 센터장
정리	이홍표 환경비즈니스 기자

임대응

지속가능한 금융과 애널리스트의 역할

유엔은 2030년까지 인류의 장기적인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했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막는 데 1800억 달러,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2100억 달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는 데 1000억 달러가 10년간 필요하며 전체 목표를 달성하는 데 17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이 분야에 투입될 자원이 막대하므로 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심을 가진. 지속가능한 금융은 다음의 목표를 추진 중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금융을 변화시키자.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자. 이는 바젤3를 통해 구체화됨.
-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자.
- 생물학적 다양성을 추진하자.
- 물과 관련한 논의를 강화하자.

이는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추진 중인 사항이며 이를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큼을 시사함.

장두영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과 애널리스트의 역할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자산관리사의 합성어임.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자동화된 자산 배분임. 미국의 경우 연 68%씩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기존의 금융사들은 직접 개발, 협약, 인수합병 등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를 육성 중임. 한국에서는 현재 퀀트 기반의 헤지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 현재 은행, 증권사 등에서 빠르게 도입 중이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육성책을 펼치고 있음. 정부 정책,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 등은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성장 요인임. 로보어드바이저 역시 애널리스트와 협업이 가능한 분야임. 기존의 리서치가 성장 기업 혹은 저평가 기업의 선

실행계획이다.

- 선언에 명시된 세계 변화를 위한 비전과 원칙의 공유와 결의
- 도표화된 SDGs 목표 달성 전략
- 실천 방안과 국제 동반자 관계
- 후속 조치와 평가

■ 지속가능한 개발의 국가 정책은 개발 목표들이 일관성 있고 통합된 방식으로 구성되어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유엔개발그룹(UNDG)은 '의제 2030'을 실행하려는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효과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MAPS'라는 이름의 접근 방안을 마련했다. MAPS는 주류화(Mainstreaming), 가속화(Acceleration), 정책 지원(Policy Support)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 주류화는 '의제 2030'을 국가 전체와 지역적 수준에서 정착시키고, 전국 단위, 광역 단위,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배정을 의미한다. 가속화는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우선 지역에 개발 자원을 집중하면서, 계획 간 시너지 효과와 상쇄작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정책 지원은 유엔개발기구 기술과 전문지식이 적절한 시점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 SDGs를 지역화의 맥락에서 주류화하는 로드맵은 계획-실행-평가 흐름 안에서 다음 8단계로 이뤄진다.

- 공공의식 제고
- 복수의 이해당사자 접근 방식의 적용
- SDGs의 전국, 지역, 촌락 단위 맞춤화
- 감독, 보고와 책임 소재 규명

Keywords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정책 통합, 의제 2030, 제도적 틀, SDGs의 현지화, 지역(지자체) 당국, 협조적 정부

- 정책 간 수평적 연계 구성
- 정책 간 수직적 조직화
- 미래를 위한 예산 확보
- 위험요소 측정과 적응력 배양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SDGs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개발 의제를 지역 차원의 성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과 기구의 변화가 요구됨.
- SDGs를 지역 수준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내에서 정책의 효과적·수평적 연계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정책 통합을 이루어야 함.
- 지역 당국에 정책을 창출하고, 행정 능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당국이 SDGs 실행에 기여하는 능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SDGs의 현지화는 지역 당국이 SDGs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이 가진 정보와 경험과 최선의 관행을 공유하며, 현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촉진될 수 있음.
- SDGs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와 SDGs에 대한 헌신으로, 이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비전에 집중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일치된 노력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 나라마다 개발 수준에 큰 차이가 있고 정치체제와 정부구조도 다른 이상, SDGs 실행을 위한 특정 국가의 개발 정책과 전략은 반드시 현지 상황과 사정에 입각해야 함.
- SDGs의 현지화는 실행 계획 수립, 감독, 수행 단계에서 전 분야에 걸친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기타 이해당사자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조용준 임대웅 정두령 김광현



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로보어드바이저와 협업해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된다.

김광현

한국의 스타트업 트렌드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이번 정부 들어서 스타트업의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이는 한계를 맞은 한국의 산업구조와 일맥상통함.

결국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성공을 통한 혁신 없이 는 성장이 정체될 것임. 이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임. 기존의 한국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음. 자체 연구소를 통해 개발에 치중해 왔음. 그러나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음. 전통적 관점의 연구개발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음. 결론은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과 인수합병만이 대기업이 살아남을 방법임.

예를 들어 우버(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는 자동

수송차량 서비스를 기획 중임. 또 공장에서 농작물을 키워내는 도시농업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 세차를 대신해 주는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도 인기임. 결국 앞으로의 성장은 '모든 것을 재상상'해야 가능함.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성장임. 중국은 과거 한국의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을 능가할 정도로 창업 시장의 열기가 뜨거움. 그래서인지 이미 테크 분야에서는 한국을 앞질렀다고 봐도 될 정도임. 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드론), 전기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앞서 있음.

결국 한국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창조적 발상'밖에 없다고 봄. 이에 따라 기존 세대들이 후세대를 위해 '창조적 발상'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상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봄.

[질의 응답]

- Q.**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거버넌스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 A. 안병국** 한국 기업의 경우 거버넌스의 불투명함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음. 과거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거버넌스 이상의 것임. 일례로 에너지·철강·석유화학 등의 경우 탄소배출권과 같은 환경적 이슈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절대적 영향이 될 수 있음.
- Q.** 한국 시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지나치게 금융사의 마케팅에 치우친 건 아닌지?
- A. 안병국** 로보어드바이저의 규정이 명확히 이뤄져야 함. 고수익 고위험의 퀀트 기반 헤지펀드와 중위험 중수익의 로보어드바이저는 분명 다른 개념임. 로보어드바이저는 분명 편리하고 대중적인 상품임.
- Q.** 환경과 같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A. 김영준 이미 탄소배출권과 같은 경우 t당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음.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중임. 이렇듯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 요소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만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음. 아울러 중국이 추진 중인 환경보호인프라펀드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환경 금융상품은 금융업 전체에서도 적극 검토가 가능할 것임.

Q.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시 기존 리서치센터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A. 김영준 로보어드바이저 역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와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있음. 금융투자의 경우 반드시 많은 데이터가 좋은 것만은 아님. 이보다는 자산가격과 상관성이 높은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함. 리서치 센터는 이런 것에 집중할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봄.

Keywords

지속가능개발목표, 지속가능한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창조적 발상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지속가능 성장,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중요함.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이슈, 이를 테면 탄소배출권과 같은 정량적 파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자산배분 상품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연구가 필요함. 양자의 협업이 가능하며 특히 리서치센터 내 협업을 통해 그 시작이 가능함.
- 스타트업의 성장은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건임.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대기업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곧 결과물이 나올 것. 창조적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절실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가속화하고 아시아개발은행과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사회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발표	피터 드라이스데일 호주국립대학교 크로퍼드공공정책대학원 경제학 명예교수 장원림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학부 교수 요시노 나오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 원장
정리	조수경 아시아태평양지도자네트워크 간사



전 세계적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무역투자 관련 다자체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체제 출현은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기도 하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션에서는 AIIB의 출현으로 현재진행 중인 메가 무역투자 이니셔티브가 가속화될 것인지, 위 다자체제 간 상호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안충영

피터 드라이스데일



장원림

요시노 나오키

피터 드라이스데일

- AIIB와 TPP, RCEP 간 상호 연관성은 크지 않다. AIIB는 개도국과 신흥국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긴 것이고, TPP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아시아와 미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탄생한 무역 이니셔티브다. RCEP 또한 기존의 다자 기구에서 기여도가 크지 않은 중국이 내놓은 다자 이니셔티브로서 이 세 다자체제들은 그 태생에서 드러나듯 큰 연관성은 없다.
- 중국이 주도한 AIIB와 RCEP가 기존 체제나 미국의 영향력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 의회 내에서는 AIIB나 RCEP가 미국의 안보 이해에 위협인 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하며, 이러한 점을 미국의 불참 이유로 드는 것은 논리적으로 취약한 주장이다. 오히려 RCEP가 참여하는 회원국이 많고 각각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RCEP가 동아시아 지역 내 강력한 개혁과 자유화의 수단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각국이 3%의 세계경제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장원림

- AIIB는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탄생했고, 여러 나라가 다 함께 참여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AIIB는 설립 초기에 세계은행과 협력한 바 있으며 국제기구와 협력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간의 주장과는 달리 AIIB는 중국의 소유물이 아닌 모두가 주인이다.
- 향후 미국과 일본의 AIIB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두 나라 모두 중국이 일본과 미국의 역할을 빼앗으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AIIB는 인프라 부문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자적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 시장 통합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프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AIIB나 일대일로 정책 모두 그 이면에는 지역 간 연결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정치적 환경 때문에 왜곡되고 있어 다자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경기술 교류를 통한 한중 성공 비즈니스 협력 채널 구축 제안

요시노 나오유키

• ADB와 AIIB는 공조 가능성이 있다. ADB, AIIB 모두 개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사무소를 갖고 있고, 기금 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지표 기반 평가 시스템을 보유한 ADB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 부가 효과로 나타날 투자수익률 상승과 이에 따른 은행 규모 증대가 두 은행의 공조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아베 내각은 일본 국내 사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메시지와 관계 없이 AIIB는 필요하며, 이미 ADB와 AIIB 간 간접적 협력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두 은행 간의 공조 가능성이 높다.

[질의응답]

드라이스테일 교수는 ADB와 AIIB에 대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RCEP 협상 진행과 관련해 장원링 교수는 중국 지도부가 RCEP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며, 높은 기준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TPP와는 달리, RCEP은 우선 기본 합의안을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이스테일 교수는 RCEP이 개방되고 통합된 시장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재 전체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러시아, 몽골, 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이 30년 전부터 존재했는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장원링 교수는 그보다 앞서 한반도 평화 구상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참여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북한의 경제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드라이스테일 교수 또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먼

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요시노 나오유키 원장은 동북아 지역 개발은 ADB-AIIB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며, 두만강 등 북·중 접경지역에 현존하는 북한과의 관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장원링 교수는 두만강개발 프로젝트가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에는 정치적 환경을 먼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TPP와 RCEP은 10~15년 안에 통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은 TPP, 미국과 일본은 AIIB에 참여해야 역내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요시노 나오유키 원장은 무역과 투자 환경 관련해 자본과 환율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며, 환율 시스템과 정책, 자본시장 환경을 면밀히 살펴봐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인간개발연구원·한중기술플랫폼

사회	원영재 한중기술플랫폼 회장/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발표	통실리 중국석유화학 화공감측설계협회 이사장
토론	왕신성 중국환보산업협회 고등환보망 대표
	전형근 NIT KOREA 실장
정리	권해란 인간개발연구원 컨설턴트

환경기술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플랫폼

- 미세먼지 오염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반은 국내에서 생긴,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 5월 23일 서울 방문한 담당관과 만나, 5월 24일 70여 개 한중기업 설명회에서 중국 환경 시장과 미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석유화학공 감측 설계 협회 석유화학 감측 컨설팅, 감측 도급 프로젝트 관리서비스 기술 기관과 전문가 자발 참여 조직(1985년 창립한 회원사 300여 개의 중국 민정부 등록 법인)으로 기술 심사, 기술 자문, 서비스 표준 규정, 기업의 신용평가, 국내외 선진기술 공유 협력, 산업 분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노력
- 중국은 국민경제 기간산업인 석유 화학산업의 성과가 큼. 그러나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조정을 따라가지 못하여 비용 증대, 효율 감소, 환경보호 문제가 심각해짐. 신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고조,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대책 마련 녹색 발전 순환, 저탄소 발전 추진함. 산업구조와 생활방식

이 원천적으로 생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환경 파괴에 대한 엄격한 보호와 오염에 대한 책임 규정을 제정함.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 또는 폐쇄 압력, 생산 중지, 대기·수질·토양 오염에 대한 정책표준 마련함.

- 13억 인구가 폐기가스, 폐수, 폐기물을 배출 중이므로 오염 원인을 정확히 측정하고 산업의 대응 조치, 청정 생산과 순환경제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해 기술을 교류하고, 환경보호 상품을 개발해 오염에 대한 관리와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수자원의 오염방지 행동계획, 위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함. 선진적인 기술로 고효율 시범사업을 육성하고 녹색환경 조성, 친환경 엔지니어링 독려와 상벌 시스템 갖춤.
- 가공기술 연구개발, 기술 설비, 신소재 우수상품 결합, 협회와의 역할 강화, 국제 선진기술을 환경보호 에너지 기술과 결합. 한중 기술 플랫폼과 함께 한국의 선진 환경 보호기술을 견학, 제주포럼을 통해 학습, 지속적인 교류협력 채널을 마련해



양국 연구기관의 협력 기회 증대해야 함. 전 세계가 석유화학 분야 도시 건설에 친환경적 안전 발전 이바지 기대, 일대일로를 활용한 협력을 기대함.

중국 환경 분야 니즈와 환경 변화

- 중국 환경보호 시장은 1988년 이후 늦게 시작됨. 세 번의 발전 단계를 거쳐 2000년 이후 급속 발전해 10~15% 성장함. 4조 위안에 이르는 환경보호 산업으로 발전해 2011년 오염배출 표준이 제정되기 시작함. 2015년 1월 새로운 환경보호법 제정 이후 중국 기업들은 오염 배출에 대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됨. 2015년 4월 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 휘발성 오염 배출에 대한 법이 제정됨.

-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는 토양의 회복, 해변 연안 지역의 환경 개선, 수자원의 처리 시장이 큼. 중국에는 오수처리장이 4682개 있고, 오수처리율은 87.9% 이상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시장 발전 가능성이 큼. 2조 위안이 넘는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처리시장의 기술적인 수요** 중국의 시급한 물류처리시설 고농도 유기폐수처리기술, 암모니아 폐수처리기술, 중금속 폐수처리, 농촌의 오수 처리기술, 지하수 모니터링 감측, 그러나 47개 도시 70% 대기질이 국가 표준 미달임.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계

획 발표된 이후 중국의 대기오염 분야에 1조 위안 이상 자금을 투입할 예정임.

- **대기오염 방지기술** 휘발성 오염, 집진, 아황, 납 등과 관련된 중금속 오염과 에틸렌 오염 통제기술, 이산화탄소 감소, 의료폐기물도 심각함. 2010~2015년 450억 위안 쓰레기 매립 비용, 폐기물시장의 수요 증대 위험폐기물 317억 위안 2020년 이후 더 증대 예상됨.
- **고체폐기물 처리기술** 쓰레기 저장 매립 운수 쓰레기 소각처리기술 무해화와 줄이는 처리기술, 중금속 포함된 물질의 처리기술, 농림축산업의 토지 이용 산업 구조조정으로 공장의 이전.
- **토양오염 관련 영역** 토양 회복도 2000억 위안의 시장임. 원래대로 복원, 부분 회복, 일부 복원이 그 중 절반 이상의 수요임.
- **해외 기업의 중국내 진입 현황** 미국 중심으로 진입 중. 미국·독일·이스라엘·노르웨이·일본 등 엔지니어링 기술 높고 표준화 설비 등이 좋음. 투자 비용이 높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장기 운용에 따른 비용이 줄어듦. AS가 늦은 단점 있음.
-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전하기 위한 건의사항**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던 하지만 홍보가 잘돼 있지 않아. 지명도가 낮음. 한국의 환경보호 기업들의 자체적 시장 위치를 파악하고 장단점과 독특한 기술을 보유할 것.



원영재



홍실리



왕신성



전형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서양 업체들의 성공 사례는 우수한 업체들과 협업해 원원하고 성공했음. 환경보호 엔지니어링 기술 마련 플랫폼은 환경 관련 컨설팅을 하고 9000회원사 12만 명 전문가가 서로 호혜 업체를 연결, 오수처리·화공·제약·식품·철강 등 광범위함.
- 대기오염을 줄이는 집진 처리기술에 한국 기업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 대기오염 방지장치 전문생산, 미세 분진에 민감 이슈를 가지고 개발과 영업활동 중. 화력발전소 방문해서 보면 상상 초월 국제 수준에 맞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집진 시설이 200억~300억 원이 넘는 장비인데 관리와 운영이 미비함. 진단 측정 솔루션을 확보한 회사로서 협력이 필요함.
- 시설에서 오는 오염 외 자동차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은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해결 가능함. 대기오염, 수질 문제, 환경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처럼 전기자동차가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는 환경 때문임.
- 각국의 방문과 환경기술기업의 향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임. 협력이 심도 있게 진행되리라 확신함. 이번 성과를 종합해서 더 큰 범위 내의 플랫폼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양국 교류 확대 가능함.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봄. 한중 기업 간, 정부 간, 협회 간 협력을 이루고 환경보호 사업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함.

Keywords

중국 한국의 환경기술, 대기오염, 토양오염, 고체 폐기물 처리기술, 폐기 가스, 폐수 폐기물, 한중기술 플랫폼



...
제3장
환경·기후변화

SUSTAINABILITY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국제협력

외교부

사회	양수길 UN SDSN-Korea 대표
발표	타마키 린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로버트 도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차장
특별 초청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토론	이레나 주브세빅 UN DESA 지속발전과 과장 킬라파티 라마크리슈나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대표 주슈 ICLEI 동아시아본부장 이형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국장
정리	정상락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평화안보 석사과정

-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반 국가정책에 일관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각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기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도 언급되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필요함. 모든 국가들이 참여한 파리협정은 이를 지향하기 위한 디딤돌임.
- 단기간 내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례 없는 노력이 필요함. 재정 정책, 도시개발 정책, 공공조달 정책, 개발원조 정책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일관되게 탄소중립성과 녹색성장을 지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임. 되도록 강력한 지도력 속에 중앙집중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기

- 반으로 각 정부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인 만큼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각 국가 간 정책들이 공통적인 목표 아래 조화를 이루어야 함. 지속가능개발목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에서 국내적으로 추진할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개도국에서는 이행 의지가 있더라도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이행하고 이를 실현할 자원이 부족할 수 있음. 또한 달라진 환경에 맞춘 인력 양성도 필요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들은 개도국이 정책을 입안하고 이행하면서,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지원할 수 있음.
- 도시에서 인구와 탄소 배출이 집중되는 만큼 파리협정이 제시하는 목표와 탄소중립성 달성을 위



양수길 타마키 린타로 로버트 도슨 마크 리퍼트 이레나 주브세빅 킬라파티 라마크리슈나



주슈 이형중

- 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정책 입안과 이행 과정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션 이노베이션을 통해 주요 지도자들이 촉구한 것처럼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 혁신을 향한 연구와 투자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원 동원이 핵심임. 재원은 개도국 등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책을 추진할 자원을 제공하며,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기술적 혁신을 지원하게 될 것임.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기존 자원 조달 경로를 적극 활용하고, 자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Keywords
 재생가능 에너지, 파리협정, 녹색성장, 기후변화, 국제협력, 탄소중립성,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성은 양립할 수 있으며 서로 연관성 있는 목표임.
- 국내 차원의 정책 일관성은 파리협정과 지속가능 경제개발에서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국제 차원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함. 개도국은 기후탄력적 정책의 조화와 시행에 필요한 능력을 쌓는 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함.
-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 재원은 경제개발과 탄소중립성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정부들도 재원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탄소중립 개발 정책에 대한 강한 정치적 의지는 민간 분야에서 기후 자원 조성을 촉진할 것임

지속가능 관광의 투자와 재정

제주국제연수센터

발표 **더번드 랜디** 지속가능관광위원회 대표
정리 **강성일** 제주대학교 교수

- 관광산업은 관광지 경제에 일자리 창출, 지방정부 조세 수입 증대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에 따라 지역의 관광 개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관광 개발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함. 왜냐하면 관광은 긍정적 효과에 비해 잘못 관리할 경우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경제적 편익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관광 개발 패러다임을 관광지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개별 관광기업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더 효과적이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DMO)의 관여가 필수적임.
- 먼저 지역인력 매니지먼트, 관광객 매니지먼트 등 과학적 관리 방법을 도입해야 하며, 교육 훈련, 정책 결정, 법제도적 강령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해관계자를 위한 로드맵 등 관광지 관리와 마케팅 계획의 수립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관광지 관리와 마케팅 계획의 전제는 가치이며, 관광에서 이는 지속가능성, 지역기반 관광, 책임 관광과 같은 형태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관광지



관리의 지향점은 저개발국이나 농어촌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데, 이를 위해 협동조합 형태로 지역 주민이 관광 관리에 참여할 필요 있음. 관광산업과 민간 분야의 파트너십이 중요함.

- 특히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개발이 중요함.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지역주민이 관광에 참여하지만, 관광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 자원 개발 계획을 관광산업 계획에 반영해야 함.

- 또한 관광지 관리는 지역사회의 주요 활동가인 공공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산업, 투자와 재정, 교통, 노동, 농촌 개발, 직업학교뿐 아니라 민간 관광산업이 관여하므로 이에 대한 각자의 이해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함.



더번드 랜디

Keywords

지역기반 관광(CBT, Community Based Tourism),
지속가능 관광(Sustainable Tourism),
책임 관광(Responsible Tourism),
관광지 관리(Destination Management),
전략적 관광지 마케팅(Strategic Destination Marketing)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지속가능 관광은 저개발국이나 농촌 지역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향점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이를 위해 전략적인 관광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관광 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 충돌 조정이 필요함.
- 특히 관광객 수 위주의 양적 성장 지표보다 체류 일수, 관광 수입, 재방문율, 1인당 관광 지출, 표적 시장 등 질적 관광을 위한 성과측정 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음.
- 관광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관광 관련 이해관계자를 이해시키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함.
- 특히 기존 지속가능 관광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관광기업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저가 관광객 시장에 한정하기보다 제품 서비스의 질을 높여 럭셔리 단기 관광객에 대한 시장 개척도 필요함.

환경·사회·경제적 편익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관광 방안

제주국제연수센터

사회	더번드 랜드 지속가능관광위원회 대표
발표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이사 톨카치 데니스 홍콩 폴리텍대학교 교수
토론	후구아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시장 실비아 바본 유럽지속가능관광재단 소장 강호상 서울대학교 교수 강미희 서울대학교 교수
정리	예슈 풀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강성일 제주대학교 교수

이재홍

제주 관광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도전

- 관광시장 변화의 주요 이슈인 중국 관광시장의 성장, 저성장 해법 전략 산업 제주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 측면에서 관광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제주 관광산업 성장은 폭발적이며, 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관광 목적지임. 이는 주로 중국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객 수만 보면 세계적인 관광지이지만 평균 체류일수나 1인당 지출액은 다른 주요 세계 섬 관광지에 비해 낮음. 새로운 도전은 난개발, 부동산 의존 발전과 물, 전기, 쓰레기 등 다양한 환경적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제주는 지속가능 관광을 위해 양적 성장보다 균형 성장(양적+질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청정과 공존을 미래 비전으로 선포함. 이를 위한 재원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톨카치 데니스

지역기반 관광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

- 관광산업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지역기반 관광은 대안관광의 한 형태로, 관광의 외부 의존성을 줄이고 지역사회 주도의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즉 지역사회 역량 구축이 중요함. 예를 들면 관광 이해, 기업가적 기술, 서비스 교육, 파트너십 구축, 이익 분배, 사회적 이슈 극복 등이며, 난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통제 강화, 소규모 개발의 주도권 강화를 통해 가능함. 하지만 개발에 대한 기여가 없고 외부 지원에 대한 장기적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의 사례를 보면 지역기반 관광 모델은 협동조합, NGO, 정부



지원, 민간 주도 등 지역기반 관광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속적 트레이닝, 표준 개발, 조인트 마케팅, 대정부 로비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인적 자원 관리(리더십, 커뮤니티 능력, 이해관계자 이익), 펀딩(자체적 펀딩은 불가능, 외부 펀딩은 의존성 이슈), 지역기반 관광 브랜딩, 정보 접근성, 갈등 관리, 지속적인 열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음.

후구아

와카토비의 Top 10 국가관광지를 위한 노력

- 와카토비는 4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12만 명이

사는 작은 섬이며, 와카토비 국립공원이 있고, 산호 삼각지대의 중심 지대임(750종 산호종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 발리가 가장 유명한 관광지여서 중앙정부는 새로운 발리를 만들기 위한 관광 지역을 찾고 있으며 와카토비는 이 새로운 후보지 중 하나로 중앙정부로부터 공항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고 있음. '타깃 2020'이라는 비전에 따라 산호 삼각지대의 중심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강미희

- 선례로 보아 지역기반 관광이 성공하려면 비전 공



더번드 랜드

이재홍

톨카치 데니스



후구아

실비아 바론

강호상



강미희

유, 리더십, 효과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함.

실비아 바론

- 핵심 비전 공유와 리더십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음. 리더와 비전을 공유할 사람들이 필요하며 정책은 이를 위해 장·단기 재정을 지원하는 것임. 이에 기반을 두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 있음. 이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 구축(지식 체계 구축)이 필요함.

강호상

- 마을의 자본과 인력이 대체로 적은 현실을 감안하면 NGO와 학계의 연계가 필요함. 지역기반 관광에서는 민간 부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이 중요함.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지역기반 관광이 지역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체계화된 관계 구축과 다양한 상품 믹스가 필요함. 이 중 비전 공유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며 이를 위한 리더십을 쌓아야 함.
- 커뮤니티 내 많은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충돌로 인한 갈등 표출은 소통으로 비전 공유가 된다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면서 표출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
- 이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하지만 인적 자원이 부족한 작은 마을 단위에서 이런 정책을 모두 이루는 것은 실제 인적자원이나 여유가 없어 적용하기 어려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예를 들면 마을기업) 형성도 중요함.

아시아-한국 간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 협력 방안

제주한라대학교

사회	전용욱 세종대학교 부총장
발표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사토시 고지마 일본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장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협력단장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기후변화센터 센터장 김용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정리	김신호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국제자유도시센터 소장

전용욱

- 에너지 문제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녹색 경제, 빈곤 퇴치와 궁극적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임.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하에서 아시아의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 발전 방향,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구축과 한국의 역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아시아의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과 아시아와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정태용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지속가능 에너지 이니셔티브인 'Sustainable Energy for All (SE4ALL)'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접근, 에너지 효율, 재생가능 에너지 등 3개 분야에서 다음

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에너지 접근성 모두에게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보장할 것.
- 에너지 효율성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보다 2배로 높일 것.
- 재생가능 에너지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2배로 확대할 것.
-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 국제 협력을 위해 정부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이상 화석연료 대체), 2차 전지, 전력IT(이상 에너지 효율화),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기술(CCS)을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해 2020년까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추진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3개년 계획(~2017년까지)을 수립함. 수요 자원 거래 시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통합 서비스, 태양광 대여, 전기자동차 확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중



전용욱 정태웅 사토시 고지마 문승식 전의찬 김용민



설, 발전소 온배수 열 활용, 제로 에너지 빌딩 등을 8대 중점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또한 산업부, 한전 등 공기업, 민간 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신산업 협의체를 구성했음.

사토시 고지마

- 다면적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어 있음.
 - 기후변화 관련 환경 지속성 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온실가스 방도체와 탄소 집약적 에너지 믹스임.
 - 경제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실패는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훼손하는 것임.

- 재정 지속가능성 투자 결정에서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고 탄소 집약형 투자를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 계획임. 더 엄격한 기후 정책이 도입되면 좌초 자산이 될 화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탄소 집약형 에너지 투자의 지속은 최악의 경우 금융 위기를 낳을 수 있음.
- 원자력 이슈의 사전 예방 원칙의 논리적 적용 결과는 원자력발전소의 완전한 폐쇄라고 확신함.
- 우리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 수준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성 한계'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함.

-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속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우리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에너지 관련 수치와 기술적 옵션 추구는 가능함.

문승식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6억3500만 명이 물 부족, 8억 명이 에너지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5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 인구는 16억 명에서 31억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화석연료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 한국은 상하수도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자체 에너지 자급 비율을 높이고 있음.
-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와 함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법제를 도입해 환경문제를 극복해왔음.

전의찬

-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아시아의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 구축 사례를 제시함.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타당성 평가프로그램인 RETScreen과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 기법을 결합한 모형인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투자결정모형(Biomass Power Investment Model, BioPIM)을 개발함.
-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량을 분석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 시스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재생에너지의 최적 에너지 믹스를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SCCS(Sejong Climate Change Screen)를 개발함.
-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이용해, 개도국의 태

양광 발전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틀을 제시함.

김용민

- '청정'과 '공존'이란 제주도의 미래 비전 핵심 가치 설정과 '탄소 없는 섬' 추진, 제주도의 지정학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한 아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함.
-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과 아시아와 한국의 협력에서 제주도의 가치와 역할을 제시함.

Keywords

지속가능 에너지, 아시아와 한국의 협력, SE4ALL, 최적 에너지 믹스, 청정과 공존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아시아의 지속가능 에너지 국제 협력을 위해 한국의 지식, 기술, 재정이 조화된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 필요함.
- 아시아 국가는 태평양 국가, CIS국가, 동남아 국가 등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에너지 협력 수요가 있으므로 수혜국별 패키징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 매립가스 포집 기술, 음식물 쓰레기의 에너지 전환 기술, 경유차 미세먼지 처리 기술, 전기차 연료전지와 IT기술을 융합한 첨단기술은 아시아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도시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R&D 투자와 환경 기초시설 설치,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도입해 많은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을 기대하고 있음.
- BioPIM, SCCS,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통해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도입 방안과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함.
- 아시아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 연구 개발 기지,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 양성교육 기지, '지속가능 에너지' 활용 시험무대 등으로 제주도의 기여 가능한 부문을 제시함.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해조류 이용 전략

한국조류학회

사회	김정하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	티에리 쇼핑 세계해조류학회 전 회장 정익교 부산대학교 교수 김장균 인천대학교 교수
토론	김형근 한국조류학회 회장 황미숙 수산식품품질관리센터장 김명숙 제주대학교 교수 최한길 원광대학교 교수 김영식 군산대학교 교수 윤환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영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소장
정리	조가연 국립생물자원관 박사

티에리 쇼핑

• 캐나다 동부 해안에서 시도되고 있는 생태통합 양식(Integrated Multi-Trophic Aquaculture, IMTA)은 연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유기물과 무기영양염을 담치의 먹이와 다시마의 생장 요소로 이용하는 복합양식으로서, 어류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경제적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음. 생태통합양식 중 특히 해조류 양식이 주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인식되고 나아가 영양염 거래제(Nutrient Trading Credits, NTC)와 같은 재정적이고 제도적인 인센티브 틀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제주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육상 넉치 양식장에도 생태통합양식을 도

입해 연안 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김장균

• 부영양화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미국 동부 롱아일랜드 사운드 바다에서 해조류와 조개류를 복합양식함으로써 육상에서 흘러온 영양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영양염 생물추출(Nutrient Bioextraction)이라는 친환경 양식 기술을 소개함. 이 기술은 생물체를 재배 또는 양식해 영양염류가 제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주도 동쪽 연안에서 일어나는 파래 대발생의 원인으로 파악되는 육상 기원 영양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안함.



한중 환경과학기술 협력 전망

정익교

-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이 체결되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기후 회복을 증진하며, 온실가스 저배출과 기후 탄력적 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바다의 산소 공급원이자 이산화탄소 저감원인 해조류가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응 또는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됨. 한국은 아시아 12개국과 공동으로 2005년부터 네트워크를 조직해 해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주도가 해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 마련의 효율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함. 해역 부영양화 저감은 물론 해양 산성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 양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함.

[토론]

- 연안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영양염류를 이용해 생태통합양식을 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이용했다는 심리적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양식 산물을 이용해 가축 사료, 맥주 등 국민의 정서에 맞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제주 연안의 갈파래류의 대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통합양식이 한 가지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다각적 접근과 시도를 통해 효과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초적·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제주의 주요 해조 자원인 갈래곰보, 벚붉은잎 등 경제성이 높은 해조류를 생태통합양식으로 시도 하길 기대함. 아울러 해조 양식이 어려운 제주 연안과 해양 환경을 견디낼 시설물 개발도 병행되어야 함.

Keywords

해조류, 생태통합양식(MTA),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저감, 해양 산성화, 바다 환경, 종다양성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생태통합양식을 다양한 방법과 대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 거래제와 비슷하게 육상과 물 환경의 영양염을 줄이기 위해 영양염 거래제(NCT)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태통합양식 확대를 위해 양식장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함.
-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해조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
- 제주도가 가진 우수한 해조 다양성을 자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보존과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함.

인간개발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래숲

사회	권병현 전 주중 대사/ 한중문화청소년협회 미래숲 대표
발표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핑자오 중국 광화 과기금회 원장
정리	임진혁 인간개발연구원 기업가정신센터 소장

김용주

환경 R&D 우수 사례

-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처리 기술
 - 기존 기술 대비 부지비와 설비비 30% 이상 절감
 - 중국 현지 시멘트 공장 대상 실증 시설 검증으로 현지사업화 기반 구축
 - 대표적 적용처: 시멘트 공장, 발전회사 등
- 석유 코크스 연료 공정의 미세먼지 처리 기술
 - 고농도 황 함유 석유 코크스 사용에 따른 산성가스 및 미세먼지 처리
 - 세정 방식과 전기 집진 방식을 결합한 습식 전기 집진기 적용
 - 방전극 개선을 통한 내구성과 전류 밀도 증가로 집진 효율 개선
 - 대표적 적용처: 시멘트, 발전소 등 석유 코크스 활용 공장
- 중국 시장에 적합한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과 시료 채취가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시스템 개발 2단계 진행 중

- 외부 환경 조건(고농도, 고온, 고습, 저온 등)을 고려한 온도 전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 가능
- 유무선 원격제어와 데이터 저장 관리 기능을 고려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대표적 적용처: 대기, 산업단지, 다중이용시설 등
- 환기통로 안 미세먼지 청소로봇 개발
 - 경량화 로봇 기술을 활용한 밀폐공간 환기통로 청소기 개발
 - 다중이용시설 환기통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동시 제거
- 4면 동시 청소 등 청소 효율 향상
 - 관찰용 카메라 장착 오염 상태 점검과 검사 동시 수행
- 연료첨가형 촉매제를 적용한 매연 여과 장치
 - 플라즈마 버너 적용 운행차용 DPF 기술
 - 비도로 운행차용 DPF 시스템 개발, PM 저감 성능 80% 이상, 연료 소비량 증가 5% 이하
- 운행차용 burner assist HC dosing 후처리 장치
 - 플라즈마 버너 적용 운행차용 DPF 기술
 - 비도로 운행차용 DPF 시스템 개발, PM 저감 성능 80%



권병현

김용주

핑자오



- 중금속(비스 등)으로 오염된 토양에 전극을 설치해 전기 역학적으로 오염물질을 이동, 제거하는 정화 기술

핑자오

- 광화 과기금회에서는 자선사업과 세계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
- 한중문화청소년협회에서 내몽골을 방문해 녹색 감성이라는 프로젝트 발족함.
- 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중국 사막에 나무 심기 운동 펼치고 있고, 가을에는 100여 명의 중국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해 상호 교류함.
- 여러 활동 등을 통해 중국의 조립 규모가 840만 그루에 달하는 등 생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국제 환경문제 해결은 반드시 국가를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최근 중국에서는 환경 관련 제품 인증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있음.

Keywords

교류 협력, 국제 문제, 환경보호, 한중 관계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환경보호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한중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경제발전에도 대응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과 자원 투입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
- 중국의 환경문제 변화에 대한 한중 양국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국경을 넘어 호흡 공동체로서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이상, 연료 소비량 증가 5% 이하
-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
 - 슬러지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실증 설비 개발
 -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으로써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 유기성 폐자원 혐기성 소화 설비
 - 유기성 폐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지역난방과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
- 생활폐기물 가스화와 발전
 - 소각시설 대체 가스화 현장 적용 실증 설비 개발
 -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자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전력과 고부가 화학연료 생산
- 유해 중금속 오염 미세토양 정화 기술
 - 전기역학적 정화 기술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동아시아재단 · 우리들의 미래

사회	김상협 카이스트 초빙교수/ (사)우리들의 미래 이사장
발표	김희집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송경열 맥킨지 클린테크 리더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
정리	최하은 동아시아재단 펠로

- 김상협 파리협약 최종 체결 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원자력,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의 대표적 사례로 2030년까지 모든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모든 차량들은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오늘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녹색에너지와 녹색교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김희집 교수님은 에너지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송경열 박사님은 맥킨지에서 클린테크 리더로 재직 중이며 재생에너지, 녹색교통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해왔다. 외교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덴마크가 녹색성장 동맹을 체결했는데 이에 대해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의 견해를 듣고 싶다.
- 김희집 기후변화와 신에너지산업의 최전선인 제주도에서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다. 신기후체제 이후 영국에서 흥미로운 정책 발표를 했다.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부 없애고,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규제도 개혁해 신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 산업 지평이 변화 중이다. 재생에너

지, 전기자동차, 재충전 가능한 전지,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네 가지 주요 동인이 이를 이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스가 싼데도 풍력·태양력발전을 보급 중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도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관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GM은 올해 말부터 주행거리가 충전당 320km로 개선된 새로운 전기자동차 쉐보레 볼트를 팔 것이다. 가격도 싸다. 연방 지원금을 받아 3만 달러면 살 수 있다. 테슬라의 신형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346km다. 구글도 전기자동차를 넘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통신산업에서의 스마트폰에 비견될 혁명이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공동 생산 중인데 양산화와 대량 보급을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한국도 선구자가 되고자 한다. 2030년까지 세계 1위 에너지 솔루션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다. 매출 규모가 아닌 시스템과 솔루션 차원에서다. 전기자동차 채택을 가속화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해 수출 전략도 마련하고자 한다. 2030년까지 100억 매출 창출, 50만 명 고용창출이 목표다. 마이크로 그리드나 에너지 제로 건물 등



김상협



김희진



송경열



토마스 리만

의 실험도 제주도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스마트 그리드 투자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한전이 이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제주도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는 한국에 중요한 기회이며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제주도 연안은 풍력발전에 최적의 환경이다. 태양광발전도 성장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의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하다.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SS 전력 저장장치 산업도 호주 등지에서 성장 중이다.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낙관적이다.

- **김상협**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생산 간헐성이 문제가 된다.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등 저장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런데 요새 기름값이 낮아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희진** 에너지 전문가들도 저유가 상황 지속에 놀랐다. 석유 가격이 낮아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작년 미국에서는 풍력·태양력 발전이 61%를 차지했다. 미국에선 석유는 물론이고 가스가 한국의 4

분의 1 수준으로 싼데도 그렇다. 풍력·태양력 발전도 함께 싸진 덕이다. 교토의정서 당시만 해도 재생에너지 비용이 전통 에너지원보다 5~6배 비쌌다. 지금은 10% 정도 비싸다. 윤리적 요인을 생각해 선택지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값이 내릴 것이다.

- **김상협** 원희룡 지사와 스트라우벨 테슬라모터스 CTO의 대화가 생각난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 연사인 송 박사님으로 넘어가겠다. 제주 그린빅뱅과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 말씀 듣겠다.

- **송경열** 그린빅뱅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다.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해 시너지를 만들고 근본적으로 사회와 미래의 모습을 바꿀 것이다. 모두 중요한 분야이지만 그중 전기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관심이 많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 자체가 석탄과 원자력으로 생산되는데 정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겠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전력 생산도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전력 생산 비중을 살펴보자. 풍력·태양광은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덴마크는 비중이 높지만 한국에서는 2% 미만이다. 20년 뒤, 40년 뒤 얼마나 그 비중이 커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주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살펴 보더라도 재생에너지가 주류가 될 것이고 그 기간은 10~20년 후가 될 것이다. 태양력·풍력은 세계 전력 생산의 상위권으로 올라간다. 저유가 시대에 재생에너지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둘은 서로 다른 시장이다. 석유는 교통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그 산업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전기차의 발전 동향을 알려면 전체 자동차 시장을 봐야 한다. 전체 시장 규모는 3조5000억 달러

정도다. 향후 15년간 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판매, 운영, 유지 보수와 같은 애프터마켓, 타이어 같은 부품시장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량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다.

2011~2015년 전기차 판매고를 살펴보자. 2015년 9000만 대가 팔렸다. 이 중 2.5%가 전기차다. 테슬라 같은 완전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전기차의 대부분은 하이브리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매량 증가율이다. 가솔린차 성장률은 4%이지만 전기차는 9% 넘게 성장하고 있다.

맥켄지는 시장 규모가 규제, 기술, 사용자 편의, 인프라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성장한다고 본다. 현재 전기차는 가솔린차에 비해 비싸지만 향후 20년이 지나면 비슷해질 것이다.

규제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유럽은 현재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9g 미만이어야 한다. 2020년이 되면 100g 미만이 된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차량은 140g까지 배출하는 데 반해 100% 전기차는 0g이다. 이는 충분한 경쟁력이 된다.

전기차는 기술 발전과 함께 경제성이 향상된다. 5년 전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600달러였는데 지금은 400달러까지 낮아졌으며 향후에는 200달러로 보고 있다. 이러면 가솔린차와 경제성이 같아진다. 고객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한다. 4년 내에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면 사겠다는 것이다.

사용자 편의성과 인프라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전기차 충전소다. 한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적지만 제주도는 예외이며, 유럽과 중국, 미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많고, 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제주 그린빅뱅의 긍정적인 면을 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 실패한 기업도 많다.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경쟁과 규제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

- **김상협** 기술적인 질문을 하겠다. 2030년까지 제주에서 전기차만 다니게 하려면 전기 수요가 중요하다. 발전소를 얼마나 더 지어야 할까?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우려도 있다.

- **송경열** 제주도에 40만 대의 차량이 있다. 이들이 전부 전기차로 대체되고 평균적으로 30km를 매일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 에너지 수요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 10~20% 정도의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뿐이다. 그러나 만일 이 40만 대 차량이 동시에 충전을 한다면 큰 발전소가 필요하다. 그러니 정책을 통해서 차량주들이 서로 분산된 시간에 충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김상협** 경제가 30%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그 대로였으며, 온실가스 배출 30% 삭감에 성공한 나라가 있다. 덴마크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리만 대사의 이야기를 듣겠다.

- **토마스 리만**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는 파리협정 이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녹색혁명에 도전하는 제주도와 덴마크의 사례를 공유하고 싶다. 한국의 사회 특성상 제주도가 덴마크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덴마크와 유사하다. 전기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대규모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다.

1970년대 덴마크는 석유파동을 통해 공포를 느꼈다. 거의 100%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가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을 체감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웠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과감히 삭감하기로 했다.

덴마크의 전력 중 약 30%가 재생에너지로 발전된다. 재생에너지 종류도 다양하다. 풍력발전보다는 고체 바이오매스를 주로 사용한다. 원자력발전은 없다. 덴마크는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를 세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무탄소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비용 분

제다. 비용 효율성이 높아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도록 정부 자금을 많이 지출했다. 우리의 결론은 보조금 없이도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경제성장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유지하거나 억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도 줄었다. 우리 기업들은 녹색 기술을 수출하면서 경제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이게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겠다. 경제성장을 하고 복지를 제공하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환경을 위해 경쟁력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여론에서는 녹색성장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줄어든다고 믿는다. 그러나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덴마크를 보고 믿어주기 바란다.

덴마크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녹색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에 녹색성장 동맹을 맺어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이 모여서 협력하기로 했다. 학술, 기술적 협력도 진행 중이다. 덴마크에서 특히 제주도와 친밀한 섬은 본홀름이다. 여기는 제주도보다 작지만 이미 무탄소 섬이다. 한국의 변혁 속도는 매우 놀라우며,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덴마크처럼 녹색 전환이 선진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도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아 기업, 산업 기술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관 파트너십, 대학 연구교류, 학계 수준에서도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녹색으로 가자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 **김상협** 덴마크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는 점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 덴마크에서 한국에 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 **토마스 리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집에서 에어컨 사용을 조금 줄이는 정도도 크게 도움이 된다. 풍력에너지 확장도 필요하다. 덴마크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해안 풍력

발전이다. 제주도도 좋은 곳인 걸로 안다.

- **김상협**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친환경 발전을 시도했다. 그런데 선거나 정권 변화로 이러한 정책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정책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궁금하다.
- **토마스 리만** 정책 연속성은 중요하다. 정책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아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이룰 수 없다. 4년 뒤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투자자들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에너지 계획은 장기적인 목표로 수립돼야 한다. 지난 30~40년간 덴마크에서도 정권 교체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진보든 보수든 녹색 정책을 향한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질의응답]

- Q.** 전력 공급 면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전력 발전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전기 저장 등 대책이 있는지?
- A. 송경열** 조율된 충전 분산이 필요하다. 만일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고속으로 충전하려 한다면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책을 통해 낮이나 밤 사이에 충전 가격을 다르게 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
- Q.** 덴마크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원자력발전소 사용 여부인 것 같다. 제주도만 해도 원자력발전소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다양한 전력 발전 방식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를 묻고 싶다.
- A. 김희집** 나는 개인적으로는 원자력발전이 좋은 발전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중적으로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가스는 한국에서는 비싸진다. 미국처럼 파이프를 공급할 수 없어 액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땅이 좁고 비싸서 발전 비용이 높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실용적이고 비용이 낮은 원자력발전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A. 김상협 한국은 전력 그리드 관점에서 보면 일본과 다른 점은 없다. 전기를 수출입할 방법이 없다. 합리적인 에너지 동력 자원을 선택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좋아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전부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 우리가 연구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주제다. 왜 전기차 얘기를 할 때 하이브리드 수소전지를 생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정책적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 생각인지 궁금하다.

A. 송경열 수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 문제는 항상 뜨거운 토론 주제다. 수소전지는 인프라가 문제다. 전기가동차는 집에서도 필요하다면 충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수소전지 기반 자동차를 보급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닭과 달걀의 문제일 수도 있다. 만일 누군가가 공세적으로 수소충전 인프라를 깎다면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예상하기가 어렵다. 누가 시장에서 승자가 될지는 답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인프라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기지 않을까 싶다.

A. 김상협 현대와 기아가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다.

A. 토마스 리만 정책적 동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그렇다.

Q. 김상협 그럼에도 비판적 시각이 여전하다.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일까. 이런 거대한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 모든 분들께 묻겠다.

A. 토마스 리만 한번 시작한 일은 뒤로 가진 않는다. 2030년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기차는 빠르게 보급될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 다른 데서 전기를 수입해서 전기를 운송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우리는 기업을 설득해야 한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이다. 정부와 석학들, 제주도에서 해야 한다. 전체의 의지는 모였다. 나는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A. 송경열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없다. 기술과 경제학

에 관련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리더십과 사람들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전기 사용을 줄이라고 강경하게 요구할 수 없다면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의지를 끌어내는 게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지금의 재정 상황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A. 김희집 노력과 운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도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전기차 4000대를 판매할 것이고 내년에는 2만 대, 내후년에는 2만8000대를 판매할 목표로 예산과 정책을 설정했다. 내년에는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Keywords

파리기후변화회의(COP21), 재생에너지, 녹색 정책, 에너지 산업 전략, 전기차, 제주 그린빅뱅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제주도는 2030년까지 무탄소 섬이 되기 위해 전기차 100% 전환을 시행할 것임.
- 전기차 공급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가야 하므로 기술 발전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 한국의 현실은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만으로 발전하는 것이 어려워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가동되어야 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임.
- 덴마크의 사례를 보고 녹색성장과 경제발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됨.

아태지역 화산지형·해양환경 세계자연유산 발굴과 보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축사	이순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원장
사회	우경식 강원대학교 교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지질유산전문가그룹 위원
발표	토마스 카사드발 미국 지질조사국/ 세계자연보전연맹 지질유산전문가그룹 위원
토론	이희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문경오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세계자연보전연맹 지질유산전문가그룹 위원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 과학팀장
정리	한형철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주무관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화산 지형, 해중 지형 등 많은 소중한 자연자원들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 홍콩, 제주도 등은 지질공원의 지정 보전과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음. 제주도는 유일한 유네스코 3관왕 지역임. 그러나 해중 화산, 열수공, 해저 산악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며 앞으로 이러한 곳에 대한 관련국들의 새로운 발굴·보전 노력이 필요함. 제주도는 많은 광물자원의 보고이기도 함.
- 해저지형 등은 물속에 있어서 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 간 영해 문제 등으로 인해 연구조사조차 쉽게 하기 어려운 실정임. 한탄강은 100km 이상 남북을 흐르는 중요한 지질 자원임.
- 세계자연유산은 총 1031개이며 문화유산 802개, 자연유산 197개, 복합유산 32개소임. 세계자연

- 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초자연적 현상과 미적 중요성, 지구의 역사와 지질적 형태, 생태학적 과정,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의 출현 등을 들 수 있음. 제주도는 교육 등 보호 프로그램이 매우 잘되어 있음.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중 동굴은 바다의 조개모래에서 비롯된 석회 성분이 동굴 속으로 침투해 형성된 독특한 용암동굴 내 생물상을 포함해 세계적인 가치를 갖는 소중한 자연자원임.
- 한국은 이 밖에도 서남해안 갯벌 등의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주의 동굴은 하와이에 비해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많은 지질학적 가치들을 갖고 있음. 한국에는 서남해안 갯벌 등 자연유산 후보들이 존재함. 서남해안 갯벌은 유럽의 바덴 해처럼 조류 이동에 매우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하는 지질생물복합적 자연자원임.
- 아시아태평양 해역에는 환초, 산호초 등 관련 해중 지형이 300개소 정도 되며 기후변화에 민감해



-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고 상대적으로 지정된 곳은 적음. 그러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어려움. 특히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며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상당한 시일이 걸림. '산호 삼각해역'이란 해역은 환초, 보초 등 많은 산호 지형이 존재함. 주변 저개발국의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 부족, 자연유산으로 지정 시 강력한 규제 탓에 거주민의 반발이 크고,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연속적인 자연유산들은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큼. 이러한 것들이 아태 지역의 새로운 유산의 발굴과 지정 보전 관리를 가로막는 큰 장애 요소들임.
- 지금까지 자연유산은 오로지 육상부에만 집중됨. 지난해 해저 화산지형이 제주 해저에서 발견됐으며 이 밖에도 많은 해저지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 이제는 해양 자연유산에도 집중할 때임.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어떤 해역은 영해 분쟁이 심각하여 보전지역을 정하기 어려움.
- 과학적 경계와 실제적 경계의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유산지역 지정은 경제적 변영과 함께 지역의 안정을 가져옴.
- 제주 주변 해저 지형의 새로운 조사가 시급함. 특히 제주 앞바다 대륙붕에 대한 해양 지질환경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함.
- 지질생물학적으로 인류의 먼 미래에는 매우 독특한 유산이 될 것임. 지방과 중앙의 적극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 지질에 대한 각국 간 협력을 통해 전면적 조사를 하도록 제안함.
- 연속 유산 지정은 유네스코의 이념에 부합함. 한국의 자원은 보편적 가치가 모자랄 수 있으나 국가 간 연속되는 다국가 연속 유산 지역 지정은 가능함.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질다양성은 생물다양성과 연결해 지역주민이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함. 다국가 연속 유산은 지역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좋은 지역이 될 것임.
- 유산 지역을 보호하는 교육 강화가 절대적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균형적 보호 방법이 필요하나, 저개발국은 예산 문제로 매우 어려움. 모든 나라가 모든 형태의 노력을 집중해야 함.

...
제4장
여성·교육·문화

D I V E R S I T Y

[신문 콘서트 2016]

청년세대의 오늘과 내일

중앙일보

사회	정강현 중앙일보 기자
토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연	이정 가수
정리	유영선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글로벌협력팀 사원

지난해 중앙일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범한 신문 콘서트는 2030 세대 독자와 함께 신문이 다루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공연도 즐기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다. 이번 신문 콘서트는 제11회 제주포럼을 기념해 '청년세대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처음 제주도에서 열렸다.

- **정강현** 여소야대 정권이 탄생한 이번 총선을 두고 "2030 세대가 뿔 났다"는 말이 나온다.
- **원희룡** 일자리 문제로 아파하는 20대뿐 아니라 노후 걱정과 자녀의 독립 문제로 고통 받는 50대 초반 유권자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안 되면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라도 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 **정강현** 정치인으로서 젊은 세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원희룡**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구조

적인 부분에서 출발한다. 20대 문제는 핵심은 일 자리이고 50대 문제는 집인데,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50대는 지금까지 인생의 결과물이 '집'에 집중돼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노후가 불안해지고 오르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사회가 이 문제를 안고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부분을 두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식의 설교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비를 맞으며 아파하는 청춘들에게 우산을 씌워 주면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들면 함께 비를 맞으며 고민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 **정강현** 젊은 세대의 역할도 있을 것 같다.
- **원희룡**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030 세대는 늘 아팠고 방향했다. 이 아픔을 오혀려 젊음의 특권이라 생각하며 힘을 내야 한다. '수저론'을 언급하며 미리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보면 답답한 마음도 든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훈시를 하려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열정을 발휘해 힘을 내고, 정치권은 그 열정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 **정강현** 대학입시부터 사법고시까지 '수석'의 길을 걸어 젊은 세대의 고민에 공감이 어려울 것 같다.
- **원희룡** 대학 입학 후 사법고시에 붙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소위 운동권 학생으로 10년을 지냈는데 고민이 많았고 방향을 하던 시기였다. 운동권으로 수배돼 도피 생활을 할 때는 '희룡이가 한라산 백록담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다. 하지만 당시 경험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기다려준 부모님께 감사한다. 당시 부모님처럼 기성 세대가 젊은 사람을 믿고 열정을 북돋워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 **정강현**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의외의 결정을 할 때가 많다. 사법고시 연수원을 좋은 성적으로 나와 판사가 아닌 검사가 됐다.
- **원희룡** 판사로 하루 종일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론 내 젊은 열정을 충분히 발산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운동권 경험이 있어선지 시키지도 않은 사명감에 불탔다. 당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패 척결이 이슈가 되던 시절이었는데, 중심에 선 검사들을 보며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현장에서 직접 뛰며 무에서 유를 찾아나가는 데 흥미를 느꼈다.
- **정강현** 운동권 출신이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으로 정계 입문한 것도 의외다.
- **원희룡** 검사와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하고 외환 위기 등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뀐 부분들이 있다. 젊을 때는 민주화만 생각하며 달렸는데, 경제성장을 포함한 국가 운영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진보만 열심히 투쟁한다고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보수부터 개혁을 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 **정강현** 2007년 대선 경선 어려움 속에도 완주했다.
- **원희룡** 재벌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보수 정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나서서 보수 정당 안에도 서민들을 보듬어 주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정강현

원희룡

이정

- **정강현** 도지사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 **원희룡** 제주도는 나에게 일종의 시험무대다.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입바른 소리는 잘했는데 현실적인 행정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후에는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충분한 지지를 얻고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Keywords

청년세대, 열정, 성장, 정치, 유권자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정치인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연결시키는 사람이므로, 주어진 무대에서 주어진 숙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함.
-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가야 함. 또한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
-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한라산 중턱 개발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 제주의 자연은 망가지면 회복 불가능하고, 중국 자본에게 넘어가면 되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
- 더 창조적이고 문화예술적으로 품격이 높은 고급 관광을 개발해 싸구려 제주관광 이미지를 해소할 것임. 이는 도민들의 자부도를 키울 수 있으리라 기대함.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과 협력적 리더십

제주한라대학교

사회	박미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발표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토론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 팀장
	루웨이 중국 상하이교통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
정리	김신호 제주한라대학교 국제자유도시센터 소장

박미영

- 21세기 들어 급성장하는 경제의 역동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 상호 인정과 화해 방안 모색은 인류 생존의 가장 큰 화두임.
- 종교와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편가르기, 갈등과 대립이 빈번한 아시아에서 화해의 기제로서 문화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세션의 목적임.

현승수

-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현상인 '아시아 패러독스'의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 교류와 협력은 단기적으로 정치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에 수반되는 위기감을 완화시켜주고,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공감과 유대의 강화를 통해 아시아 통합체 구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 최근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중국인들의 반응은 대중문화가 충분히 공공 외교 몫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반면 일본에서 한류가 혐한류(Anti-Korean Wave)로 변질된 사례가 보여주듯 문화의 지나친 상업성과 일방적 수출은 반작용을 부르게 마련이라는 교훈을 줌.

- 현 상황만을 근거로 무전략적인 현상유지형 방위적 태도를 지닌 채 긴장하지 않는다면 한중일 3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경제·문화적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3국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문화 교류 협력 관계마저도 경색될 우려가 있음. 우호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3국 모두 꾸준한 관심과 실천을 보장할 정치적 지원이 필요함.
- 한중일 3국 공유 문화의 탐색과 발굴이 중요함.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 못지않게 공통된 문화 인식의 확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에 활발했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어야 함.
- 아시아 문화 공동체 비전을 공유해야 할 한중일은 국가 간 갈등 이슈를 민족주의에 투영하면서



박미영

현승수

박정호

루웨이

호사카 유지



대립과 경쟁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협력적 리더십에 기초해 문화적 다양성을 배제가 아닌 조화의 관점에서 아시아를 협력과 공생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박정호

- 아시아인 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시아 문화 공동체 형성의 핵심 토양임.
- 최근 세계적인 특별한 현상은 세계화와 다문화임. 전자가 경제적 이슈라면, 후자는 문화적 이슈임. 문화 없이는 네트워크 경제도 없고 문화가 중심이라면 경제는 부산물에 불과함.
-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역사 해석 논쟁, 영토 분

쟁 등이 동북아 국가들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역내 통합성과 연계성 증진을 방해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문화 교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토대로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경제협력과 평화 지향적인 지역 질서를 만들어야 함. 이와 더불어, 환경,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공동 위협 요인에 대해 공동 대처해야 함.

루웨이

- 젊은 세대들이 문화 교류로 국가 간 갈등과 장벽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제주대학교

사회	김기섭 전 부산대학교 총장
발표·토론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케트 스와스티카 우다야나대학교 총장 포강 미안마 양곤대학교 총장 보 반 쉐 베트남 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 총장
정리	고윤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허향진

-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학의 역할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주의를 전략적 기반으로 삼아야 함.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역사와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적 사고와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범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제주대학교는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해 여러 실천을 행함. 제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 제주 미래에 대한 방향성 제시, 지역사회에 대한 혁신 방안을 세움과 동시에 마이스(MICE) 산업, 아열대 생물, 해양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산업으로 지역의 경제와 산업을 선도함. 또한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위해 특성화 산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링크사업단과 현장 실습으로 지역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또한 영어 능력 우수자를 지원하고,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해 국제개발센터를 학내에 설치, 해외교류 수학 파견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국제 교류를 선도함.

포강

-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식과 실력, 기술을 연마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음. 지역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고등교육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
-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양곤대학교에서는 교실 리모델링, 충분한 교구 준비, 온라인 도서관 설립,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와이파이 제공을 통해 교육적 기반을 강화함. 캠퍼스 교수진을 늘리고 학생들의 능력 향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속적인 스포츠, 예술 트레이닝 프로그램, 다른 학문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음.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3국 간 비극적인 역사도 존재하고 민감한 이슈들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선거에 승리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위해 악용하거나 언론을 이용해 분쟁을 과장하고 부정적인 면을 확대시키는 현실적 문제가 있음.
- 한중일 3국 갈등은 스스로 해결할 문제지만 미국이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과 이 지역에 대한 지배 관리를 위해 각국의 갈등 요소들에 개입하려 함.
- 젊은 세대들이 국가 간 갈등 요소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치·산업·교육 분야 리더들의 지원이 필요함.
- 성균관대학교 중국학연구소와 상하이교통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간 한중 대학생과 대학원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좋은 모델임.

호사가 유지

- 한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키느냐’, ‘한중 관계나 한러 관계를 강화시키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음.
- 우호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중일 3국 모두 지속적 관심과 실천이 보장될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동감하지만, 결국 문화 협력이

정치적 관계에 종속된다는 의미임.

- 자폐적 민족주의(autistic nationalism) 현상의 뿌리는 부상하는 한국의 경제와 한일 관계보다 한중 관계를 우선시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본의 반발에 기인함. 일본의 그러한 반발 배후에는 미국이 있음.
- 가치적 측면이나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먼저 한미일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고 봄. 한중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북한과 가치를 공유하는 면이 아직 많은 나라임. 한미일 공조를 더 긴밀하게 한 다음에 중국 측과 협력한다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야 함.

Keywords

문화적 다양성, 협력적 리더십, 자폐적 민족주의, 아시아 패러독스, 상호적 문화 소통

- 한중일 3국 간 갈등 요인들을 공동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이 어렵다면 민간과 1.5 트랙으로 주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 작업도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속되어야 함.
- 한중 양국 간 견고한 경제적 관계에 기초해 양국 젊은이들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동북아가 한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길 희망함.
- 한중 양국의 개별 연구소와 학자들의 연구는 해당 국가의 영향을 받아 편견을 극복하기 쉽지 않음. 양국 학자들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공동 연구 프로그램 촉진을 희망함.
- 한중일 3국의 문화 교류 확대에 찬성하지만 과거와 차별화된 방안 제시가 필요함.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자폐적 민족주의의 관리를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함.
- 상호적 문화 소통과 공감 현상을 지속하고 확산시켜야 함. 일방적 문화 수출이나 수입 배제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또 민족주의가 문화를 ‘침투’의 도구로 인식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음. 갈등과 경쟁 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야가 문화 교류 협력일 것인바, 경쟁보다는 수평적 참여를 통한 상생과 공조를 전제로 삼아야 함.
- 동아시아가 공유할 수 있는 아시아 정체성의 창출을 위한 한중일 공동연구 기구 설립이 필요함.



김기섭

허향진

케롯 스와스티카

포강

보반선

의 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포럼과 교류사업을 펼치고 이들이 외국대학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케롯 스와스티카

- 대학 간 협력, 국제적 협력은 지식의 차이를 줄이고 인재 유출을 막는 데 용이함. 세계적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서 탁월성이 발현된다면 공통의 프로젝트를 여러 기관과 협력해 이뤄낼 수 있으며, 이런 역할을 대학이 담당해야 함.
- 우다야나대학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유학생들에게 인도네시아 언어교육, 건축, 경영 등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유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많은 대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교류를 이어나감. 우다야나대학이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는 관광, 농업,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특성화 부분으로 이러한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다야나대학은 글로벌 대학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제협력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부터 내려온 행복의 개념(사람과 사람, 사람과 신, 사람과 자연 간의 조화)이 중요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개념이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보반선

- 국제화, 지역화와 함께 다원주의의 부상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비전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 고등교육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는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경을 넘는

여러 고등교육기관의 협력이 중요함. 이를 통해 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학 리더들과 함께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 결과적으로 혁신의 문화를 채택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철학은 전인적인 인간의 추구, 브레인 스토밍, 토론 촉진과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이 됨.

Keywords

뉴노멀 시대, 평화와 번영, 국제협력, 고등교육,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전통적으로 대학은 교육과 학습연구가 주요 임무였으나 오늘날 대학은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함.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행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대학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음.
-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학은 기술과 정보의 진보뿐 아니라 문화 보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문화적인 측면 또한 중요시되어야 기술과 문화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있음.
- 국제 NG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연구·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을 위해서 고등교육은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 협력적인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끊임 없는 포럼과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아시아는 인종·사회적 다원사회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음.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대학

제주대학교

진행	변종현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장
사회	고성준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리마오센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오카가키 도모코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김민호 제주대학교 교수
정리	고경민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고성준

- 아시아는 역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음.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긴장과 갈등에서 공존과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대학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주도해나갈 건강하고 젊은 리더들을 배출해야 함.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대학의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리마오센

- 고전에 담겨 있는 소중한 정신적 유산은 대학의 리더십 교육에 중요한 몫을 함. 공자의 도덕사상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리더십을 기르는 데 기초가 됨.
- 유교의 5가지 덕목, 즉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중국 도덕철학의 핵심 콘텐츠임. 유교의 도덕 사상은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도덕 이데올로기로 기능함.

- 유교는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인이 공유하는 전통 사상임. 유교적 도덕 사상은 새로운 동아시아 시대를 위해 재생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역사를 둘러싼 분쟁과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동아시아 도덕 공동체 구축이 필요함.
- 세계화와 지역주의 시대에 개인의 도덕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도덕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유교의 도덕 사상이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것임.

오카가키 도모코

- 오늘날 아시아 지역주의는 유럽과 다른 논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음. 아시아는 안보 이슈로 인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했음.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아시아의 지역주의가 발전한 이유는 문



변중현



고성준



리마오센



오카가키 도모코



레이프 에릭 이슬리



양길현



김민호



화, 종교, 정치 체계에 존재하는 지역적 다양성 때문임.

- 아시아의 대학들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인식하고 활동해왔음. 지금도 여전히 지역적 역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현실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교육과 연구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아시아의 대학들은 대학 본연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학문적 자유'와 '과학적 연구'가 중요한 과제임.
- 세계화될수록 국경을 가로지르는 학문 공동체 사이의 공동 연구와 교류가 필요함. 아시아의 대학 교육은 공적 요구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지배되어 왔고, 연구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치중해왔음. 아시아에서 대학교육의 방향은 기본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자

극하는 것임.

레이프 에릭 이슬리

- 오늘날 동아시아는 역동적이면서도 민감한 지역임. 경이로운 경제성장 속에서도 동아시아는 역사와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음. 국가간 민족주의의 충돌로 배타적 국익 추구와 외교적 갈등이 동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음.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조화로운 공동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아시아 공동체 구성 조건으로 1)아시아 국가 외에 중견국(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과도 교류를 열어놓는 '개방적 지역주의' 2) 일류 대학 외 다른 대학들, 시민사회, 북한과 대만까지 포함하는 '지역 질서의 포괄성' 3)지역 질서 건설 방법에 관한 '사상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함.

- 동아시아 국가 정부와 대학들은 젊은 세대들이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한중일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통해 공동 안보에서 경제적 번영, 문화적 혁신, 풍요 등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음. 이미 역내 정부와 대학들이 협력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양길현

- 유교의 도와 덕, 특히 유교의 5가지 덕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가운데 인간 존엄성과 인권 등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확산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 동의함. 아시아 지역주의 모델이 정책 조정 메커니즘을 결여했거나 신뢰 부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럽 지역주의 모델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지적에는 동의함. 그러나 독일, 프랑스, 영국, 북유럽, 남유럽, 동유럽, 중부유럽 등으로 다면적 지배가 정착되어 있는 유럽 대륙의 다국가 지배와 달리 중국 대륙에서는 단일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동아시아에서는 다자적 접근이 유럽에 비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일과 한미 등 양자적 접근에 주력하는 국제정치적 개입과 그에 편승하는 한일 정부의 정치적 편향도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가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유교적 윤리와 도덕철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도덕적 역량을 증진하고 나아가 공존 공영의 동아시아 도덕 공동체 구성을 제안함.
- 동아시아 지역 대학들은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서구 국가들이 이룩한 학문적 성과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에라스무스플랜(ERASMUS, 유럽연합 내의 대학교류 프로그램)의 성과를 참고해 역내 대학들 간 영어교육의 강화와 공동 연구, 공동 학위와 학생 교환 프로그램 강화를 추진해볼 필요 있음.
-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협력을 주도할 지역 국제기구도 없이 한중일 3국 간 민족주의적 충돌이 빈번한 현실에서 어떻게 역내

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김민호

-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문화, 종교, 정치 체계 등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자의 도덕 사상만 강조할 경우, 아시아 내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전통이 간과되고 문화적 패권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됨. 아시아 대학들은 아시아 지역이 문화, 종교, 정치 체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구의 근대화론 패러다임을 넘어서 지역별, 국가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발전 모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Keywords

동아시아, 새로운 질서, 대학, 고등교육, 유교, 지역주의

정부와 대학들이 학문적 자유의 증진과 협력 파트너십을 높여 나갈 것인가 대응책 모색이 필요함.

- 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할 때 국가별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학의 시민교육적 기능 강화를 제안함. 또 아시아 내 이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지닌 아시아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어 새로운 지역공동체 모형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제안함.
- 동아시아 지역주의 틀 속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한중일 간 상호 이해를 심화해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데 동아시아 공동체는 중요하며, 이 공동체의 공고화를 위해 각국 정부와 대학들이 나서야 하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야 함.

여성역량강화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진행	곽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임연구원
좌장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발표	린다 바크테만 주한 스웨덴대사관 참사관 유영선 BPW 한국연맹 회장 이선주 KT지속가능경영센터 센터장 이명희 풀무원 식품(주) 인사기획실장
토론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정리	소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구원

-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가 이뤄야 할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고, 목표 5(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과 경제·개발 계획 달성에 양성평등이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 최근 직장, 시장, 지역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역시 기업의 책임, 다양성 존중과 성평등 관련 제도 확대로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어왔으나,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고위직 진출, 채용, 승진과 임금 등에서는 여성의 충분한 참여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2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2%에 불과하며, 2016

년 3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국가별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2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본 세션은 성별 다양성 확보와 여성역량강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다.

린다 바크테만

-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이 발달한 나라이자 세계 최초로 페미니스트 정부를 갖고 있다.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는 스웨덴 정부가 의사 결정과 자원 배분에서 중점을 두고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이 건강, 교육, 리더십과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은 여성역량강화와 관련해 강력하고 핵심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 정부는 여성역량강화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옴을 인식하고, 양성평등, 동일 임금과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여성역량강화는 단순히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세부 목표의 하나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기업의 우선순위로, 또 기업 활동 전반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의 절반이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을 것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여성역량강

화원칙(WEPs)은 기업의 양성평등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유영선

- OECD 회원국 36개국 중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14년째 부동의 1위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이유에는 여성의 기회를 막는 유리 천장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저임금 일자리 등 여러 이유가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의 일'이 과소평가되는 데 있다.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세



곽경연



임홍재



린다 바크테만



유영선



이선주



이명희



민무숙

계 표준보다 낮고, 직장 내 유리천장과 경력단절은 임금 격차를 낳고 있다. BPW(전문직여성클럽)는 양성평등 사회로 가는 데 경제적 평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동일 임금의 날은 여성의 급여와 남성의 급여가 같아지는 날로, 남성이 받는 임금을 채우기 위해 여성은 1년을 일하고도 이듬해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 임금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녀 임금 차이를 분석하는 국가기구를 신설하고 기업 인증이 도입되어야 하며,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선주

- KT는 국내 여성 근속년수 1위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남녀 고용평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을 2년씩 제공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99%를 나타내고 있다. KT는 여성인력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인력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인식조사에서 나온 시사점을 바탕으로 여성인력 육성 방향을 설정했

다. 현재 여성인력 활용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육성, 남녀 모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문화 조성, 여성인력 경력 지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으로 대표되는 3가지 핵심 전략과 이에 대한 11개 전략과제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해 여성인력에 적극적 투자와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KT의 남녀평등 사례를 한국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명희

- 로하스(LOHAS)를 지향하는 풀무원은 가족, 여성과 가장 가까운 기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우수한 여성인력을 육성하고 유지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 친화 기업으로 조직과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조직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몰입해 역량과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육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풀무원은 자녀가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도, 승진·승격·보상에 대한 여

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별도의 평가와 보상 제도인 육아 휴직자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임신부 자동 단축 근무 제도를 조직원 신청이 아닌 자동 시행으로 적용했다. 풀무원은 2020년까지 여성 임원 30% 달성을 목표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민무숙

- OECD 평균에 비해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으며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 인프라 확충과 육아제도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 상수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와 후진적 근로 문화에 있다. 오늘 세션에서 두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과도하게 기업 중심으로 치우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가족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전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 여성의 경력 유지와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직장동료, 상사 등 남성들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임홍재

-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의 핵심 주제는 '평등이 기업의 경쟁력이다'로, 평등은 여성역량이 강화될 때 가능하며, 기업 문화와 정부 정책이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역량강화원칙이 기업 운영의 모든 단계에 내재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CEO와 이사회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를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기업 내부 여성역량강화와 양성평등 문화가 공급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될 때,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튼튼하고 건전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

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모든 이해관계자(투자자, 소비자, 근로자, 협력사, 정부, 지역사회 등)의 참여와 기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Keywords

다양성, 여성역량강화,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인권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가치로, 특히 여성 인권은 국제 인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5번째 목표인 여성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은 SDGs의 모든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크로스 커팅(cross-cutting) 이슈임.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에도 여성역량강화와 양성평등 문제는 한국에서는 아직 인식과 실행 면에서 저조함.
- 여성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이 실행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가 달성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달성하는 데 기업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
- 여성의 참여와 양성평등이 더 보장된 나라가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루며,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성장가능성이 큼. 유엔은 여성이 많은 국회일수록 보건, 교육, 인권 보호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입법 활동이 더 활발함을 강조함.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어야 함.
- 이 세션에서 발표된 기업 사례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여성의 역량강화와 권익 증진을 주도하는 모습이 고무적임. KT의 여성 인력 운영 핵심 전략 방향, BPW 한국연맹의 동일 임금 캠페인, 풀무원의 여성 친화 제도, 2030 목표 등은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부합하는 정책이며, 국내 기업들이 여성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의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함.

[청년리더 컬처서밋]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내가 꾸는 꿈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컬처오픈

특별공연	김동우 피아니스트
사회	우상임 피아니스트/ 자작나무 숲 대표/ 문화기획자
환영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홍석현 월드컬처오픈 위원장
좌장	한상엽 소셜벤처 인큐베이터 Sopoong 대표
발표	이와이 미사키 일본 임팩트 허브 도쿄 이벤트 협력매니저 양광레이 중국 월드뮤직상하이 예술감독 겸 대표 로렌 싱어 미국 쓰레기 제로 실천가/ Trash is for Tossere & the Simply Co. 창립대표 강경옥 제주 해녀 스크니 온 캄보디아 액티브 아티스트/ Epic Arts 임원
정리	진의량 월드컬처오픈 컬처디자이너

- 피아노의 88개 건반은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 다르게 아름답다.
- 문화는 언어를 넘어선 언어다. '문화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제주'가 되기 위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의 섬 만들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 청정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제주, 세계인이 사랑하는 제주,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제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일본의 나라, 중국의 닝보와 더불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가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월드컬처오픈이 함께한다.
-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주, 세계 평화의 섬, 문화예술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수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과 함께 교류하며 창작하고, 공감대를 같이하기에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한상엽

- 제주가 지향하는 청년은 경계를 넘고 벽을 허무는 청년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창의적 활동을 해온 청년 리더, 컬처디자이너들의 컬처서밋으로 희망찬 문화도시 제주의 모습을 함께 그려본다.

이와이 미사키

- 문화는 삶의 일부이며 삶은 또다시 문화의 일부다. 문화와 문화 사이의 소통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혹은 기업들의 비전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네



김동우



우상임



원희룡



홍석현



한상엽



이와이 미사키



양광레이



로렌 싱어



강경옥

트위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임팩트 허브'다. 사회를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에 창업가들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소통을 최고로 생각한다.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가운데 임팩트 허브의 노하우가 있다면, 네트워크 매니저로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 있는 협업은 소통의 양에 좌우되므로 '0(제로)'에서 '1(하나)'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

양광레이

- 우리의 생활은 아주 빠르게 변화한다. 쉽게 잊히고 묻혀버릴 수 있는 세계 곳곳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들을 찾아내어 다양한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티베트 고도, 그들의 삶이 담겨 있는 음악을 도시로 가져와 그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도록 티베트 소수음악 음반을 제작하고 있다. 음악을 하고 북을 치는 행위는 인류의 원시성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하며, 원형 회귀의 음악 자체로 치유가 된다.

월드뮤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에 철학이 있다면, 월드뮤직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자 한다. 중국은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음악, 그 근원적인 소리를 통해 마음의 휴식을 찾으며, 현대 퓨전으로 지금의 젊은이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월드뮤직이 추상적이라 생각되지만 인류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 선율들이 낮설 수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

로렌 싱어

- 4년간의 '쓰레기 제로(Zero Waste)' 삶을 살면서 금전적인 절약을 할 수 있었으며, 훨씬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의 포장지는 거의 쓰레기다. 쓰레기 제로를 위한 실천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재를 샀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만들어서 썼다.
- 재활용에 관한 의식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며, 기업 또한 공공의 책임을 지고 물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강경옥

- 제주 해녀의 고령화와 물질의 힘듦으로 해녀가 줄어 들고 있는 현실에, 몸이 허락하는 한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싶다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부끄러웠던 그녀의 어머니도 해녀다. 왜 해녀를 꿈꾸느냐 묻자 거리낌 없이 “얼마나 힘든지 해봐야 알지”라고 답한다. 그 말에는 문어를 잡고, 소라를 땀을 때의 기쁨이 그 어떤 것 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 숨어 있다.
- 어두운 바닷속 아랑아랑거리는 해초 사이로 물질을 하는 것은 “저승에서 돈을 벌어 이승의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표현할 만큼 고된 일이기도 하며 혼자 물질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물질은 혼자서 할 수 없다”고 그녀는 말한다. 혼자서 물질을 하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닻 등에 다리가 걸리는 사고가 나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
- 물질은 함께 해야 하는 일로서 공동체적인 일이다. 공동체에 규칙이 있다면, 비위지면 채워주고 채워지면 나눠주는 삶의 규칙들이다. 상군 해녀를 따라 먼바다로 나갔던 그녀에게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바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테왁(해산물을 담는 바구니)은 텅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테왁은 각종 해산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로의 협력으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소크니 온

- 장애를 갖고 있는 나에게 사람들은 “너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영상 속의 그녀는 목발을 짚고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장애를 문화로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 ‘나의 꿈’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 통합예술을 하는 아티스트

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보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 하라며, ‘마음의 평화로 공동체의 평화를’이라는 슬로건과 달라이 라마 말을 전한다.

- 지혜를 공유하며, 음악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쓰레기 제로로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며, 혼자보다는 함께 협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함을 느끼고,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다.
- 사회와 예술, 건강과 환경, 문화의 서로 다른 분야에서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 리더들의 실천적 삶으로부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해갈 수 있다. 인류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는 컬처디자이너들이 있기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어간다.
- 가슴 뛰는 무언가로 시작한 이들 또한 끈기 있게 활동해가는 경험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인류 공존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문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 누구나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누구나 멋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추구한다. 더러는 다른 문화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르기에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 이렇듯 우리는 문화를 통해 교류하고, 나눔으로써 더 따뜻한 삶을 살아간다. 자신의 열정과 재능으로 더 나은 삶,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디자인하는 창의적이자 매력적인 우리의 시민들, 컬처디자이너들이 사는 곳이 문화도시이고 창조도시다.

Keywords

다르기에 아름답다, 문화 세션, 청정 자연, 보다 나은 미래, 소셜 네트워크, 지혜 공유, 청년, 월드 뮤직, 소수 음악, 제로 웨이스트, 제주 해녀, 장애 극복, 재활용품, 친환경, 공동체, 문화, 컬처서밋, 컬처디자이너, 문화도시

[아티스트 패널토크]**세계적인 예술로 승화되는 제주다움을 찾아서****제주특별자치도·월드컬처오피스**

특별공연	제라진 제주어린이 합창단
사회	이상임 피아니스트/ 자작나무 숲 대표, 문화기획자
환영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홍석현 월드컬처오피스 위원장
좌장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발표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정보원 조각가 김석윤 건축사사무소 김건축 대표/ 건축가 김주원 하우스스타일대표/ 건축코디네이터 김개천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정리	진의량 월드컬처오피스 컬처디자이너

- 가장 제주다운 문화가 곧 세계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제주의 토속성에서 찾아본다.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가들의 모임에서 한국을 대표 하는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제주다움을 함께 공유한다. 세계인들에게 치유와 감동의 메시지를 선사하는 제주의 문화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탐색해 본다.
- 제주 갈옷을 입고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 가사를 붙인 노래를 부르는 제라진 제주어린이 합창단의 청아한 노래에서 제주다움을 엿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주의 거리가 아니라, 제주만의 모습을 보존해야 한다.
- 제주의 어디를 지키고, 사람을 위해 어디를 재구

성할 것인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 미래 제주의 핵심 가치와 인류가 공존하는 삶의 양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 제주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김원

- 모든 환경이 그러하듯 제주 또한 리셋 버튼이 없다. 바람과 돌이 만들어내는 토속적 풍토가 제주의 자원이며, 제주 자연이 갖는 본연의 뿌리입니다. 제주의 돌이 콘크리트 벽보다 강한 것은 제주의 돌과 돌 사이 구멍 때문에 바람의 힘을 덜 받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제주의 자연이 갖는 토속성으로 제주를 지켜야 한다. 세계 유수의 항구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그러하듯, 세계 건축의



흐름은 내륙에 건물을 짓기보다 '플로팅 에어포트', 크루즈 선박의 '모바일' 등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을 지향한다.

정보원

- 제주 신산공원에 설치할, 88 서울올림픽 성화 도막 기념 조각품을 구상할 때 제주다움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람들이 프랑스 남부 코르시카 섬, 시칠리아 섬의 허름한 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같이 감탄과 존경의 말을 하는 것은, 자연의 소리와 오랜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을 많이 찾는다. 제주도도

자연의 소리가 사라질 때 제주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성화 도착 기념 조형물을 만들 당시에도 제주의 토속성을 지키고자 했으며, 외형의 모방과 재현이 아니라 진실된 창작으로 제주의 문화가 녹여져야지만 제주다움이라 생각한다.

김석운

- 자연 환경에 건축물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 제주는 지형과 기후에 따라 돌과 바람으로 건축을 할 수 있기에 '돌과 바람의 건축'으로 제주의 토속성을 살릴 수 있다. 바람과 땅이 만들어낸 분화구 형태의 움푹 공간에 집을 지으며, 제주의 민가는 집채가 각기 떨어져 있는



우상임

원희룡

홍석현

김원



정보원

김석운

김주원

김개천

별동채로 집을 짓고, 현무암으로 벽을 세운다.

김주원

- 형태나 소재에 초점을 두기보다 제주의 토속성에 기초해 건축을 하기에 제주다움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제주의 바람을 만날 수 있도록 집을 짓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추구한다. 안인 듯 밖이며, 밖이면서 안이 되는 공간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이기에 실제 생활 주거 공간은 간소함을 추구한다. 간소함은 소박하고 검소함에 있기보다 작은 형식이 거대 형식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건축은 자연과 우연히 만난다. 창문은 풍경이 되고 새로운 공간이 된다.

김개천

-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삶은 자신만의 거침없는 삶이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제주가 아니라 제주만의 아우라가 중요하다. 공간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구성으로 공간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작고 소박한 제주의 건축은 히든 스케일이 있다. 그것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종속을 거부한다. 주변 환경과 연결되고 관계하는 건축이다. 바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공존하는 '제주다움'이다.

Keywords

제주다움, 움푹 공간, 제주의 바람과 돌, 건축은 우연이다, 히든 스케일, 신상공원, 제주를 사랑하는 모임, 지속가능한 건축, 제주의 토속성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컬처오픈

사회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좌장	우메자와 아키마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발표	뤼옹 닝보시 문화방송신문출판국 부국장 니시자키 미야코 나라시 시민활동부 이사 판저위안 칭다오시 문화방송신문출판국 공공문화처장 손정연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박철완 청주시 문화예술과장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김철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정달호 전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월드컬처오픈 대외협력단장 롤프 노라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시(2008년 유럽문화수도) 문화국장
정리	박신영 월드컬처오픈 연구팀장

- 2012년부터 시작된 문화도시 사업을 주제로 한 중 일의 활발한 문화 교류 사업, 시민 차원의 교류 심화를 위해 논의함.
- **목표**
- 동아시아의 상호 이해와 연대감 형성, 전통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요인으로 지방 도시의 창조적 발전, 한중일 3국의 문화 협력 심화 도모
-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 강화, 지방도시의 다양성 융합
- **발표 순서와 내용**
- 롤프 노라의 30년 이상 도시 문화 교류 진행 경험

- 과 노하우 발표
-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존 도시와 2016년 도시들의 성과와 계획 보고
- 동아시아 문화도시 발전의 방향성과 방법 모색

롤프 노라

- 유럽 문화수도의 목적 유럽의 풍부한 문화를 알리고, 유럽이 공유하는 문화적 속성을 기념하며, 도시의 발전을 도모함.
- 유럽 문화도시의 혜택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 문화적 표현의 형성을 위한 시민 참여를 도모함.
- 스타방에르 시의 성공 사례
- 1800년대 해운업과 조선업, 2000년대 석유산업



김현민 우메자와 아키마 뤼옹 니시자키 미야코 판저위안 손정연



박철완 이중환 김철 정달호 롤프 노라

의 중심지였으나 이후 생산력이 감소한 스타방에르 시는 유럽 문화수도 지위를 통해 문화·예술·관광 등 새로운 방향으로 도시의 활기를 회복함. '열린 항구(Open Port)'라는 슬로건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예술 활동으로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도시로 새로운 문화 시대의 서막을 엮.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연대감과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노르웨이우드의 친환경 목재 건축, 등대 예술 프로그램, 맥주공장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작업 지원 등 양질의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내 정체성을 강화함.

■ 문화 교류의 방향성

• 문화적 혜택이 한시적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꾸준히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도시의 역사와 새로운 요구, 문화예술의 기대를 가질 때 성공적일 것임.

뤼옹

- 동아시아 문화도시 닝보의 방향성
- 풍요로운 지역 역사와 문화 요소를 활용한 공공 요소를 강화함.

•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을 연계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함.

■ 동아시아 문화도시 관련 사업 계획

- 동아시아 현대 공공문화 구축
- 현대적인 공공문화 시스템: 공공문화 인프라 개선과 수준 향상
-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 보급 사업 시행
- 무형문화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 지역의 역사적, 민속문화 자원 발굴과 통합
- 문화적 소양이 높은 젊은 인력과 과학기술의 연계
- 동아시아 13차 5개년 일환의 액션 플랜 마련
- 책의 도시, 음악의 도시, 영화의 도시 닝보

니시자키 미야코

- 도시 소개 1300년 역사의 나라 헤이조쿄는 전 세계에 문화를 열고 한중 문화를 받아들인 국제 도시임.
- 중요 계획
- 9~10월 집중적인 사업 시기, 고도 나라의 모습을 표현하는 각종 행사 기획
-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의 동대사에서 한중일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2016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현대설치미술 작품 공개: 현대미술과 함께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이미지 전달

- 앞으로의 문화 교류 방향
- 청소년 교류
- 시민 참여 교류
- 질 높은 문화예술 교류

판저위안

- 도시 소개 닝보는 한국 청주, 일본 니카타와 함께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돼 200여 차례 행사와 동시 문화 홍보활동을 펼침.
- 앞으로의 계획 한중일 청소년문화사절단, 민족음악 교육 교류, 칭다오 시민 오왕예술단 등 민간 문화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임.

손정연

- 문화 교류를 통한 성공 사례로 문화도시 교류의

필요성 강조: 벨기에 이프로, 영국 리버풀 등

- 문화교류 도시의 방향성
- 문화예술 작품 교류
- 문화관광 사업
- 도시 발전과 도시 재생
- 문화복지 정책 연계 개발
- 지금까지 성과
-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지속발전 가능성 확인
-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
- 공동의 축제를 발굴해 연대와 확산(아시아송 페스티벌, 아시아의 빛 개최 등)
- 문화콘텐츠 산업 교류
- 민간 교류 확대

박철완

-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성과 젓가락페스티벌, 청주에 술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청주민속예술

제, 청원생명축제, 동아시아 창조학교 등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콘텐츠를 특화된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시킴. 지속가능한 문화 행정, 10개 중장기 사업 선정 등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 구축

이중환

- '관광 1번지, 제주에서 나아가 '문화예술의 섬' 제주 구현을 위한 노력
- 제안 사항
-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 결성과 공동의 재원 확보
-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참여자들에게 혜택 제공
- 다양한 문화 교류 방안을 마련

김철

- 문화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안 사항
- 문화 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동아시아 문화도시 정체성을 위한 공동 노력 지속성 강화
- 공동의제 개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동아시아 국가의 문화 경쟁력 개발을 위한 연구: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 지지, 상징적 의미의 한중일 문화의 날 제정
- 한중일 예술제와 협력 사업 추진
- 전통문화유산과 문화 산업은 한중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정달호

- 월드컬처오픈(WCO) 소개 언제 어디서나 있는 문화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임.
- 주요 활동 제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문화운동을 펼침. 지역사회 인재들인 컬처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질의응답]

Q.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문화 교류 사업의 장점, 매

력, 앞으로 나아갈 점은 무엇인가?

A. 이중환 한중일의 다른 문화를 교류하는 데 인어나 규모, 방법적 어려움이 있으나 교류를 통해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자국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지역주민들의 활성화 참여에 기여함.

A. 룰프 노라 문화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비전과 가치, 서로의 문화를 환대하고 이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임.

A. 김철 한중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A. 정달호 한중일 교류를 통한 역사와 현대의 만남, 다양한 문화를 콘텐츠화해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로 확대될 것이 기대됨.

A. 박철완 한중일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일이 중요함.

A. 손정연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세 나라의 애증을 문화로 풀어보자는 것임. 연대감 확산과 공동 비전을 향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A. 니시자키 미야코 문화는 다른 문화와 만남으로 더 큰 문화로 성장함.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A. 류용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참고]

한중일 문화도시 공식 사이트 개설 한중일영 4개 국어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협력 사업 공유

Keywords

동아시아 문화, 도시 문화 교류, 한중일 문화 협력, 지역문화 활성화, ECC,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럽 문화수도

...
제5장
글로벌 제주

GLOBAL JEU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 발전 방향과 인프라 조성 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회	박현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개발본부장
발표	박재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규사업TF팀장
	문대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이윤상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장
	강창석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진희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정리	김동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리

- 최근 들어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제주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 추세는 이른바 '제주 러시' 열풍을 일으키며 지역경제 호황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반면, 주택 공급난과 교통 혼잡, 환경 훼손 등을 일으키며 미래 지속 성장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향후 정주 인구 100만, 관광객 연간 2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성장 규모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함.
-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속가능 발전 방향에 대해 되짚어보고, 앞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 만들어야 할 도시 인프라라는 무엇인지와 그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촉진을 위한 전담 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함.

박재모

-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제주 개발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결과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토지·주택 가격 상승, 교통 사고 급증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함.
- 향후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주거·교통 등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 모델 정립에 더욱 관심을 높여나가야 함.

문대섭

-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대책은 교통법 체계와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성공할 수 있음.



박현철 박재모 문대섭 이윤상 강창석 이진희



- 일류 관광휴양 도시라고 하지만 제주의 교통 환경은 관광만족도 하락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 저비용 고효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바이모달 트램(Bimodal Tram) 등 다양한 신교통수단과 신교통시스템 가운데 제주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이윤상

- '국제자유도시'와 '탄소 없는 섬' 추진을 위해 친환경 광역교통시스템 도입을 가장 시급한 현안임.
- 제주도는 공항 등 주요 교통 결절점에 복합환승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광역 연계교통체계를 확립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함.

- 정시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사업비가 저렴하고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 제주의 신교통수단으로 도입하기에 적합해 보임.

강창석

-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어려워져 효율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절실한 시점임.
- 성공적인 주택정책을 위해 부동산 투기 차단은 필수 전제조건임.
- 농지 관리 강화와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등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주거복지조례 제정과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 등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이행해

야 함.

이진희

- 제주의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이란 관점에서 JDC 오션마리나시티 사업은 섬 지역의 장점을 활용해 열악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에코 사업은 해당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주민 참여도를 높여나감으로써 JDC, 투자자, 지역주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종합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과정에서 양적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제주 특성과 실정에 맞는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청정 환경 기반의 '에너지 자립형 섬'을 추구하고 관광과 휴양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국제자유도시이자 물류와 금융 인프라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국제자유도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공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임. '주거·교통·문화·자원'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편의 제고에 기여해야 함.

교통

-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광역교통시스템을 만들어 제주 지역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을 해야 함.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유선고속차량(GRT) 등 다양한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교통 환경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제주 교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함.
-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교통인프라 복합 개발 등 사업을 다각화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관광지 도로(주변, 내부)와 주차장 혼잡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한 연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도로와 관광지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광 교통수단 개발과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함.
- 관광객의 주요 동선이 되는 노선 정비와 함께 관광 교통의 환승센터로서 기능을 추가한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투어트램 건설과 운영을 추진해 나가야 함.
- 도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교통카드 사용

Keywords

국제자유도시, 제주 러시, 공공 인프라, 신교통 시스템, 주택정책, 미래 발전

실적 빅데이터를 분석해 노선을 개선하거나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복합환승센터 건설과 신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함.

-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위해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제주도, 제주시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함.

주택

- 제주 부동산시장 현황에 따른 도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
- 도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도유지, 공기업 보유 토지, 택지 개발 등 부지 활용 가능함.
- 주거복지조례 제정과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해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과 관련 정책 이행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함.

기타

- 하와이와 같은 경쟁 섬 관광지의 세계적 요트장 건설과 요트 경기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JDC 오션마리나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학여행과 단체여행 시 서부 관광 코스에 JDC 항공우주박물관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과학교육 일환으로 활용할 것.
- JDC 사업 추진은 JDC, 투자자, 지역주민의 공동 참여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 하와이 알라 모아나 쇼핑센터, 오키나와 아시아비나 아웃렛처럼 훌륭한 쇼핑 아웃렛 조성 사업에 JDC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제주 신항 개발과 관련해서 내항 부분인 워터프런트, 오션 파크, 마리나 시설, 워낙시설, 아쿠아리움, 면세점 등의 구역에 하와이 오후우 섬의 알로하 타워 마켓 플레이스, 마리노아시티 후쿠오카, 바로셀로나 항과 같은 형태의 개발사업에 JDC가 참여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아시아 물 산업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회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발표	이진명 A.T.Kearney 이사
토론	천위칭 중국 하이난성 수무청 수리관개국장 현승훈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고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산총괄
정리	현은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팀장



이진명

아시아 각국의 물 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을 분석해 제주 물 산업 성장 방향을 제시함. 특히 정부 주도적 물 산업 육성 정책과 허브 전략 추진으로 자국내 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세계적인 물 산업 강국으로 떠오른 싱가포르 사례에 주목해야 함. 이에 대한

제주의 미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제주 용천수를 중동 지역의 음용수 상수원 공급을 통한 수출 기회 발굴할 것을 제안함.
- 정주형 복합관광산업단지 육성과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제주 용암해수 기반 6차 산업 육성이 필요함.



김영철 이진명 천위칭 현승훈 고경수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퀴바디스?

- 글로벌 생수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 기회가 있음. 따라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타깃으로 한 제주삼다수의 글로벌 사업 전략이 필요함.
- 제주의 지하수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싱가포르의 지표수 관리 기술, 이스라엘의 해수담수화 기술과 적극적인 기술 교류를 통한 장기적 관점의 기술 축적으로 물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천위칭

하이난성은 중국 최남단에 있으며, 아열대해양성 기후로서 연평균 강수량은 1750mm로 충분하지만 그 분포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큼. 2000년도 하이난

성 지하수 실제 개발량은 49.2억m³로 가능 개발량의 8.14%만이 생활·공장·농업 용수 등으로 개발되었고, 현재 규산과 스트론튬이 함유되어 있는 중탄산수를 중점적으로 개발 중임. 하이난성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 개발 방향으로 지하수 유관 법규 시스템 보완, 지하수 시설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하수 보상 메커니즘 개발 필요성을 제시함.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제주의 다양한 수자원을 활용한 가치 발굴

- 청정지하수, 용천수, 용암해수를 활용해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과제 발굴이 필요함.
- 국가별 선진 기술을 교류해 물 산업 기술 축적이 필요함.

제주 지하수 수질 문제 제도적 개선

- 중산간 녹지들의 계속된 토지 변경으로 수질 오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향후 삼다수 증산과 고급화 전략을 위해서는 수질 보전을 위한 제도 보완, 보상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함.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천수의 수출 사업에 대한 검토

- 용천수 취수에 따른 환경생태계 변화 연구와 용천수의 품질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 용천수 수출은 SOC 구축 검토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함.

용암해수 사업의 산업군 확대

- 스파 테라피, 한방, 제주 특산 기능 소재 등 건강 아이템을 활용한 용암해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주형 도시 구성요소를 활용한 6차 산업 도시건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제주 물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 수립

- 삼다수의 브랜드화와 새로운 취수원 개발은 글로벌화의 전제 조건임.
- 삼다수의 품질 차별성을 확보해 브랜드 가치 향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에비앙' '볼빅' 등 글로벌 브랜드 성공 사례를 참고해 프리미엄 브랜드화 전략 수립이 필요함.

제주발전연구원

사회	이기호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발표	강진영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융합연구실장
	변병설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리	윤원수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강진영

'카본프리 아일랜드' 추진 배경

- 선진·개도국 모두 한층 강화된 기후 행동을 요하는 저탄소 시대로 국제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함.
- 5년마다 각국 감축 목표를 높여 글로벌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금세기 하반기 중 탄소중립 도달 목표에 합의함.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할 것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지자체의 역할이 대두됨.

제주도의 현황과 여건

- 인구는 198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030년 7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라 전력 사용량도 계속 늘어남.

-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나 탄소 배출이 높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임. 바람(고도 80m 연평균 풍속 6.2m/s)과 태양(연평균 일조합 1960hr) 등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함.

추진 경과

- 2012년 5월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 발표
-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3대 사업 추진.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시설 전국 최고 수준 달성
- 2016년 정부 업무 보고 시 제주 탄소 제로 섬 업그레이드 계획 반영
-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감축 대상을 확대, 다각화하고 특화된 적응 대책을 추가해 제주 탄소 제로 섬을 한국형 저탄소 성공 모델로 육성할 것임.
- 관계기관 협업을 발전·수송 외 가정·건물·폐기물 등



이기호 강진영 강희찬 김태운 박창석



변병설 이영웅

을 포함해 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할 것임.
 • 이상기후,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적응 대책을 추가해 기후 변화에 취약한 섬에서 안전한 섬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임.

제주 탄소 제로 섬 비전

- 세계가 꿈꾸는 탄소 제로 청정 섬 제주
- 목표: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글로벌 확산

전략별 추진 계획

1.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청정에너지 자립 섬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에너지 효율 개선
 - 폐자원 에너지화 확대
2. 세계 전기차 산업의 메카 조성
 -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 배터리 재활용 지원화 사업
 - 전기차 규제 프리 존 운영
3. 안전한 제주, 아름다운 생태계 보호
 - 맞춤형 기후변화 정보 제공
 -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
 - 해양·육지 생태계 자원보호
4. 자연친화형 탄소 제로의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

- 탄소 제로형 생태관광 모델 개발
 - 탄소 제로 섬 국제 파트너십 구축
 - 탄소 제로 섬 국내외 확산
5. 주민이 하나되어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전개
- 에너지 수요 관리 확대
 - 저탄소 생활 인센티브 제공
 - 저탄소 기업 문화 확산

추진 체계

- 관계 부처와 제주도 간 협업체계 구축
- 이행 점검, 관리 계획과 특별법 정비

박창석

• 기후변화 관련 범위가 넓으므로 비전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 탄소 제로 섬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노력과 관련 정책,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이영웅

• 탄소 제로 섬은 제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



는 계획임.
 • 제주도정의 선언적 의미의 계획이 아닌, 지역에 의미가 있는 접근이 중요함.
 • 2030년 전기차 37만대 교체 관련 계획이 미비함 (기존 차량 교체 여부).
 • 풍력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살펴야 함.
 • 에너지 자립에 공공성 실현과 주민 참여가 필요함.

김태운

•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은 제주에 매우 중요함. 제주는 세계의 보물섬으로 환경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된 지역임.
 • 카본프리 아일랜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추진 기구가 필요함.

강희찬

• 계획 달성을 위해 전기차 중심의 중앙정부 지원과 도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함.
 • 제주가 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비해 늦어지고 있음(특히 중국의 전기차 산업

성장).
 • 제주는 전기차 시험무대로 발전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제주가 전기를 보급해 한국 전기차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계획과 논리가 필요함.
 • 정부 차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

변병설

•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주요 요소에 대한 지표 설정이 필요함.
 • 국제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 최빈국 대상 기술 지원 등은 유익하나, 협력해야 할 국제기구를 언급할 필요 있음.

Keywords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전기차



제6장
제주포럼 이모저모

H I G H L I G H T



오프닝 공연

5월 25일 20:00~21:30, 탐라홀

공연: 폴 포츠 오페라 가수, 인순이 가수,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

참석자: 2500여 명



공식 연회

통일부장관 주최 환영만찬

5월 25일 18:30~19:50, 이벤트홀

만찬사: **홍용표** 통일부장관

건배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나경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공연: **손수경** 바이올리니스트

참석자: 830여 명





조직위원장 주최 공식만찬

5월 26일 19:00~20:20, 탐라홀
 만찬사: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건배사: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공연: 스카밴드 사우스 카니발
 참석자: 850여 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5월 27일 19:00~20:20, 탐라홀
 폐회사: 문태영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만찬사: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건배사: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공연: 전자현악결그룹 사인
 참석자: 600여 명



교류회

VIP 간담회·기념촬영

5월 26일 10:00~10:20, 오션뷰

참석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유순택 유엔 사무총장 부인,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고축통 전 싱가포르 총리,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문태영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양자회담

5월 26일 11:00~11:30, 3층 접견실

참석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리 외 20여 명



VIP 오찬

5월 26일 13:00~14:20, 오션뷰

환영사: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참석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고축통 전 싱가포르 총리,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이홍구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문태영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임성남 외교부 제차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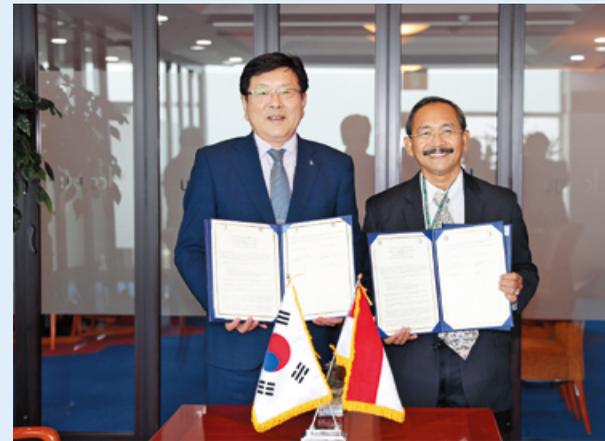
한중일 CEO 오찬 교류회

5월 26일 13:00~14:20, 한라홀
 축사: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참석자: 한중일 경영인 250여 명



한일 학생 교류회

5월 27일 17:20~18:40, 한라홀
 사회: 조우진 일본 타마대학 교수
 참석자: 일본 타마대, 제주한라대 학생 및 관계자 106명



제주대-인도네시아 발리대 MOU 체결



한중청년지도자포럼 오찬



한국국제교류재단(KF)-맨스필드재단 차세대 교류회

기자회견



한국조류학회

5월 25일 14:00~14:30, 프레스룸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5월 25일 15:10~15:50, 프레스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5월 25일 16:15~16:45, 프레스룸

문화 행사

풍낭라운지

제주포럼 영상 및 포토존
한국 전통차 다식 체험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캘리그래피와 부채 만들기 체험
매그넘 사진작가의 제주 해녀 사진전

제주 관광

관용의 평화
송악산 진지동굴 - 알뜨르 비행장 -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치유의 평화
서귀포 치유의 숲

에너지 평화
'카본프리 아일랜드' 가파도의 전기버스 체험

제주 지오파크와 꽃자왈
용머리해안 - 꽃자왈 도립공원



국가별 참가자 등록 현황 (68개국 7,436명)

국가명	인원(명)	국가명	인원(명)	국가명	인원(명)
아프가니스탄	1	그루지아	2	포르투갈	2
앙골라	2	독일	9	코트디부아르	1
호주	12	가나	3	한국	6,509
아제르바이잔	1	온두라스	5	남아프리카공화국	1
방글라데시	1	헝가리	1	러시아	7
벨라루스	2	인도	6	사우디아라비아	1
벨기에	1	인도네시아	21	싱가포르	15
부탄	1	아일랜드	1	슬로바키아	1
영국	1	이탈리아	5	스페인	2
불가리아	1	일본	177	스리랑카	5
미얀마	2	케냐	2	수단	6
캄보디아	3	쿠웨이트	2	스웨덴	2
캐나다	8	말레이시아	16	스위스	3
중국	454	몽골	7	태국	6
콜롬비아	1	네팔	3	이집트	4
코스타리카	2	네덜란드	1	트리니다드토바고	4
체코	1	뉴질랜드	5	터키	1
덴마크	3	나이지리아	1	영국	12
에스토니아	1	노르웨이	2	미국	55
에티오피아	2	파키스탄	4	우즈베키스탄	3
피지	1	파라과이	2	베트남	4
핀란드	1	페루	2	짐바브웨	2
프랑스	3	필리핀	8	총 인원	7,436



5.25 Wednesday

PROGRAM

Time	Organization	Session
13:00~13:30		등록 Registration
13:30~14:50	중앙일보 JoongAng Ilbo	[신문 콘서트 2016] 청년세대의 오늘과 내일 Media Talk Show 2016: Concerns and Outlooks of the Younger Generation
	외교부 MOFA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국제협력 Strategies and Global Cooperation for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Climate Resilient Economy
	동아시아재단 EAF	아시아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과 핵보유 유혹 Geopolitical Tensions and Nuclear Temptation in Asia-Pacific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	3국의 시각: 동북아시아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 Trilateral Views: Promoting Nuclear Safe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제주특별자치도·빅뱅엔젤스 Jeju Province-Big Bang Angels	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 The Future of Asian Startup Ecosystem
	제주국제연수센터 JITC	지속가능 관광의 투자와 재정 Sustainable Tourism Investment and Finance
14:50~15:10		휴식 Break
15:10~16:50	국가인권위원회 NHRCK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15:10~16:30	외교부·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MOFA-CLC	유엔 정보안보 GGE의 성과와 전망 The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UNGGE in Information Security
	동아시아재단 EAF	아시아태평양의 핵 안보와 안전: 오랜 쟁점과 새로운 사고 Nuclear Security and Safety in Asia-Pacific: Old Issues and New Thinking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	동아시아 관광시장의 새 지평: 3국 협력을 통한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 New Horizon for Northeast Asian Tourism: Increasing Inbound Flows through Trilateral Cooperation
	제주한라대학교 Cheju Halla Univ.	아시아-한국 간 지속가능에너지시스템 협력 방안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ustainable Energy System
	제주국제연수센터 JITC	[패널토론] 환경, 사회, 경제적 이득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관광 방안 Panel Discussion on Sustainable Tourism for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16:30~16:50		휴식 Break
17:10~18:10	제주평화연구원 JPI	'평화학 창시자' 요한 갈통 대담: 격랑의 동북아, 평화해법을 찾는다 Dialogue with Johan Galtung: Northeast Asia in Tension, Seeking for Peace
16:50~18:10	국립외교원 KND A	한반도 통일과 한미동맹의 역할 및 미래 Korean Unification and the Role and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동아시아재단 EAF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적 리더십을 향해: 이론과 실제 Toward New Cooperative Leadership in Asia: Theory and Practice
	인간개발연구원·타마대학교 KHDI-Tama Univ.	글로벌 리더십 철학, 감성과 지성의 융합 Global Leadership Philosophy, Conversion of Emotion & Intelligence
	한국행정연구원·유엔거버넌스센터 KIPA-UNPOG	정부혁신과 협력적 거버넌스 Government Innova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 Open Government
	한국조류학회 KSP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해조류 이용 전략 Strategic Approaches to CO2 Sequestration Using Harvestable Algae and Kelp Forest
18:10~18:30		휴식 Break
18:30~19:40		통일부장관 주최 환영만찬 Welcome Dinner Hosted by Minister of Unification
19:40~20:00		휴식 Break
20:00~21:30		폴 포츠·인순이 오픈닝 공연 Paul Potts-Insooni Opening Performance

세션주관기관 List of Session Organizers

외교부	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우리들의미래	COCF	Coalition for Our Common Future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국가인권위원회	NHRCK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제주국제연수센터	JITC	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동아시아재단	EAF	East Asia Foundation	월드컬처오픈	WCO	World Culture Open
중앙일보		JoongAng Ilbo	민중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CRC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제주평화연구원	JPI	Jeju Peace Institute	유엔협회세계연맹	WFUNA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국립외교원	KND A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PCD	Jeju Province Development Corpor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KF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동북아역사재단	NAH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제개발협력학회	KAIDEC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인간개발연구원	KHDI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	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일본 타마대학교		Tama University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한국경제매거진(주)		Hankyung Business	세계자연유산센터	Jeju WNHC	Jeju World Natural Heritage Center
한중지역경제학회	KCREA	Korea China Regional Economy Association	한국조류학회	KSP	The Korean Society of Phycology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FNF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대한국제법학회	KSIL	The Korea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뉴욕 뉴스쿨		The New School
유엔거버넌스센터	UNPOG	United Nations Project Office on Governanc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한국행정연구원	KIPA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빅뱅엔젤스		Bigbang Angels
제주한라대학교		Cheju Halla University	제주발전연구원	JDI	Jeju Development Institute
맨스필드재단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CLC	Cyber Law Centre

5.26 Thursday

Time	Organization	Session
09:00~10:20		등록 Registration
10:20~11:40	제주평화연구원 JPI	[개회식]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기조연설 [Opening Ceremony] Keynote Speeches on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11:40~11:50		휴식 Break
11:50~12:50	제주평화연구원 JPI	[세계지도자세션]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World Leaders Session]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12:50~13:00		휴식 Break
13:00~14:00		오찬 Luncheon
13:00~15:20	제주평화연구원·인간개발연구원·한중지역경제협회 JPI-KHDI-KCREA	한중일 경영인 교류오찬 Korea-China-Japan CEO Networking Luncheon [한중일 CEO 라운드테이블] 상호 협력을 통한 공유 가치 창출 [Korea-China-Japan CEO Roundtable]: Creating Common Value through Cooperation
14:00~15:20	동북아시아재단 NAHF	동아시아 '역사문제'와 리더십 East Asian "Historical Issues" and Political Leadership
	동아시아재단 EAF	아시아·태평양 핵 군축의 재고 Rethinking Nuclear Disarmament in Asia-Pacific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아시아경제자유네트워크 FNF-EFN Asi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치경제적 평가 Trans-Pacific Partnership: an Assessment of Its Political Economy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간네트워크 구축 전략 Building 1.5 Track Network for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유엔협회세계연맹 WFUNA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유엔의 역할 New East Asia Regional Order and the Role of the UN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동북아 해양질서와 지역협력: '협력 상승의 장' Northeast Asian Maritime Order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Looking for "Cooperation Spirals"
15:20~15:40		휴식 Break
15:40~17:00	한중지역경제협회 KCREA	한국 뷰티산업의 글로벌화 방안 The Globalization of Korea's Beauty Industry
	제주평화연구원 JPI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Ambassadors Roundtable]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동아시아재단 EAF	북한의 비핵화 – 실천 어젠다 Denuclearizing North Korea-Agenda for Action
	국립외교원 KNDA	새로운 한중일 협력관계 구축 Building a New Tripartite Cooperation of Korea, China, and Japan
	제주한라대학교 Cheju Halla Univ.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과 협력적 리더십 Cultural Diversity of Asia and Cooperative Leadership
	한국국제협력단·국제개발협력학회 KOICA-KAIDEC	한중일 개발협력의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방안 모색 Catalyzing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hip Strategies of China, Japan, and Korea
	제주대학교 JNU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17:00~17:20		휴식 Break
17:20~18:40	인간개발연구원 KHDI	윤리 경영이 세계를 바꾼다 Corporate Ethics Leads the World
	국립외교원 KNDA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동아시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East Asia
	동아시아재단 EAF	핵확산금지조약의 미래 Future of the NPT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발전 방향과 인프라 조성 방안 Future Direc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Developing Infrastructure
	한국국제교류재단 KF	한반도 통일과 국제사회: 국제 언론의 역할 Korean Unificatio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Role of International Media
	유엔거버넌스센터·한국행정연구원 UNPOG-KIPA	정책 통합: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지역화 Policy Integration and Institutional Coordination: Localizing SDGs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제주대학교 JNU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대학 Asia's New Order and Universities
18:40~19:00		휴식 Break
19:00~20:20		조직위원장 주최 공식만찬 Official Dinner Hosted by Chairman of Organizing Committee

PROGRAM

5.27 Friday

Time	Organization	Session
08:00~09:00		등록 Registration
09:00~10:00	제주평화연구원·인간개발연구원 JPI-KHDI	[특별세션 I] 조 케저 지멘스 회장 대담: 통일한국,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Special Session I] Dialogue with Joe Kaeser, CEO of SIEMENS AG: A Unified Korea Finds Its Future in Business Enterprise
09:00~10:20	대한국제법학회 KSIL	최근 영토, 해양법 관련 국제 판례와 동아시아: 향후발전과 과제 Recent Decisions on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Boundary Issues and East Asia: New Challenges and Development
10:00~10:20		휴식 Break
10:20~11:20	제주특별자치도·제주평화연구원 Jeju Province-JPI	[특별세션 II] 테슬라 모터스 공동창업자 J.B. 스트라우벨에게 듣는다: 전기차가 몰고 올 생활혁명 [Special Session II] J.B. Straubel, CTO of Tesla Motors Talks: Revolutionary Changes EVs will Bring to Our Lives
10:30~11:40	대한국제법학회 KSIL	제2차 세계대전 관련 미해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 모색 Seeking a New Forum for the Remaining Issues from the Second World War
11:20~11:40		휴식 Break
11:40~13:00	제주특별자치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Jeju Province-KCRC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 I Possibilities and Conditions of East Asia Peace Community I
	인간개발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래숲 KHDI-KEITI-Future Forest	한중 환경과학기술 협력 전망 Prospects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동아시아재단·(사)우리들의미래 EAF-COCF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Climate Change and Renewable Energy
	제주평화연구원 JPI	[전직 외교장관 초청 간담회] 동북아 신질서와 한국 외교의 과제 [Former Foreign Ministers Meeting]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Diplomatic Tasks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UNGC	여성역량강화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Women's Empowerment and Corporate Sustainability
11:50~13:00	대한국제법학회 KSIL	동아시아 대테러 대응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International Law Aspects of Countering Terrorism in East Asia
13:00~14:00		오찬 Luncheon
14:00~15:20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컬처오피 Jeju Province-WCO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내가 꾸는 꿈 What I Dream of for Our Berrer Future
	동아시아재단 EA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가속화하고 아시아개발은행과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Can AIIB Expedite the RCEP and be Compatible with ADB?
	한국국제교류재단·맨스필드재단 KF-Mansfield Foundation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와 한미일 협력의 역할 Asia's New Security Order and the Role of the ROK-Japan-U.S. Relationship
	제주평화연구원 JPI	미중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U.S.-China Relations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제주특별자치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Jeju Province-KCRC	동아시아 녹색평화협력의 새로운 모색 A Search for New Green-Peace Cooperation in East Asia
	한경비즈니스 Hankyung Business	한국경제의 미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I The Future of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Capital Markets I
15:20~15:40		휴식 Break
15:40~17:00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컬처오피 Jeju Province-WCO	세계적인 예술로 승화되는 제주다움을 찾아서 Searching for the Very Aspects of Jeju Arts and Culture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컬처오피 Jeju Province-WCO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교류활성화 방안 토론 Building a Creative Partnership among East Asian Culture Cities
	동아시아재단 EAF	중견기업과 공공외교의 재고: 기회와 제약 Rethinking Middle Power and Public Diplomacy: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한국해양과학기술원 Jeju WNHG-KIOST	아태 지역 화산지형·해양환경 세계자연유산 발굴과 보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Cooperation for the Recognition and Conservation of Potential World Natural Heritage Sites in Asian-Pacific Regions
	제주평화연구원 JPI	동아시아 국제관계, 이론과 실천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제주특별자치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Jeju Province-KCRC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 II Possibilities and Conditions of East Asia Peace Community II
	한경비즈니스 Hankyung Business	한국경제의 미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II The Future of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Capital Markets II
17:00~17:20		휴식 Break
17:20~18:40	동아시아재단 EAF	동북아시아의 전략 외교 Strategic Diplomacy in Northeast Asia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PCG	아시아 물 산업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 Today's Water Industry in Asia and Directions for Tomorrow
	제주평화연구원·뉴스쿨·남양공과대학교 JPI-The New Silk School-RSIS	신자유주의시대 이전의 세계화: 실크로드와 아시아 Globalization before Neoliberalism: The Silk Roads and Global Asia in the Ancient World
	제주발전연구원 JDI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퀴바디스? Carbon-Free Island, Jeju, Quo Vadis?
	인간개발연구원·한중기술플랫폼 KHDI-Korea-China Technology Platform	환경기술 교류를 통한 한중 성공 비즈니스 협력채널 구축 제안 Korea-China Business Channels to Success in Environmental Technology
18:40~19:00		휴식 Break
19:00~20: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Farewell Dinner Hosted by Chairma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PROGRAM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6
결 과 자 료 집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인쇄 2016년 7월 15일

발행 2016년 7월 15일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등록 제 652-2008-00002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우) 63546

전화 064-735-6533

팩스 064-738-6539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디자인·제작 DesignZoo

© 제주포럼 사무국

ISBN 978-89-93764-10-9 93340

< 비매품 >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635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064-735-6533 Fax 064-738-6539 Email jejuforum@jpi.or.kr Website www.jejuforum.or.kr

Facebook www.facebook.com/jejuforumpp Blog <http://blog.naver.com/jejuforum>

〈 비매품 〉



9 788993 764109

9 3 3 4 0

ISBN 978-89-93764-10-9